

발간등록번호

34-9761099-220020-14



제20대 대통령선거 정책 공약 모음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선거가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에 참여한 각 정당의 중앙당이 제출한 10대 정책을 정책공약마당(<http://policy.nee.go.kr>)를 통해 공개하였으며, 정당들의 지속적인 정책개별 활동을 촉진하여 정책선거를 정착시키기 위해 정당 정책 모음집을 별간하게 되었습니다.

Contents

더불어민주당	1
국민의힘	25
정의당	47
국민의당	69
기본소득당	91
국가혁명당	113
노동당	127
새누리당	149
새로운물결	159
신자유민주연합	181
우리공화당	193
진보당	215
통일한국당	239
한류연`합당	251

제20대 대통령선거 정당정책 모음집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No.	정 책
1	코로나 팬데믹 완전극복과 피해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지원
2	수출 1조 달러,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 주가지수 5000으로 세계5강 달성
3	경제적 기본권 보장, 여성안심 평등사회, '청년기회국가' 건설
4	311만호 주택공급으로 내집마련·주거안정 실현, 함께 잘 사는 균형발전
5	어르신, 환자, 장애인, 아동, 영·유아 돌봄 국가책임제, 국민안심국가 실현
6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과 일자리 대전환으로 성장하는 사회 실현
7	과학기술 5대 강국 실현과 미래인재 양성,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대전환
8	문화강국 실현과 미디어산업 혁신성장
9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추진, 국민 주권 실현을 위한 정치개혁과 사법개혁
10	스마트강군 건설, 실용외교로 평화안보 실현

정책순위

1

코로나 팬데믹 완전극복과 피해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지원

정책분야 국가 과제

□ 목 표

- 코로나 팬데믹 완전 극복, 피해 소상공인 피해 완전 극복

□ 이행방법

- 코로나 팬데믹 완전극복을 위한 대응 강화
 - 오미크론 등 변이종 확산 대응하는 총력체제 강화
 - 백신과 치료제 확보, 의료보건의료 체계 구축에 대한 충분한 재정투입
 - 공공병원을 충분히 확보하여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 국내개발을 통한 백신/치료제 주권확보와 필수약품 공공 생산 체계 구축
 - 국산 코로나 백신, 치료제 개발 끝까지 지원
 - 필수예방접종의약품 자급화 실현을 위한 국가지원체계 구축
 - 코로나백신 치료제 개발 지원 등을 통한 바이오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보상과 매출회복 지원
 - 코로나 발생시점부터 완전극복 시점까지의 피해에 대한 온전한 보상과 지원
 - 한국형 PPP제도 도입으로 고정비 피해에 대한 온전한 지원 추진
 - 소상공인 자영업의 매출 회복 지원을 위한 지역화폐, 소비쿠폰 발행 확대
- 소상공인·자영업자 신용회복 지원 채무부담 경감
 - 코로나 피해로 인해 연체 및 연체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조정
 - 방역조치로 인한 경영위축으로 인해 발생한 신용등급 하락을 회복하기 위한 신용대사면 조치 단행

□ 이행기간

- 코로나 팬데믹 완전 극복 시점
- 백신과 치료제 성공 그리고 수출 경쟁력 확보시점

▣ **재원조달방안**

- 국비 및 지방비, 긴급 추경 편성

정책순위

2

수출 1조 달러,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 주가지수 5000으로 세계5강 달성

정책분야 경제, 산업

□ 목 표

- 수출 1조 달러,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 주가지수5000으로 세계 5강의 종합국력 달성

□ 이행방법

- 전환적 공정성장과 산업혁신으로 수출 1조 달러,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 주가지수 5000 달성
 - 주요 전략산업의 혁신 고도화 총력 지원
 - 빅10 프로젝트, 소부장 3.0 지원을 통한 혁신 선도형 산업구조 구축
 - 자본시장 활성화, 모태펀드 10조원 확충, 창업연대기금 1조원 조성, 유니콘기업 100개 육성
 - 신기술·신산업에 대한 금융·세제지원 확대, 과감한 규제개혁
 - 신남방, 신북방 경제권에서의 기회 확대
 - 인터넷 플랫폼 가상공간에서의 경제역량 제고
- 성공적 디지털 대전환으로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
 - 디지털 기술의 전 산업분야 융합으로 제조업과 디지털 경제 혁신
 - 블록체인, 양자정보통신기술, 6G 등 기술 개발 강화와 가상융합기술 활성화
 - 국비 85조원 등 135조원의 디지털 전환 투자로 200만 개 일자리 창출
 - 디지털 미래 인재 100만 양성 및 디지털 포용 국가 구현
- 에너지 고속도로와 제도개혁으로 에너지 대전환 기반 마련
 -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30% 달성을 위한 입지확보
 - 재생에너지 생산·유통·판매가 자유로운 통합형 에너지 시스템 구축
 - 온실가스 다배출업종의 탈탄소 전환지원 강화 및 녹색산업 육성
 - 취약산업 종사자 전환 지원 확대
- 모빌리티 대전환과 친환경 탄소중립에 대응하는 국가교통전략 수립
 - 도로, 항공 중심의 교통 체계에서 철도 교통 체계로의 대전환
 -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 등 미래형 모빌리티 인프라 구축 및 상용화 지원

- 사업용 차량의 전기·수소차 전환 및 인프라 확충 지원
- ◎ 자본시장의 공정성 회복
 - 주가조작 근절, 공모주·공매도 차별금지 등 주식시장 불공정 개선
 - 대주주·경영진 등의 탈법이나 횡포 등을 차단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통한 소액주주 보호
 - 가상자산 제도화로 투자자 보호 강화 및 공개(ICO) 허용 추진

▣ 이행기간

- ◎ 2023년부터 관련 법 개정 등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추진

▣ 재원조달방안

- ◎ 국비 및 지방비, 민간투자 자금 활용

정책순위

3

경제적 기본권 보장, 여성안심 평등사회, '청년기회국가' 건설

정책분야 경제, 여성, 청년

□ 목 표

- 국민의 경제적 기본권 보장
- 여성이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 실현
- 공정과 성장의 청년기회국가 건설

□ 이행방법

- 전 국민 보편기본소득 추진
 -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 공론화 거쳐 국민 의사 수렴해 시행
 - 연 25만원으로 시작해 임기내 연 100만원을 목표로 추진
- 대상별 부분기본소득과 수당 지급
 - 2023년부터 만 19~29세 청년에게 연 100만원 지급
 - 청년·문화예술인·농어촌 기본소득, 아동·청소년·장년 수당
- 기본대출, 기본저축제도 도입
 - 20~30대 청년부터 최대 1,000만원 저리 대출
 - 예금 금리보다 높은 기본저축 도입
- 차별없는 공정한 일터 구현
 - '고용평등임금공시제' 도입 및 성별 임금격차 해소 계획 수립
 - 채용 성차별 사업장 신고·감독 강화 및 고용평등 전담 근로감독관 확충
 - 소규모 사업장 성희롱·성차별 피해자 지원
 - 공적연기금의 ESG 투자에서 성평등 관점 고려
- 여성이 불안하지 않고 모두가 안전한 사회 실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무관용 원칙 적용, 친족 성폭력 처벌 강화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제도 강화

- 디지털성범죄 전담수사대 설치 및 광역별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센터 설치
 - 변형카메라 관리 강화 및 딥페이크 음성·영상에 표시의무제도 도입
 - 데이트폭력 처벌법 제정
 - 스토킹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 및 온라인 스토킹까지 스토킹 범죄 유형 확대
 - 성폭력 범죄의 양형 감경요소 개선 및 성폭력 2차 피해 보호 강화
- ◎ 남녀 모두 안전하고 건강한 성·재생산의 권리 보장
 -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건강의학과’로 변경
 - 공공산후조리원 전국 광역 단위 확충 및 산후조리원 시설·서비스 표준화
 - 모든 청소년 HPV 백신 무료 접종, 여성 청소년 생리대 구입비 지원
 - 난임 시술 약제비 급여화, 난임부부 정서적 지원 강화
 - 피임 시술 등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 ◎ 청년의 내집마련 및 주거안정 실현
 - 신규 주택 공급 물량 30% 청년 우선 배정
 - 용산공원 일대 10만 호 전량 청년기본주택 공급
 - 청년 등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LTV 최대 90%까지 인정
 - 원룸·다가구·다세대 주택 등 임대시장 불공정행위 근절
- ◎ 청년 기본권 보장을 통한 청년기회국가
 - 청년 기본소득·기본금융·기본주택 확대 공급
 - 위기 청년 및 구직 단념 니트(NEET) 등 촘촘한 맞춤형 청년복지 제공
 - 대학 비진학 청년 교육비 국가 지원
 - 청년이 직접 청년정책을 결정하고 참여하는 청년정부, 청년특임장관 임명
- ◎ 농어민도 행복한 농어촌
 - 농어촌 기본소득 1인당 100만 원 이내 지급, 직불제도 확대
 - 농어업인 안전 보험·재해보험 강화
 - 여성 농민 특수건강검진 확대
 - 채소가격 안정제 확대 개편으로 최저가격 실질적 보장

□ 이행기간

- ◎ 2022년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공론화 및 제도정비 후 추진
- ◎ 2022년부터 관련 제도 마련 후 추진

▣ 자원조달방안

- 국비 및 지방비, 민간투자 자금 활용
- 보편 기본소득은 토지이익배당과 탄소 배당을 재원으로 추진
- 주택도시기금(재정 포함), 입주자 및 주택사업자, 민간투자 자금 등으로 충당

정책순위

4

311만호 주택공급으로 내집마련·주거안정 실현, 함께 잘 사는 균형 발전

정책분야

부동산, 균형발전

□ 목 표

- ◎ 311만호 주택공급으로 집값 안정 및 내집마련의 꿈 실현, 서민주거안정
- ◎ 서울-지방, 수도권-비수도권이 함께 잘사는 균형발전 실천

□ 이행방법

- ◎ 청년과 무주택자,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꿈 실현
 - 전국 311만호(서울 107만호) 주택 신속 공급으로 집값 안정
 - 저렴한 비용, 장기간 거주, 고품질의 기본주택 140만호 공급 : 분양형은 건물분양형, 지분적립형, 누구나집형, 이익공유형 등 맞춤형 공급
 - 공공택지 원가공급,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 공개로 '반값 아파트' 공급
- ◎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 신속협의회제 도입, 500% 용적률인 4종 주거지역 신설
 -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합리적 개선
 - 노후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세대수 증가, 수직증축 허용
 - 노후 신도시(1기신도시) 특별법 제정으로 재건축과 리모델링 활성화
- ◎ 국민 세부담 완화
 - 공시가격 제도 개선 등으로 재산세, 종부세, 건보료 부담 완화
 - 일시적 2주택자, 비투기 목적 주택 종부세 부담 완화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확대
 - 공제율 상향, 5년간 이월공제 허용 등 월세 공제 확대
- ◎ 주거취약계층 주거복지 강화
 - 장기 공공임대주택 10% 목표로 확대 추진
 - 청년 기본주택과 노약자 지원주택 공급
 - 아동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별 주거지원 확대

- 전 국토의 균형성장 추진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방분권위원회 기능 강화
 - 전국을 초광역 단위의 산업-현안 중심의 5개의 서울(메가시티)과 3개의 특별자치도로 특화발전
 -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하여 혁신도시 완성
 - '강호축'(강원~충청~호남)을 국토균형발전의 또 다른 중심축으로 발전
 - 지방 대학교육 혁신, 농산어촌 교육, 의료, 문화 여건 개선
 - 국세와 지방세 비율 6 : 4 목표로 추진하여 재정분권 강화
 - 자치경찰제 기능과 역할 확대
- 남부수도권 조성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
 - 남부권에 산업과 일자리를 통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경제 수도권 조성
 - 독립 도시국가에 준하는 혁신 거점도시인 '신산업 특화수도'를 2곳 이상 조성
 - 가덕 신공항, 새만금 신공항, 수소트램, 영호남을 연결하는 고속철도 등 교통인프라 확충
- 지역투자 촉진, 전략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투자 촉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및 지역 대표산업 발굴과 지원
 - 지역의 스마트 그린산단과 주변도시를 묶어 일과 삶이 공존하는 복합산업공간으로 조성
- 소멸위기 지역에 대한 특별한 정책 마련
 - 소멸위기지역에 대한 지방정부의 지원과 중앙정부의 위기대응 기능을 통합한 대통령 직속 지방상생발전위원회 설치
-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
 -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추진
 -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행정부 추가 이전 추진

□ 이행기간

- 임기 내 법적 토대를 완성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한 균형발전 모색

□ 재원조달방안

- 국비 및 지방비, 민간투자 자금 활용
- 주택도시기금(재정 포함), 입주자 및 주택사업자, 민간투자 자금 등으로 충당

정책순위

5

어르신, 환자, 장애인, 아동, 영·유아 돌봄 국가책임제, 국민안심 국가 실현

정책분야 복지, 안전

□ 목 표

- 어르신, 환자, 장애인, 아동, 영·유아 5대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완성과 국민안심 국가 실현

□ 이행방법

- 어르신 돌봄 국가 책임 강화로 고령화 대응
 - 현재 소득 하위 70%인 기초연금 대상을 더 많은 어르신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
 - 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 및 일하는 어르신 국민연금 깎지 않고 지급 추진
 - 방문간호, 재택의료 서비스 확대 등 어르신 요양 돌봄 서비스 강화
 - 치아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 어르신 주치의제 확대
 - 어르신 일자리 80만 개에서 140만 개로 확대, 공익형 일자리 100만 개 확충
- 환자 돌봄의 국가 책임 강화로 가족부담 경감
 - 방문간호 및 방문 의료 서비스 전국 확대 등 어르신 요양 돌봄 서비스 강화
 - 환자와 가족 맞춤형 제도 개선을 통해 간호·간병 통합 돌봄 강화
- 장애인 돌봄의 국가 책임 강화로 자립 지원
 - 상시 서비스 체계 구축 등 장애인 돌봄 서비스 강화
 - 유니버설 디자인 공공부문부터 확대
 -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장애인 예산 증액
 - 소득하위 70% 모든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 연금 지급
 - 장애(아동)수당 소득하위 70%까지 단계적 확대
- 아동, 영·유아 돌봄의 국가 책임 강화로 저출생 대응
 - 초등 돌봄서비스 강화 및 지역사회 아동돌봄 존 구축
 -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비율 하향과 공간 확대 등 영유아 보육서비스 강화
 - 육아휴직 급여액 현실화, 부모쿼터제·자동육아휴직등록제 도입
 - 지역사회통합 돌봄 체계 구축 등으로 저출생·고령화에 효과적 대응

- 아동·청소년 중증 아토피 치료 등 건강보험 적용 확대
- 촘촘한 소득보장체계
 -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년수당, 아동·청소년수당, 기초생활보장 등의 보장성 확대
 - 상병수당 등 신규 소득보장제도 도입
- 사회적 요구 반영 보장성 확대
 - 탈모 치료, 치아 임플란트, 아동·청소년 중증 아토피 치료 등 건강보험 적용 확대
- 1인 가구·한부모 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삶 존중
 - 행복마을관리소 모델 확대로 1인 가구 지원 강화
 - 여성 1인 가구 주거 안전시설 지원 확대
 - 돌봄·의료·장례 영역에 연대관계 등록제 도입 및 임의 후견제도 활성화
 - 한부모 가족 양육비 국가 대지급제 도입
 - 한부모 가족증명서 발급 소득 기준 폐지, 아동 양육비 지급 대상 소득 기준 상향
-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에 대한 예우 강화
 - 공무원 등의 공무수행 중 부상·질병에 대한 공상추정제도 도입
 - 경찰, 소방, 해경 직군을 공안직 보수체제로 편입
 - 소방관의 건강과 복지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통한 국민안심국가 건설
 - 범죄경력자 관리·감독 강화하여 흉악범죄 재범률 하향
 - 범죄 피해자에 대한 효율적 지원을 위한 전담 기구 설치 및 보호 기금 확충
 - 빅데이터·AI 등 첨단기술 활용 및 경찰 전담 인력 확대로 보이스포싱 박멸
 - 자율방범대 등 민·관·경 유기적 협력을 통한 생활안전 역량 확충
- 자연 및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건설
 - 국가적 재난으로 인한 대규모 손해 배상 및 보상을 위한 국가재난기금 설치
 - 통합 기상재난예보 시스템 구축, 유해 물질 위협으로부터 국민건강 지킴
 - 홍수피해 국가 차원 예방, 생활밀착형 미세먼지 관리 체계 구축
 - 안전한 수돗물, 합리적인 공급시스템 구축, 4대강과 지류·지천 자연성 회복
 - 해양쓰레기 감축, 유통시설 개선으로 국민 안심 수산물 제공
 - 보행자가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
 - 플라스틱 제로 사회 구현, 폐기물 수거 및 처리 체계 공공책임 강화
-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과 안전 보장
 - 임산부 친환경 꾸러미 공급, 어린이 과일 간식 및 취약계층 농식품 바우처 사업 확대
 - '긴급끼니 돌봄' 제도 도입

- 어린이집과 군대, 복지시설에 공공급식 체계 확대
- 유전자 변형 농산물(GMO) 완전 표시제 도입

▣ 이행기간

- ◎ 2022년부터 관계 법률 제·개정하여 단계적 추진

▣ 재원조달방안

- ◎ 국비 및 지방비, 건보재정 등 활용

정책순위

6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과 일자리 대전환으로 성장하는 사회 실현

정책분야 노동, 일자리

□ 목 표

- 일하는 사람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회 실현
- 일자리대전환으로 성장하는 사회 실현

□ 이행방법

- (가칭)‘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 노동자든 자영업자든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하는 권리를 명시
-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 안전망 구축
 - 전 국민 고용보험 조기 실현 및 일하는 사람의 출산휴가·육아휴직 보장
 - 일하는 사람의 노동 안전 체계 구축 및 전 국민 산재보험 실현
 - 주 4.5일제 단계적 실시 등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
- 노동관계법상 권리 보장 강화
 -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상 보호대상의 단계적 확대
 - 상시적 지속 업무의 정규직 고용원칙 확립 및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 지역 밀착형 노동지원센터 및 지역노동복지기금, 노동회의소 등 노동조합 미가입 노동자 권리보호 지원 확대
 - 고용·노동정책 수립 시 노·사의 실질적 참여 보장
- 공정 일자리 정책으로 정책체계 개편하고 300만 개 일자리 창출
 - ‘일자리전환기본법’을 제정, 일자리위원회를 ‘일자리대전환위원회’로 개편
 - 디지털, 에너지, 사회서비스 대전환을 통해 300만개 일자리 창출
 - 기업 주도의 일자리 성장 촉진
 - 기업전환, 노동전환, 지역전환을 아우르는 일자리 전환체계 구축
 - 기획재정부 개편 시 일자리 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 각종 일자리 지원센터를 통합적으로 운영 추진

- 미래전략산업 육성과 기업도시 2.0 프로젝트로 혁신형 지역 일자리 창출
- 청년 고용률 5%p 향상 추진

▣ 이행기간

- ◎ 권리보장기본법 제정, 노동안전체계 구축 및 전국민산재보험, 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마련 노동관계법상 권리보장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 자원조달방안

- ◎ 국비 및 지방비
- ◎ 고용·산재보험은 기금운영의 효율성 확보 및 일반재정 등 투입

정책순위

7

과학기술 5대 강국 실현과 미래인재 양성,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대전환

정책분야 교육, 과학기술

□ 목 표

- 전환시대를 선도할 인재양성으로 과학기술 5대 강국 실현
- 미래인재 양성과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대전환

□ 이행방법

- 디지털 인재 양성 및 직업·평생교육 체제 전환
 - 초·중·고·대학 디지털 역량 교육 강화, 온라인 교육 통합플랫폼 구축
 - 신산업 중심 직업교육체제로 전환
 - 평생학습계좌제 도입과 시민대학 플랫폼 운영
- 공교육 국가 책임 강화와 기본학력 보장
 - 유치원·어린이집 단계적 통합
 - 초등 3시 하교 및 돌봄 7시 확대
 - 기본학력 보장 및 행복한 지역학습일 도입
- 입시공정성 강화와 대학체제 전환을 통한 새로운 고등교육 생태계 구축
 - '대입공정성위원회' 설치, 대학서열구조 완화
 -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혁신공유대학 체제 구축 및 대학도시건설
- 전환 시대를 선도할 과학기술 인력 양성
 - 국가 과학기술 연구 및 산업현장의 인적 수요·공급 균형의 안정성 확보
 - 청년과학기술인 지원 강화
 - 여성과학인 경력단절 극복을 위한 전국단위 연구플랫폼 구축
- 과학기술 5대강국 진입과 기술주권 확립
 - 국가 연구개발을 책임지는 과학기술혁신부총리제 도입
 -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우주항공 등 10대 대통령 프로젝트 (big 10프로젝트)추진

- 과학기술 연구자 중심의 연구환경 조성

▣ 이행기간

- ◎ 2022년부터 관련 법 개정 등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추진

▣ 재원조달방안

- ◎ 국비 및 지방비, 시도교육청 재정, 필요한 경우 민간투자도 유치

정책순위

8

문화강국 실현과 미디어산업 혁신성장

정책분야 문화, 정보통신

□ 목 표

- 문화 콘텐츠 세계 2강 국가 도약, 미디어 산업 혁신성장 지원

□ 이행방법

- 문화콘텐츠 세계 2강, 관광·스포츠로 행복한 국가
 - 국가예산 대비 문화예산 2.5% 확충과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100만원 지급
 - 문화도시 확대, 3501 문화마을 조성과 청년 마을예술가 국가 고용
 - 신남방·신북방 한류프로젝트, K-콘텐츠밸리 조성
 - 해외 한글교육기관 신규 설치 및 지원
 - 스포츠포인트 제도 도입, 체육인 공제회 설립, 스포츠 클럽 활성화
 - 국민 여가관광권 추진, 스마트관광 인프라 구축, 지역 강소 관광기업 육성
-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사회
 -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 등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 완화
 -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개식용 금지 추진'
 - 동물 학대 예방·재발 방지 추진
- 비대면 시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 전 국민 휴대폰 데이터 안심요금제 도입, 병사 요금 할인 20%에서 50%로 확대
 - 전국 3만여대 버스 5G공공와이파이 확대 설치
 - 5G기반 지하철 와이파이 광역 지하철(공항철도 포함) 전체로 확대
- 미디어 창작자 및 스타트업 위한 혁신 정책 추진
 - 1인미디어 창작자 및 스타트업 교육 지원
 -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들의 제작 역량 강화
 - 지역·중소 방송 활성화 적극 지원

- ◎ 방송영상콘텐츠 강국 도약을 위한 혁신성장 기반 구축
 - 국내 OTT 콘텐츠 활성화 지원과 공정 경쟁환경 조성
 - 방송영상콘텐츠의 가치를 정상화해 유료방송 콘텐츠 시장 활성화
 - 방송영상콘텐츠 및 플랫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이행기간

- ◎ 2022년부터 관련 법 개정 등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추진

▣ 재원조달방안

- ◎ 국비 및 지방비, 민간투자 자금 활용

정책순위

9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추진, 국민 주권 실현을 위한 정치개혁과 사법개혁

정책분야 정치, 사법

□ 목 표

- 정치와 사법개혁을 통해 국민주권을 실현하고 국민의 기본권 강화

□ 이행방법

- 새로운 기본권 명문화와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단계적 개헌 추진
 - 생명권, 안전권, 주거권, 건강권, 자기결정권, 알권리 등 새로운 기본권 명문화
 - 자치 분권, 균형발전 확대 명문화
 - 시민사회와 정치권이 함께하는 ‘국민통합추진위원회’ 구성
 -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책임총리제 실질적 운영, 부총리 정책조정 기능 활성화
 - 진영·출신지역·학벌을 넘어서 능력과 실력 중심으로 통합정부 국민내각 구성
 - 성별과 연령을 고려한 통합정부 균형내각 구성
- 일하는 국회,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국회
 -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추진 및 무노동 무임금법 도입
 -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의원 징계 심사 신속처리
 - 비례대표 확대 및 위성정당 설립 금지
 - 청년들의 정치 참여와 도전 지원, 주민참여제도 활성화
- 검찰개혁 완성과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보호 강화
 - 인권정책에 관한 기본법, 수사절차법 제정
 - 수사·기소 분리, 전관예우 근절 등
- 국민 중심의 재판·법률 조력 서비스 실현
 - 사법행정의 선진화, 상고제도 개선
 - 사법절차의 신속성·투명성·편의성 강화
 - 국민참여재판 확대, 전문법원 확대

▣ 이행기간

- ◎ 2022년부터 법률 개정 등 제도를 정비하고, 신규사업은 2023년부터 예산 반영 추진

▣ 자원조달방안 등

- ◎ 국비 및 지방비 활용

정책순위

10

스마트강군 건설, 실용외교로 평화안보 실현

정책분야 국방, 통일, 외교

□ 목 표

- 스마트 강군, 국익중심 실용외교로 한반도 비핵화 실현, 평화체제 제도화

□ 이행방법

-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로 스마트 강군 건설
 - 핵·WMD 대응 억제역량 강화, 원자력추진잠수함 건조 및 우주사령부 창설 추진
 - 육·해·공 현행 3군 체제에서 해병대 독립 준4군 체제로 개편 추진
 -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중에서 선택하는 '선택적 모병제' 도입
 - 병사월급 최저임금 준용하여 2027년까지 200만원 이상 인상
 - 군 식당 민간인 직고용을 통한 군 급식 질 획기적 개선
 - 군 사관학교 성별 제한선발 제도 개선
-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 미중 경쟁을 국익 증진의 기회로 활용하는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외교 전개
 - 한미동맹의 포괄적 동맹 발전 실현
 - 한중간 실질 협력 증진 및 한반도에서 중국의 긍정적 역할 유도
 - 정경분리 투 트랙 기조의 실용적 한일관계 구축
 - 주변 4강을 넘어 다양한 국가와의 외교 영토 확대
 - 공정·포용의 동아시아 질서 구축
 - G5 국가 비전을 뒷받침할 통상과 경제안보 외교를 강화
 - 포스트코로나 신질서 대응 새로운 외교플랫폼 구축
 - 국력에 맞는 국제개발협력 전개, 청년들의 국제무대 진출 지원
 -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및 재외동포청 설치, 해외 한인 교육 지원
-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제도화
 -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제도화를 위한 실질적 진전 구축: 스냅백(약속위반시 제재복원)과 단계적 동시행동, 국제협력강화, 신뢰조성 및 적대해소를 통한 협상 여건 조성

- 첨단산업 중심의 한반도 평화경제 대전환 추진: 접경지역 글로벌 평화경제 클러스터 조성, 글로벌 공급망 남북협력 추진
- 국민과 함께하는 남북협력 추진: 국민공감 대북정책 제도화, 청년세대 남북 교류협력 추진

▣ 이행기간

- ◎ 2022년 국방혁신 기구 설치 등
- ◎ 2023년~2027년 ODA 예산 증액

▣ 재원조달방안

- ◎ 중앙정부의 일반 재정 활용
- ◎ 국방비 조정(전력운영비, 방위력개선비 합리화 등) 및 증가분 내 조달

제20대 대통령선거 정당정책 모음집



국민의힘

국민의힘

No.	정 책
1	코로나 극복 긴급구조 및 포스트 코로나 플랜
2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
3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250만호 이상 공급
4	스마트하고 공정하게 봉사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과 대통령실 개혁
5	과학기술 추격국가에서 원천기술 선도국가로
6	출산 준비부터 산후조리·양육까지 국가책임 강화
7	청년이 내일을 꿈꾸고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사회 - 여성가족부 폐지
8	당당한 외교, 튼튼한 안보
9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과 원전 최강국 건설
10	공정한 교육과 미래인재 육성, 모두가 누리는 문화복지

정책순위

1

코로나 극복 긴급구조 및 포스트 코로나 플랜

정책분야 재정·경제·복지

□ 목 표

- 재정자금 확보해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
 -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비례해 지원
 - 국세청과 지자체 보유 행정자료를 근거로 지원액 절반 먼저 지원하는 선보상제도 시행
- 방역조치 기간 손실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및 손실 보상 사각지대 해소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회복과 유지 위한 심리상담 디지털 치료제 무상 지원
- 주기적 팬데믹 대응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건보급여체계에 정책 수가 신설하고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실현

□ 이행방법

- 긴급구조 프로그램 가동을 위한 법률 제정 및 개정 (인수위에서 일괄 제출)
- 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를 취임과 동시에 설치하여 긴급구조 프로그램을 즉시 가동
- 감염병 종식 후 2년간 피해 지원 및 극복을 위한 모니터링 지속
-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2022년)

□ 이행기간

- 취임 즉시 긴급구조 프로그램을 가동하여, 감염병 종식 후 2년까지 지속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공약 재원조달은 개별 제도가 아닌 전체 규모를 조달하여 배분

- 조달수단별 우선순위는 먼저 지출효율화(재량지출 감축, 성과를 반영한 조정 등)를 추진
- 재정지출시기와 조달시기의 불일치 발생 시, 지출시기를 조정하고, (단기적)국가부채를 탄력적으로 활용

정책순위

2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

정책분야 재정·경제·복지

□ 목 표

- 성장-복지-일자리 선순환 구조 및 일자리 창출 생태계를 조성하여,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를 창출

□ 이행방법

- 정부의 정책목표를 좋은 일자리 창출에 두고, 산업정책, 교육정책, 노동정책, 복지정책 등 제반 경제사회정책을 연계 추진
- 사회서비스 추진체계 개편
 - 1) 일자리 창출 패러다임 전환
 - 규제개혁 전담기구 통한 규제 혁신으로 기업투자 활성화
 - 산업화시대의 규제는 디지털 전환시대의 일자리 창출을 방해
 - 고용친화적 환경조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
 - 근로시간 등 노사자율 결정분야 확대, 연공급 임금체계를 유연하고 공정한 세대상생형 임금체제로 개선, 합리적 노사관계의 정립
 - 2) 기업 성장에 의한 민간주도 일자리 창출
 - 스타트업이 강소기업으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과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제, 자금 지원, R&D 기술 지원, 디지털 전환 지원 강화
 - 국제경쟁력이 있거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
 - 기존의 R&D방식을 기업-정부-대학 간 R&D 삼각협력 체제로 개편하여 기술창업 활성화 및 스타트업 집중 지원
 - 고용 효과가 큰 비대면, 의료, 문화콘텐츠 분야의 벤처기업을 집중지원하여 국제경쟁력이 있는 강소기업,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
 -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서 가해지는 규제를 유예하거나 폐지하여, 기업의 성장 동기를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
 -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 축소되는 혜택은 일정 기간 유예

- 국내외 글로벌 선도기업의 첨단투자유치에 과감하고 포괄적인 지원 제공

3)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 보건, 복지, 고용, 돌봄 등 사회서비스 복지 확대와 사회서비스 품질 고도화로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활성화
 - 전 생애 주기 다양한 신규서비스 수요 발굴과 이용계층의 점진적 확대
 - 사회서비스 디지털 고도화 및 복지기술(well-tech) 기반의 서비스 전환과 관련 인력 확충
 - 사회서비스 공급기관 다원화 및 사회서비스 인력 처우개선

4) 든든한 일자리 이어주기

- 고용서비스 혁신을 통한 일자리 매칭 고도화
- 기업이 필요로 하는 숙련인력의 원활한 공급
 -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인재양성 시스템 구축
 - 교육훈련체제 혁신으로 현장 중심 맞춤형 인재 양성
- 전 국민의 생애단계별 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으로 취업 역량 향상
- 고용서비스, 직업훈련, 보육·돌봄의 융합적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일자리 단절 방지

▣ 이행기간

- 2022.5.~2027.5.

▣ 재원조달방안 등

- 세출구조조정, 일반재정 및 고용보험기금 확충
- 사회서비스 추진체계 개편

정책순위

3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250만호 이상 공급

정책분야 재정·경제·복지

□ 목 표

- 새 정부는 확고한 주택공급정책으로 시장을 안정시키고 국민의 주거수준을 향상할 것임
 -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의 공급에 주력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공공택지 개발도 고려
- 5년간 250만 호 이상 공급
 - 수도권 130만호 이상 최대 150만호(서울 50만호)
- 택지 공급방식별 공급물량
 - 재건축·재개발 47만 호(수도권 31만 호)
 - 도심·역세권 복합개발 20만 호(수도권 13만 호)
 -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 18만 호(수도권 14만 호)
 - 소규모 정비사업 10만 호(수도권 7만 호)
 - 공공택지 142만 호(수도권 74만 호)
 - 기타 13 만호(수도권 12만 호) : 서울 상생주택, 매입약정 민간개발 등
- 주택유형별 공급물량
 - 청년 월가주택 30만 호(수도권 20만 호)
 - 역세권 첫집 주택 20만 호(수도권 14만 호)
 - 공공분양주택 21만 호(수도권 10만 호)
 - 공공임대주택 50만 호(수도권 30만 호)
 - 민간임대주택 11만 호(수도권 6만 호)
 - 민간분양주택 119만 호(수도권 69만 호)

※ 반올림 차이로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이행방법

- 주택공급 로드맵 작성(2022년) : 새 정부 출범 직후 주택공급 로드맵 작성
- 제도 개선(2022년)

-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의 협조 하에 법률 개정
- 대통령 권한으로 제도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개정하여 제도 개선

● 신규 주택공급(2022년-2026년)

- 주택공급 로드맵에 맞추어 연도별 물량을 공급

▣ 이행기간

● 2026년까지 이행

- 단, 주택은 계획 후 인·허가와 착공, 준공을 걸쳐 실제 시장에 공급되는 기간이 장기이므로, 공급물량 목표는 인·허가나 사업인가 기준임.

▣ 재원조달방안 등

● 공공임대주택 50만호 공급

- 재정지출시기 조정 및 재량지출의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 마련
- 경기회복을 전제로 한 세입 증대 예상분 활용

● 나머지 주택은 분양주택이거나 민간임대주택이므로, 별도 재정지출 없음

- 분양주택의 경우,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자본시장에서 조달하거나, 주택도시보증기금으로부터 조달하고, 조달한 자금은 분양대금으로 상환
-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임대수입으로 원리금 상환

정책순위

4

스마트하고 공정하게 봉사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과 대통령실 개혁

정책분야 정치·행정·사법

□ 목 표

- 정부 및 지자체, 정부 산하기관 모든 사이트를 하나로 통합하여 국민들이 단일 사이트에 접속하면 모든 정보 및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원사이트 토털서비스 (One Site for All Service)를 제공
- 빅 데이터와 AI기술을 활용, 미래에 발생 가능한 사회적 문제를 선제적으로 예견하고 대처하는 정부 구축
- 플랫폼을 바탕으로 정책설계과정을 투명하게 공개, 현실과 가상의 융합공간(메타버스)을 매개로 국민 스스로 정책 설계, 집단지성의 숙의과정을 통해 국민과 함께 하는 가시적 수준의 국정 운영 지향
- 국정운영방식 대전환을 통한 국정운영 능력 강화
- 대통령실 이전을 통해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제왕적대통령 잔재 청산

□ 이행방법

- 디지털 플랫폼 거버넌스 구축 청사진 설계와 관련 법 재개정 후, 통합 디지털 플랫폼 개발과 구축
- 정부조직법 및 대통령실 직제(대통령령) 개정을 통한 청와대 해체 및 조직개편
- 기존 청와대 부지는 국민과 전문가 여론 수렴하여 활용방안 마련

□ 이행기간

-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2022~2027년
- 정부조직 개편 및 대통령실 이전 : 2022년
 - ※ 집무실 및 대통령실 주요부서는 임기 시작 전 이전 완료

- 청와대 부지 활용 : 임기 내(2022~2027년)

▣ 재원조달방안 등

- 디지털 플랫폼 정부
 - 기존 배정 예산으로 추진하되, 필요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원마련. 플랫폼 구축 후 관리 운영비용은 감소될 예정
- 대통령실 개혁
 - 정부서울청사 활용으로 특별한 재원소요 없을 것으로 판단
 - 청와대 기존 부지 활용방안은 국민과 전문가 여론을 수렴 후 구체적 활용방안이 수립되어야 추계 가능

정책순위

5

과학기술 추격국가에서 원천기술 선도국가로

정책분야 과학기술·정보통신

□ 목 표

- 정부의 과학기술 리더십 강화, 데이터에 근거한 국정 운영
- 정치와 과학의 영역 분리로 정치적 중립성 보장
-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자율적인 연구환경 확립
- 연구관리 시스템을 미래 선도형으로 혁신
- 청년 과학인들의 도전과 기회의 장 확대

□ 이행방법

- 정부의 과학기술 리더십 강화, 데이터에 근거한 국정 운영
 -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법률 제정 및 개정 (인수위에서 일괄 제출)
 - 대통령 직속 민·관 과학기술위원회 신설
- 연구자, 개발자, 기업 현장의 전문가, 과학기술 행정가들로 구성된 민·관 합동위원회를 통해 국가과학기술에 대한 전략 로드맵을 수립
- 정치와 과학의 영역 분리로 정치적 중립성 보장
 - 장기 연구사업 제도 도입
- 장기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정권에 따라 변경·폐지 못하도록 제도화
- 연구 기간 내 꾸준한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계획 초기부터 목표, 종료시점, 지원 규모 명확화
-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자율적인 연구환경 확립
 - 유연한 연구비 집행 시스템 및 국제 기준의 평가검증 시스템 도입으로 정부가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 연구 체계 확립
 - 국제공동연구 활성화,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 다국적 기업의 R&D 센터 유치를 통해 글로벌 기술동맹 강화

- 산·학·연의 자유로운 참여와 융합연구 활성화
- 주요 국책연구기관과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중심으로 개방형 융합연구플랫폼 구축
- 연구관리 시스템을 미래 선도형으로 혁신
 - 창의적·도전적 연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연구관리 시스템 개선
- 모험적 연구와 실험의 실패 용인
 - 국가적 난제와 미래 문제 해결 집중
- 감염병, 미세먼지, 탄소중립, 저출산·고령화 등 중장기적인 국가 과제 해결
- 당면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 경쟁력 제고
- 청년 과학인들의 도전과 기회의 장 확대
 - 고급 인재 육성을 위해 첨단기술 분야별로 대학과 기업이 함께하는 전문 교육 과정 개설
 - 청년 과학인들을 위한 연구 기회의 확대, 평가의 공정성 제고, 결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체계를 확립

□ 이행기간

- 취임 즉시 과학기술 혁신 프로그램을 가동하여 임기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

□ 자원조달방안 등

- 일반, 특별회계 및 기금 예산 편성 확대
- 과학기술 기반 혁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세입 확충
- 공약 우선순위는 지출효율화(재량지출 감축, 성과를 반영한 조정 등)를 추진하고, 이후 필요시 재정당국 및 국회와 협의

정책순위

6

출산 준비부터 산후조리·양육까지 국가책임 강화

정책분야 재정·경제·복지

□ 목 표

- 임신·출산·양육은 개인과 가족의 행복이며, 국가 존속의 근원이자 동력이나, 경제사회환경 변화로 여러 난관에 부딪히고 있음
 - 환경, 스트레스 등 다양한 원인으로 여성과 남성 모두 난임 증가
 - 만혼과 만산 등으로 인해 고위험 임신부 증가
 - 산모의 상당수가 산후우울증을 앓고 있으나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지 못함
 - 양육부담 문제로 출산 기피 현상 만연
- 본 공약은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임신·출산·양육'을 국가가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실천목표로는 성, 연령, 소득 수준 등에 관계없이 모든 임신·출산(희망) 가정과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검진, 치료, 건강관리, 양육서비스) 이용 보장과 경제적 지원 제공
- 이를 통해 출생률 회복 기대

□ 이행방법

- 임신·출산 전 성인여성 건강검진 지원 확대
 - 건강보험법 2022년 개정, 2023년 시행
- 모든 난임 부부에 치료비 지원
 - 일반회계예산(보건복지부) 추계 및 의회 상정(2022년), 시행(2023년)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소득기준 철폐, 횟수제한 완화(총 20회), 본인부담 연령차 별 폐지(자부담을 30%로 통일), 남성 난임검사 비용 무료
 - 건강보험법 2022년 개정, 2023년 시행
 - 난임부부 치료에 대한 비급여 진료 확대(잉여 배아 동결비, 프로게스테론 등)
- 난임휴가 기간을 3일에서 7일(유급)로 확대
 - 고용보험법 2023년 개정 및 시행

- 임신·출산과 직접 연관성 있는 모든 질병의 치료비 지원 확대
 - 일반회계예산(보건복지부) 추계 및 의회 상정(2022년), 시행(2023년)
- 산후우울증 치료를 포함한 산후조리에 대한 국가지원
 - 건강보험법 2022년 개정, 2023년 시행
- 자녀 출생 후 1년간 월 100만원 부모급여 제공
 - 일반회계예산(보건복지부) 추계 및 의회 상정(2022년), 시행(2023년)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및 육아휴직 기간 확대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과 고용보험법 2023년 개정 및 시행
- 단계적 유보통합 실현
 - 유보통합추진단 설립하여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 이행기간

- 모든 세부사업 (공통) : 임기 중 이행, 장기적으로 지속

□ 재원조달방안 등

- 재정지출시기 조정 및 재량지출의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 마련
- 경기회복을 전제로 한 세입 증대 예상분 및 건강보험 재정의 탄력적 활용

정책순위

7

청년이 내일을 꿈꾸고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사회 - 여성가족부 폐지

정책분야 사법·행정·교육

□ 목 표

- 청년들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시대적 소명이 다한 여성가족부를 폐지
- 공정한 기회와 투명한 절차를 보장하며, 부모찬스가 아닌 공정한 출발선을 제공해 끊어진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
- 사회 전반의 부조리 해소를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사회를 추구

□ 이행방법

- 여성가족부 폐지
 - ‘가족’ 우선 정책이 아닌 ‘여성’ 우대 정책 위주의 불공정 정책을 다수 양산하는 해당 부처를 폐지, 공정한 경쟁을 추구하는 청년들과 ‘가족’의 가치를 재조명할 수 있는 별도 부처 설립
- 공정한 입시 및 취업환경 조성
 - 입시비리 암행어사제 및 윈스트라이크아웃제 실시
 - 채용시험의 투명한 관리, 노조고용세습 및 편법적 친인척 고용승계 차단
- 성범죄 처벌 강화, 무고죄 처벌 강화
 -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감독제 운영, 강력 성범죄 차단을 위한 보호수용제 도입 등 성범죄 흉악범 처벌 강화
 - 무고죄 처벌 강화로 고의적인 거짓말범죄 근절
- 시민단체 공금유용 및 회계부정 방지(‘윤미향 방지법’ 추진)
- 강성노조 불법행위 엄단
-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 등록요건 강화 및 명의도용 방지
- 주취감경 처벌 현실화, 음주범죄 무관용 원칙

- 촉법소년 연령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하향 조정
- 공정한 출발선 제공(빛의 대물림 차단)
 - 연대보증 금지제도 강화 등
- 청년세대 자산형성 지원 위해 '청년도약계좌' 도입

▣ 이행기간

- 임기 중 전 기간
 - 2022년 5월~ 2027년 5월

▣ 자원조달방안 등

- 대부분 추가재원이 소요되지 않는 정치적 결단의 과제
- 재정지출시기 조정 및 재량지출의 구조조정을 통해 필요한 자원 마련
- 경기회복을 전제로 한 세입 증대 예상분 활용

정책순위

8

당당한 외교, 튼튼한 안보

정책분야 국방·통일·외교

□ 목 표

-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전을 구현하고, 비핵화 달성시 평화협정 체결
- 한미동맹의 신뢰 회복과 미래지향적 결속을 강화하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강력히 대응함으로써 북한의 도발을 억제

□ 이행방법

- 원칙과 일관성 있는 대북 비핵화 협상 추진
 - 예측 가능한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고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협상
 -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 국제적 대북제재 유지
 -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전이라도 실질적 비핵화 조치 시 (유엔 제재 면제 등을 활용하여) 대북 경제지원 가능
-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공조 및 양자·다자 협상에서 중심적 역할 수행
 - 한미 공조하에 비핵화 협상 재개 노력
 -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 이행을 위한 국제 협력 주도
- 판문점(또는 워싱턴)에 남·북·미 연락사무소 설치하여 3자간 대화 채널 상설화
- 한미 외교·국방(2+2)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의 실질적 가동
- 한미간 연합연습(CPX), 야외기동훈련(FTX) 정상 시행
- 한미 AI 과학기술동맹 강화
- 한국형 3축체계 - 킬체인(Kill-chain)·미사일 방어체계(KAMD)·대량응징보복(KMPR) - 복원
- 사드(THAAD) 추가 배치

▣ 이행기간

- 임기 중 전 기간
- 2022년 5월~ 2027년 5월

▣ 자원조달방안

- 비핵화 협상 결과에 따라 실제 소요예산이 결정될 것인 바, 현 시점에서 추계 불가
- 한국형 3축 체계 복원은 무기도입 등이 포함되어 있어 현 상황에서 추계 불가
- 사드 추가 배치는 미국의 미사일 도입 등이 포함되어 있어 현 상황에서 추계 불가

정책순위

9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과 원전 최강국 건설

정책분야 환경·산업

□ 목 표

- 실효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적극 추진하며, 원자력과 청정에너지 기술 구축을 통해 탄소중립 목표달성에 기여
- 기술투자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국제협력체계 강화
-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발전에 지속적으로 투자, 친환경적 에너지 생산과 미래 먹거리 확보, 전 세계에 원전 원천기술 수출

□ 이행방법

- 신념이 아닌 과학기술과 데이터에 기반을 둔 실현가능한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 및 2050 탄소중립 달성방안 수립 및 추진
- 탄소감축과 적응 위주의 기후위기 대책을 탄소중립사회로의 대변환이라는 미래대책과 병행 추진하여 국민피해를 최소화하고 미래 일자리를 창출
- 지원(R&D, 에너지 복지)-규제(배출권거래제)-글로벌 협력(미국, 유럽 등 공급망)으로 기후위기를 기회로 전환
- 기준 강화, 제도 개선 및 시설투자를 통해 초미세먼지를 국내 환경기준($15\mu\text{g}/\text{m}^3$)이하로 개선
- 미세먼지 등 국제환경 이슈에 대한 전방위적인 협력체계 강화 적극 추진
- EU 택소노미에 친환경 에너지로 포함된 원자력 발전 안전하게 운용하며 적극 활용

□ 이행기간

- 5년 (2022.5.~2027.5.)

▣ **재원조달방안 등**

- 재정지출시기 조정 및 재량지출의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 마련
- 경기회복을 전제로 한 세입 증대 예상분 활용

정책순위

10

공정한 교육과 미래인재 육성, 모두가 누리는 문화복지

정책분야 교육·문화

□ 목 표

- 교육
 - 자율, 개방, 혁신 중심의 디지털 교육체제로 대전환
 - 학교교육 정상화 및 공정한 교육기회 제공
 - 자율기반 학습생태계를 조성하고, 교육 경쟁력을 제고하여 국가 발전 견인
- 문화
 - 보편적 문화복지 서비스 및 문화기본권 보장
 - 문화 자치로 실현하는 지역 중심 문화국가
 -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문화예술 생태계 회복

□ 이행방법

- AI 교육혁명을 위한 첨단기기 지원 및 관련 전문과정 신설
- 수시전형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미래교육 수요와 사회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대입제도 마련
- 대학의 자율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새로운 평가방식 도입 및 재정지원 확대를 통하여 대학 스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
- 신산업 직업교육 체제 및 교육과정 개편으로 특성화고와 전문대학이 고숙련 전문인재를 양성하도록 지원
- 세대별·개인별 맞춤형 교육과 선행학습(RPL : Recognition of Prior Learning) 인정으로 경력 및 학습단절을 최소화하고 평생학습 기회확대 및 격차해소
- 문화시설·콘텐츠의 지역 확충 및 거버넌스 구축
-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맞춤형 지원
- 예술지원의 자율성 및 지원구조 혁신

- 수요자 중심의 문화예술 플랫폼 구축 및 프로그램 제공
- 문화예술계의 공정성 제고

□ 이행기간

- 1년차: 교육 및 문화공약 실행을 위한 기본계획, 추진 로드맵 수립, 자원 및 인력 재구조화, 관련 법령 제개정 계획, 일부 단기과제 추진
- 2-3년차: AI교육 체제로의 전환, 새로운 대입제도(안) 마련, 생활문화시설 확충, 문화예술플랫폼 구축 등 기본계획 및 로드맵에 따른 핵심과제 추진 및 모니터링
- 4-5년차: 핵심공약과제 지속 추진, 공약 관련 과제 및 공약성과 확산을 위한 환경 및 여건 고도화, 핵심과제 성과분석 및 공약 추진 성과 확산 계획

□ 자원조달방안

- 재정지출시기 조정 및 재량지출의 구조조정을 통해 자원 마련
- 경기회복을 전제로 한 세입 증대 예상분 활용

제20대 대통령선거 정당정책 모음집



정의당

정의당

No.	정 책
1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정의로운 탈탄소사회로의 전환
2	노동자, 자영업자, 농어민의 일할 권리와 기본권 보장
3	성차별, 폭력없는 성평등 사회 실현 / 청년, 청소년의 다양성 존중과 미래사회 보장
4	부동산 불평등 해소·투기 근절, 기후위기·차별 해소를 위한 조세 개혁
5	불공정 해소, 미래를 대비하는 경제개혁
6	국민건강권 및 전국민 돌봄 보장
7	맞춤교육, 문화다양성,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
8	모두가 존중받고 안전한 공동체
9	특권과 부패가 없는 정의로운 대한민국
10	평화와 공생의 한반도와 국제사회

정책순위

1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정의로운 탈탄소사회로의 전환

정책분야 보건의료, 환경

□ 목 표

- 탈탄소사회로의 대전환을 통해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불평등 해소

□ 이행방법

- 탈탄소사회로의 전환
 - '기후에너지부'를 신설, 대통령 직속의 '탈탄소사회전환 위원회' 설치
 -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0년 대비 50% 이상으로 상향
 - 노동자, 시민단체, 정부, 산업계가 참여하는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위원회' 설치
-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중지,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전면 중단
 -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50% 달성
 - 2023년~2030년까지 매년 20GW이상 설치하여 180GW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확보
 - 한전발전자회사를 '재생에너지공사'로 통합
 - 광역단위에 지역에너지전환 공사 설치
 - 1가구 1태양광 시대 실현
 - 공동주택 및 농어촌 마을에 태양광 무상 설치 및 배터리 지원
 - 「에너지복지법」 제정 및 환경성과 사회성을 고려한 에너지정책 수립
- 그린노믹스로 녹색혁신 선도, 공존과 번영의 신경제 수립
 - 재생에너지발전기술 선도국가로 발전. 지능형 전력망 구축
 - 제2의 반도체산업으로 배터리산업 육성
 - 그린수소기술 개발, 산업공정 탄소배출 감축
 - 지역경제 부흥으로 150만개 일자리 창출
 - 산업은행을 녹색은행으로 전환
- 「탈핵기본법」 제정을 통해 2040년 탈핵 달성
 - 「원자력진흥법」 폐지 및 신한울 3·4호기 등 신규 핵발전소 건설 원천적 방지

- 소형모듈원자로 개발에 대한 투자를 재생에너지·에너지 저장장치 기술 투자로 전환
- 폐로지역 충격 완화 및 지원과 보상을 위한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법률」 개정
- 핵사고 및 안전관리 강화, 핵 취급시설 주민 안전 강화
- 고준위핵폐기물 직접영구처분

◎ 자연과 사람이 공생하는 생태환경

-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100% 표시 의무화, 알권리 강화
- 국가산업단지 지역주민 건강 보호 강화. 환경오염피해 사후구제조치 강화
- 석면, 가습기살균제 등에 대한 피해구제 강화 및 예방 강화
- 산업단지·석탄화력발전소 배출 미세먼지 감축
- 미세먼지 상시노출 노동자 보호 강화
- 자원순환 사회 실현을 위한 시스템 구축
- 물 공공성, 안전성 강화. 하천 및 하구 생태 회복
- 생태교육 강화 및 육상 생태 관리 강화, 해양 생태계 보호 강화

◎ 기후위기 시대 교통정책 전면 전환

- 광역과 기초가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버스공영제 중심의 공공교통체계 확립
- 교통시설특별회계를 통한 PSO와 비수익 공영노선 지원 확대
- 고속도로를 대체하는 철도 중심의 광역교통망 확대
- 자가용 중심 도시에서의 토지사용 전환, 녹지축의 확대

▣ 이행기간

- ◎ 임기 내

▣ 재원조달방안 등

- ◎ 탄소세 도입, 녹색채권 등 공적재원 활용 및 공공투자를 중심으로 민간펀드 활용
- ◎ 산업은행을 녹색투자은행으로 전환하고 2030년까지 500조 녹색공공투자
-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활용

정책순위

2

노동자, 자영업자, 농어민의 일할 권리와 기본권 보장

정책분야 교육, 인적자원, 산업자원, 건설교통

□ 목표

-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노동권 보장
- 자영업자 코로나 피해 부담 경감 및 골목경제 활성화, 농산어촌의 녹색대전환 시작

□ 이행방법

- ‘일하는 시민’ 모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
 - 〈일하는 시민을 위한 기본법〉 제정, 플랫폼·프리랜서·자영업자·특고 등 노동기본권 보장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동일가치 동일임금 법 제화
 - 모든 시민에게 노조할 권리 보장, 노동조합 설립신고에서 정보제출로 단순화
 - 성평등교섭 의무화 및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
 - 최저임금 인상, 최고임금법 제정, 정규직보다 높은 비정규직 ‘평등수당’ 도입
 - 단체협약 효력확장 도입, 원하청 공동사용자성 인정,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폐지·개선
- 주4일제 도입 및 쉼 권리 확대
 - 2022년 사회적 공론화 및 합의→2023년 시범운영→2027년까지 입법 완료
 - 연차휴가 25일로 확대, 최소노동시간보장제 도입, 생애주기별 노동시간 선택제 도입
 - 전국민 상병수당(소득의 70%) 및 질병휴가 도입
- 윈스톱 산재보험 도입 및 중대기업처벌법 제정
 - 국민건강보험과 같이 병원에서 먼저 산재치료 및 요양을 받는 〈신청-승인〉 제도에서 〈선보장〉제도로 전환,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으로 적용범위 확대, 처벌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 하한 도입, 인과관계 추정 규정, 양형절차 특례규정, 공무원 처벌규정 신설
 - 산업안전보건법, 취약대상별 특성에 따른 안전보건대책 마련,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 위협의 외주화 금지, 과로사 예방 및 정신건강 보장, 노동자·시민의 알권리, 참여권, 작업 중지권 보장

- ◎ 전국민일자리보장제
 - 산업전환, 노인, 청년 등에게 생활임금 이상의 학습·경력개발(유지)형 국가일자리 제공
 - 일하는 시민 모두에게 평생학습 자기계발계좌(연간 150-300만원) 지원
- ◎ 코로나19 자영업자 손실보상·피해지원 확대, 골목상권 활성화
 - 코로나19 손실보상금 확대, 자영업자 임대료 부담 경감, 자영업자 부채 이자 탕감 및 고통 분담 방안 마련,
 - 코로나19 특별재난연대세 부과 및 특별재난연대기금 조성
 -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 '알고리즘 투명화법' 제정
 - '허위 리뷰 방지법' 제정
 -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점포·복합쇼핑몰 규제 강화
 - 대규모 점포 의무휴일제 확대
 - 가맹점 분야 이익 배분 개선을 위한 최저이익보장제 도입
 - 상가 임대료 부담 완화·젠트리피케이션 방지
 -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강화
- ◎ 농산어촌의 녹색대 전환 시작
 - 모든 농어민에게 월 30만 원 기본소득 지급, 연간 2.4조 규모의 공익형 직불제를 연간 5조원 규모로 확충
 - '국가식량주권 위원회' 설치, 식량 자급률 법제화, 곡물자급률 30% 달성
 - '전국민 먹거리 기본법' 제정
 - 유전자변형농식품의 완전표시제 시행
 - 생태농어업 비중 30% 이상 확대, 농약·화학비료사용을 50% 이상 감축
 - 농어업재해보험의 복구비 현실화로 실소득 손실액의 80%까지 지원

▣ 이행기간

- ◎ 임기 내

▣ 자원조달방안 등

- ◎ 일반회계 및 기금 활용

정책순위

3

성차별, 폭력없는 성평등 사회 실현 / 청년, 청소년의 다양성 존중과 미래사회 보장

정책분야 교육, 인적자원

□ 목 표

- 성차별, 폭력 없는 성평등 사회 실현
- 청년이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사회 보장, 청소년이 가진 다양성이 존중받는 사회

□ 이행방법

- 젠더폭력 없는 안전사회 실현
 - 비동의 강간죄 도입, 스토킹 데이트폭력 규제 강화, 가정폭력범죄처벌법 전면 개정, 성착취·성매매·인신매매 근절 법률 제·개정, 이차피해방지법 마련 개정
 - 디지털 성차별·성폭력 대응 강화(적극적 국제공조체제마련, 수사기관부터 불법 촬영물 신속 삭제)
 - 디지털성범죄 삭제 전담반 확대, 구글·애플 등 앱마켓 운영 사업자 조치 의무화, 신고부터 사후관리까지 종합서비스 지원시스템 구축)
 - 아동청소년 성착취 및 성매매 성산업 확산 방지(온라인 그루밍 현장점검 강화)
 - 성착취 디지털기술제공자 강력처벌, 채팅앱 규제 등
- 성평등 일터 보장, ‘전국민육아휴직제 도입’으로 일·생활 균형 실현
 -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 성별임금격차해소법 제정
 - 채용 성차별 규제(성평등 담당관 선출, 성차별 의심기관 불시감독)
 - ‘전국민육아휴직제 도입’: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통상임금 80%, 상한 285만원으로 인상), 사후지급금 폐지, 육아휴직 엄마아빠 3개월씩 할당, 자동육아휴직제도 도입, 특수고용, 플랫폼, 자영업자 등도 육아휴직 대상으로 포함,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일반 회계 분담비율 확대, 국가 책임 강화, 대체인력지원센터 설립·운영, ‘대체인력평등수당(육아휴직자 1.5배) 신설
- 여성대표성 강화와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
 - 성평등한 관점에서의 헌법 개정. 헌법에 남녀동등권의 명문화
 - 여성가족부의 성평등부 전환, 정부 지자체의 성주류화 정책 전담 추진 기능 강화

- 국가일자리보장제로 청년 일자리 30만개 창출
 - 청년 누구에게나 생활임금과 사회보험, 역량교육 제공하는 일자리 보장
 - 시군구별 일자리보장위원회와 일자리보장센터 운영으로 지역사회 일자리 발굴
- 세입자 청년을 위한 안정적 전월세 주거 보장
 - 보증금 제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월세 지원(월 20만원, 3년간, 중위소득 150% 이상)
 - 최저주거기준 상향(1인당 14㎡→25㎡) 및 고시원과 컨테이너 등에도 적용
- 청년기초자산제, 코로나 시기 졸업생 취업교육 및 부채 경감 지원
 - 20세가 되면 사회진출 디딤돌 3천만원 지급, 21세~29세는 매년 3백만원 지급
 - 평생교육바우처 등 지원 확대 및 폴리텍대학 진학시 등록금 면제
 - 생계비 대출(햇살론 유스) 만기 30년으로 연장, 학자금 대출 50% 경감
- 아동청소년 포함한 통합적 청소년 정책 지원
 -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로 분절된 아동청소년 정책 통합
- 청소년 무상교통으로 교육체험 기회 확장
 - 지역부터 시작하여 청소년 버스요금 무상화 (만 7~18세 대상)
 - 이후 지하철 요금 무상화 순차적 추진 및 공공자전거 확대로 대중교통 연계

▣ 이행기간

- 임기 내

▣ 재원조달방안 등

- 일반회계 및 기금 활용

정책순위

4

부동산 불평등 해소·투기 근절, 기후위기·차별 해소를 위한 조세 개혁

정책분야 산업자원, 건설교통, 재정, 경제, 복지

□ 목 표

- 제2의 토지개혁으로 부동산 불평등 해소
- 불평등·기후위기·차별 해소를 위한 조세 개혁

□ 이행방법

- 제2의 토지개혁 - 부동산 불평등 해소·투기 근절
 - 토지초과이득세 도입
 -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부동산 세제 강화
 - 각종 개발사업 초과개발이익 50% 이상 환수
 - 기업 비업무용 토지 과세 강화, 재벌 비업무용 토지 상세 정보 공개
 - 종부세 토지분(종합합산·별도합산) 세율 인상, 공시가격 현실화율 100%
 - 양도소득세 1주택자 비과세 폐지
 - 주택소유상한제 도입 (2주택 세금 중과세, 3주택 이상은 소유 제한)
 - 고위공직자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 금지
- 공공주택 20% 실현 - 공공택지에는 100% 공공주택
 - 공공택지 절반은 장기 공공임대주택, 절반은 공공자가주택 공급
 - 공공택지 민간매각 중단·직접 공영 개발, 분양원가 공개로 건축비 거품 제거
 - 주택 공급 및 주거복지 정책 총괄 '도시주택부' 신설
- 세입자 안심임대 시스템 - 세입자 계속거주권 보장
 - 전월세 상한제 개선(소비자물가상승률 연동)
 - 계약갱신 횟수 제한 없는 계속거주권 보장, 단기적으로는 교육 학기제를 고려해 전세 계약기간 3년으로 연장, 계약갱신청구권 2회 보장
- 청년 가구 맞춤형 지원 강화
 - 1인가구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 월세 거주자 부모의 월세 지출 세액공제 확대
- 기숙사 수용률 30% 이상 의무화로 기숙사 확충
- 주거복지 확대로 주거안심사회 실현
 - 주거급여 대상 2배 확대 (중위소득 45% → 60%), 최저주거기준 상향
 - 각종 개발사업·도시정비사업에서의 강제퇴거 금지
 -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공공임대주택건설 의무비율 확대(15% → 30%)
- 정의로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
 - 모든 선분양제 아파트(민간 포함)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 선분양제 민간아파트 대상 분양원가 62개 항목 공개
 - 공공아파트 80% 완공 후분양제 의무화
- 법인세 확대, 소득세 체계 및 금융투자소득 세제 개편
 - 법인세 최고세율 적용구간(25%)을 3천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대폭 확대
 - 대기업에 집중된 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공제 감면을 대폭 축소
 - 소득세 45%의 최고세율 구간을 1억 5천만원을 초과로 확대
 - 국내 상장수익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5천만원에서 2천만 원으로 하향
 - 연봉 2억 원 이상 고소득자의 근로소득공제를 대폭 축소
- 불평등 기후위기 복지 지출 대응을 위한 세제 개편
 - 부의 대물림 방지를 위해 세대생략 상속·증여)에 대해 50% 할증 과세
 - 복지재정 확충을 위한 「사회복지제」 신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세」 도입

□ 이행기간

- 제20대 대통령 임기 내

□ 재원조달방안 등

-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활용, 보유세 강화 재원 마련

정책순위

5

불공정 해소, 미래를 대비하는 경제개혁

정책분야 재정, 경제, 복지

□ 목 표

- 불공정한 경제 구조 개혁, 플랫폼경제 민주화와 플랫폼 노동자 권리 강화
- 현장 중심 과학기술 연구개발, 보편적 정보접근권 보장, 시민의 권리 확립

□ 이행방법

- 「디지털플랫폼기업 독점방지법」 제정
 - 플랫폼 기업의 이해충돌 행위 금지
 - 플랫폼독점기업에 계열분리·기업분할제 도입
 - 불공정거래 행위 처벌 강화
 - 정보·알고리즘 공유와 수수료 상한제 도입
 - 플랫폼 이용사업자들에게 단체 구성 및 협의 권한 부여
- 플랫폼 노동자에게 생활임금 보장과 사회 안전망 강화
 - 배달·배송·모빌리티 플랫폼 등에 안전운임제·안전운반료 도입
 - 큐레이션형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개선 및 누적 MG 제도 금지
- 경제력 집중 해소 위한 구조 개혁,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 계열분리·기업분할 명령제 도입, 기업집단 출자구조 2층 구조로 제한
 - MOM(Majority Of Minority) 규칙 도입
 - 분할 신설회사 보유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 배정 금지,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 공익법인, 금융계열사가 보유한 계열사 의결권 사용 금지
 -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은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
 - ESG 기업가치에 중점을 둔 국민연금의 주주권 적극 행사
 - 주주대표소송 요건 완화
-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경제체제 구축
 -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중소기업·납품업체 집단교섭 보장 및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 도입
- ◎ 100개의 강소형 다이버시티로 지역균형발전 시작
 - 100개의 '강소형 다이버시티(DiverCity)' 조성. 다양한 영역의 특화된 다이버시티로 탈탄소, 도시 내 15분 접근, 지역 특화산업이 조성되는 도시 실현
 - 강소형 다이버시티 아래 읍·면 등의 단위로 2,000개의 '마을 커뮤니티' 조성
 - 300여개 공공기관과 권력기관의 2차 지방 이전 추진 및 지역인재할당제 50% 상향
 - 지역채투자법 제정으로 지역 금융 불평등 해소
 - 생활인프라 투자로 청년과 은퇴세대의 정주여건 획기적 개선
- ◎ 분권을 넘어 지역민주주의가 확대되는 자치분권 실현
 - 지방분권 헌법개정 추진, '지방분권국가' 지향 명시,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 보충성의 원칙 명시, 자치입법권·자치재정권 보장
 - 국무총리 소속 '자치분권처' 신설해 지방자치 지원
 - 지역시민단체, 노동조합, 정당 등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의 다양성 제고, 주민자치회의 대표성 확보 및 의사결정 권한 강화 등 주민자치 활성화
 - 주민밀착형 자치경찰제 도입, 자치경찰 사무 확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실질적 이원화 추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구성 개선
 - 과감한 사무이양, 2단계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추진
 - 단체장 결선투표제 및 광역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기초의회 중선거구제 강화
 - 지방의원 외유성 해외연수 금지, 선심성 재량사업비 편성 금지, 셀프징계 방지, 지방의원 이해충돌 방지 강화, 시민참여형 지방의회 모니터링 제도화
 -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도입 제도화, 지방의회 소속 독립적 감사위원회 설치, 단체장의 예산안 재의요구권 폐지, 다양한 기관구성 활성화

▣ 이행기간

- ◎ 임기 내

▣ 자원조달방안 등

- ◎ 법·제도 개선, 일반회계 및 기금 활용

정책순위

6

국민건강권 및 전국민 돌봄 보장

정책분야 보건의료, 환경, 재정, 경제, 복지

□ 목 표

- 공공의료 확대와 병원비 연간 100만원 상한제로 국민 건강권 보장
-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국민 돌봄 보장

□ 이행방법

- 공공의료 확대 및 지역별 필수중증의료 보장
 - 공공병원 예비타당성 면제
 - 70개 중진료권에 500병상 이상의 공공병원(책임의료기관) 설치
 - 국립중앙의료원에 중앙감염병병원 설치 및 상급종합병원으로 현대화
 -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설치
 -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을 묶은 단일한 공공의료체계 구축
 - 필수중증의료 보장을 위해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권역 협력체계 구축
 - 권역 중진권별로는 지자체,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역우수병원, 보건기관, 일차의료기관 등이 참여하는 자체 충족적인 보건의료 체계 구축 (자원이 부족한 지역은 공공병원과 인력 확충)
 - 국립의학대학(원) 설립, 공공의대 설립으로 공공의사 및 공공간호사 양성체계 마련
- 병원비 연간 100만원 상한제, 한국형 전국민주치의회제 도입 등 건강 선진국 실현
 - 병원비 연간 100만원 상한제 실시
 - 의사와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한국형 전국민주치의회제 도입
 - 의원은 외래 중심, 병원은 입원 중심으로 전환
 - 인구 5만 명 당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 보건의료인력을 OECD 수준으로 확대
 - 모든 병동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제공
 - 전국민 상병수당 도입으로 질병 및 손상으로 인한 소득손실 보장
 - 국민건강부 신설, 정부 모든 정책에 건강영향평가 실시

- ◎ 100세 시대에 맞는 건강한 노후, 존엄한 노후
 - 공공장기요양시설 확대, 시군구 공공종합재가센터 및 월급제 요양보호사로 좋은돌봄 실현
 -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보장성 강화, 공무원연금·국민연금 통합, 다층소득보장체계 구축
 - 공공실버아파트, 개인 맞춤형 노후원룸, 주택 개조 등 지역밀착형 주거지원 확대
 - 은퇴자협동조합, 사회공헌활동 개발, 경륜을 활용한 일자리 등 노인 적합형 일자리 개발
- ◎ 전국민 공공 돌봄으로 좋은 돌봄 실현
 -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전면 구축, 주민행복센터를 ‘통합돌봄센터’로 전면 개편
 - 노인, 장애인, 노숙인 등 집중 돌봄이 필요한 지역주민을 위한 주거유형 마련 및 연계
 - 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폐지, 종사자 ‘2인 1조제’ 도입으로 안전복지 실현
 -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 돌봄노동자 월급제 시행,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종합대책 마련
 -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제로 시설 유형별 임금 격차 해소, 복지전담공무원 확대
 - 지역이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량적 복지예산 확보
- ◎ 걸어서 가는 국공립 어린이집 실현, 민간 어린이집 공공성 향상
 - 국공립어린이집 50% 확대 및 지역별 국공립 격차 완화
 - 보육교사 처우 수준 국공립 수준으로 1단계 보편 적용, 2단계로 유치원 수준으로 인상
 - 휴게시간 및 점심시간 보장을 위해 보육교사 인력 확대, 연령별 보육교사 확대
 - 시군구 공공 아동심리전문가 배치, 찾아가는 ‘금쪽이 보육’ 실시
- ◎ 아동기본권 보장, 아동학대 공공책임 종합대책 마련
 - 출산전후 모든 가정에 전문가가 찾아가는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실시
 - 아동수당 만 11세(초등학생)까지 지급
 - 지자체 아동복지 종합 조정체계 마련, 아동복지(아동학대) 인력 및 전담부서 확대
 - 학대아동쉼터, 가정위탁 지원, 공공 그룹홈 확대 등 지역사회 보호인프라 확대
 - 해외입양 일몰 선언 및 공공책임 입양체계 구축

▣ 이행기간

- ◎ 임기 내

▣ 자원조달방안 등

- ◎ 일반회계 및 기금 활용

정책순위

7

맞춤교육, 문화다양성,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

정책분야 교육, 인적자원, 문화, 언론, 관광, 스포츠

□ 목 표

- 유아부터 대학까지 미래형 맞춤교육, 직업교육 강화, 대학서열 완화로 사교육비 경감
- 문화다양성 증진, 표현의 자유 보장

□ 이행방법

-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여는 맞춤교육
 - 한반 20명 미래형 학교
 - 수업과 평가 혁신
 - 변혁적 역량 중심 교육과정
 - 동그라미 작은 학교 확대
 - 냉난방·화장실·식수대 등 가정보다 편안한 학교
 - 서울대 10개 만들기,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전문대부터 무상교육
 - 작지만 강한 미래대학 육성
 - 현행 대학기본역량진단 폐지, 정원 일괄조정
- 출발선 평등 위한 아동돌봄, 모두의 탁월성 키우는 책임교육, 민주적 학교
 - 국공립유치원 확충, 유보통합, 유아 3년 무상의무교육, 국가책임 아동돌봄
 - 3단계 중층 기본학력 보장 시스템, 학생 맞춤형 지원 확대, 고교체제 개편
 - 학교구성원의 참여 보장, 사립학교의 민주적 운영
 -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 노동 존중사회 위한 직업교육, 대입제도 개편 및 사교육 개혁, 평생교육 강화
 - 고졸 첫 임금 250만원, 정부부터 고졸채용 앞장, 전문대 재정지원 확대
 - 수능 절대평가 확대 및 자격고사화, 학원 일요휴무제, 학력학벌차별금지법
 - 모두의 자아실현 위한 평생교육: 시민학습공동체 육성 및 지원

- ◎ ‘우리동네 문화센터’ 조성
 - 읍면동 단위의 우리동네 문화센터 조성
 - 문화적 지역재생: 유휴공간 및 폐시설에 우리동네 미술관, 도서관, 문화예술 교육시설 등 문화 기반시설 조성, 예술인 창작공간 조성, 예술인 공공 임대주택 공급
- ◎ OTT 콘텐츠쿼터제
 - 모든 OTT에 국내 콘텐츠(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30% 이상 구성 의무화
 - 국내 OTT의 경쟁력 제고, 해외 OTT의 국내 콘텐츠 투자 확대 유도
- ◎ 국민의 손으로 공영방송 이사 선출, 사장 추천
 - 방송통신위원회에 지역·성별·연령 등 균형있게 선정한 ‘이사추천국민위원회’ 설치
 - 이사추천국민위원회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 후보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고, 투표를 통해 이사 선출
- ◎ 현장 중심 과학기술 연구개발, 보편적 정보접근권 보장, 시민의 권리 확립
 - 과기부총리 신설, 과기부 간부급 보직 개방 확대, 장기 기술전략 위임제도 도입
 - PBS(연구과제중심제도) 폐지, 출연연 연구비 70%는 정부 책임으로
 - IT노동자 포괄임금제 폐지, 일가정 양립 지원 등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강화
 - 주민참여형 혁신연구허브를 거점국립대 설치
 - 1만원대 전국민 무상 인터넷 도입 및 이동통신비 원가공개
 - 알고리즘 투명화 및 설명가능 인공지능 장려
 - 전자제품에 ‘수리할 권리’ 보장
 - ‘종이 없는 행정’과 탈탄소 기반 디지털 전환 실현
 - 빅테크 기업의 운영체제(OS) 갑질 금지, 오픈소스SW 이용 활성화 및 산업 육성

▣ 이행기간

- ◎ 임기 내

▣ 재원조달방안 등

- ◎ 일반회계, 특별회계, 교부금 등 활용

정책순위

8

모두가 존중받고 안전한 공동체

정책분야 정치, 행정, 사법, 재정, 경제, 복지

□ 목 표

- 장애인, 이주민,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 차별 해소
- 동물복지 강화와 국민 모두의 삶터 안전 실현

□ 이행방법

- 차별없는 대한민국
 - 차별금지법 제정, 다양한 가족구성 인정하는 동반자등록법 제정
 - 성별 변경 성소수자 인권 보호, HIV 감염인 건강 등 인권보호
 - 공공기관 인권교육과 국가인권위원회 강화
- 이주사회 전환 기반 구축
 - 재외동포 기본법 제정과 전담기구 설치, 이주민 전담기구설치, 이민법 제정
 - 노동비자 영주제도 도입과 인권친화적 고용허가제 도입
 - 인권을 존중하는 난민법 제정
 - 한국-ASEAN 인권협력기구 설치
- 장애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평등과 존엄의 나라
 - OECD 평균 수준으로 장애인 예산 확보
 - 장애인등록제 폐지, 장애서비스법/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선택의정서 국회 비준
 - 비리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신규 거주시설 설치 금지 등 10년 내 탈시설 실현
 - 발달장애인 등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보장
 - 시내버스 대폐차 차량 100% 저상버스,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등 50% 저상버스
 - 보조공학기기 공공특허제 마련, 음성 및 화면지원 보조기기 지원 강화
 -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한국형 장애인공기업 설립, 권리형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창출
- 동물과 사람이 함께 사는 생명존중 사회
 -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대하도록 법 제·개정

- 동물학대, 안락사, 동물살처분, 번식장, 개식용 없는 ‘생명존중 5無 사회’ 실현
- 공공적 성격의 반려동물 건강보험 도입
- 공공 장례시설에 반려동물 화장장 추가 및 지방자치단체 동물장례시설 설치 의무화
- 대규모 번식장 단계적 폐지, ‘공공 동물보호센터’ 입양 활성화, 반려동물이력제 도입
- 동물보호감시원을 동물보호전담공무원으로 개편하고 인원 충원
- 유실·유기·야생동물 구조 강화 및 안락사 금지
- 채식문화 확산, 동물복지농장 확대, 전시·실험동물 존엄성 고취

◎ 삶터가 안전한 나라

-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및 피해자 권리 보장
- 교통안전 강화
 - 보행자·자전거 중심의 교통안전체계 구축, 노인친화 보행환경 구축
 - 교통이동권·공공교통·교통격차·교통전환을 위한 국민의 권리 명시 교통 기본법 제정
 - 운송노동자 안전운임제 적용 및 확대, 시민과 노동자의 공공교통 정책 참여 보장
- 안전취약계층 보호
 - 여성·장애인·노인·영유아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상황별 매뉴얼과 지원대책 마련
 - 범죄예방환경 조성 및 지역사회 안전거버넌스 구축
 - 고시원 등 화재취약계층 주거시설 스프링클러·소화기 지원
- 경찰·소방 공무원 처우 개선
 - 기본급 공안직 수준 인상 및 위험근무수당·화재진압수당 등 현실화
 - 직급체계 개선으로 승진적체 해소, 소방공무원 공상추정제도 도입
 - 경찰공무원 단결권·단체교섭권 부여

▣ 이행기간

- ◎ 임기 내

▣ 재원조달방안 등

- ◎ 법·제도 개선, 일반회계 등으로 조달

정책순위

9

특권과 부패가 없는 정의로운 대한민국

정책분야 정치, 행정, 사법

□ 목 표

- 대권이 아니라 시민권이 강한 나라, 청와대 정부에서 혁신가형 정부로
-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개혁으로 국민 주권 회복

□ 이행방법

- 법 앞의 평등, 시민을 위한 사법 민주화
 -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해체와 법원 민주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다양성 보장
 - 민주적 군사법제도 실현과 군인 권리 보호
 - 전관예우 근절과 법조비리 척결, 피의사실 공표 제한적 허용과 인권존중 수사과정 정착
 - 재벌 총수 사면, 황제노역, 유전무죄 특혜 근절
 - 국민 사법서비스 향상, 시민을 위한 국립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 정치 개혁
 -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위성정당 재발 방지,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18세로 하향, 선거권 연령 16세로 하향, 미성년자 선거운동 허용, 정당가입 기준연령 폐지 및 청소년 당원 가입시 법정대리인 동의서 첨부 조항 삭제, 공무원·교원 정치적 기본권 보장, 지방공기업·협동조합 직원 선거운동 허용, 일하는 시민의 참정권 보장, 국민발안제·국민소환제 도입
 - 거대정당에 유리한 국고보조금 배분제도 개선, 고액 기탁금 개선, 정당 지역기반 강화
 - 규제 위주의 선거법 전면 개정, 예비후보자 등록기간 및 선거운동 방법 확대
 - 장애인의 투표소 접근권 보장 및 맞춤형 선거정보 제공, 시설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
- 국회 개혁
 - 국회의원 징계에 민간위원 참여로 셀프징계 방지, 독립적 윤리감독관 도입으로 이해충돌 방지, 외부인사로 구성되는 국회의원보수산정위원회 설치로 셀프세비인상 방지, 직무관련 성과 관계없이 모든 보유주식 백지신탁
 - 교섭단체 기준 완화, 국회운영의 시스템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혁

◎ 정부 개혁

- 청와대 비서실을 실무형 스태프 조직으로 축소, 국무총리 중심 내각 운영,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도입, 제왕적 대통령제의 분권으로 의회중심제 전환의 기틀 마련
- 노동복지부총리 도입으로 '국가의 왼손' 강화
- 남녀동수 내각, 세대연대 내각 원칙 실현
-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혁신가형 정부 실현
- 고위공직자인사검증법 제정, 청와대의 사전검증 강화 및 검증자료의 국회제출 의무화, 행정고시(5급 공개경쟁채용시험)·경찰대·소방간부후보생제도 폐지
- 공공정보의 사전공개 및 수요자 중심 공개 원칙 실현
- 공익목적 소송의 소송비용 면제 제도 도입, 공익신고자의 신원 보장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한 보호 강화
- 공익신고자보호법 적용대상 확대,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기준 상향(상한액 기준 폐지)
- 대통령 직속 독립기구로 국가청렴위원회 부활
- 공직윤리 법제의 통합 추진, 공직자 윤리관련 법제 강화, 공직자 재산공개 범위 확대 및 시민의 접근성 향상
- 특수활동비 편성 최소화, 국가정보원 안보비 개선, 일정기간 경과 후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의 국회보고 의무화, 특정업무경비 지출내역 공개

◎ 경찰개혁, 공공기관 개혁

- 민주적 감독기구로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민주적 외부통제기구 신설, 정보경찰 폐지
- 노동이사 비율 확대, 노동이사의 감사위원회 참여 의무화 등 실질적 권한 부여, 노동이사 활동보장의 공공기관 평가 반영
- 공공기관 소재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시민이사제 도입
-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국회 추천 민간위원 포함,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관리감독 권한 폐지

▣ 이행기간

◎ 임기 내

▣ 자원조달방안 등

◎ 법·제도 개선

정책순위

10 평화와 공생의 한반도와 국제사회

정책분야 국방, 통일, 외교통상

□ 목 표

- 다차원적 평화의 제도화: 남북기본협정-한반도평화협정-동아시아안보협력체-국제사회 연대회의(PSCS)
- 남북 평화·공생의 제도화·역진 불가능한 안정화
- 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 복원, 실질적 진전 통한 한반도 비핵·평화체제
- 평화·공생·기후협력 공고화를 위한 동아시아-국제사회 새 질서 기반 형성
- 인간안보, 공동안보로 진짜 안보 달성

□ 이행방법

-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재개와 본격화
 - 남·북·미·중 4자 정상의 '평화선언' 추진
 - 평화선언의 주요 내용
 - 북한의 핵활동 동결-대북제재 완화 등 초기 동시 행동 합의
 - 4자 평화회담 개시
 - 비핵화-평화체제 전환의 단계적·병행적 추진 원칙 확인
 - 상대체제 존중-흡수통일 및 무력에 의한 전복 정책 완전 폐기
 - 전쟁 불가와 무력증강 대결 중단
 - 4자 평화회담 통해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추진과 달성 : 북·미에 맡겨두지 않고 한국도 중요 주체로 참가
- 흡수통일 배격, '평화적 공존', '과정으로서의 통일'의 원칙 제도화
 - 평화와 협력의 제도화-향구화, 점진적 과정으로서의 통일, 평화적 통일의 정신과 내용을 큰 기조로 하는 남북기본협정 체결, 국회에서 비준 동의
 - 경협이 정치·군사적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일부에게만 대박이 아니라 노동자, 청년 등 대다수에게 이익이 되도록 '남북경제사회협력강화협정' 체결, 국회에서 비준 동의

- ◎ 군비증강 대결 중지 + 기후위기 협력 증진의 ‘그린 데탕트’ 추진
 - 남북 군비증강 대결 중지와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 산림협력 등을 결합한 ‘(신) 한반도 그린 데탕트’ 제안, 공동 청사진 마련
 - ‘동아시아 그린 데탕트’ 추진
 - 6자회담 핵심 의제로 기후위기와 군비증강 대결 극복을 위한 협력 기제로서 기후위기 극복 탄소감축에 군사부문 활동도 포함
 - 군비증강 대결 중지
 - 과도하고 불필요한 전력증강계획 수정 (경향모와 항모전단 중단 등)
 - 병사 봉급 인상 등 장병 복무 여건 개선 증액 외 불필요 예산 감축
 - 동결 및 감축 예산(2021년 국방비 수준 동결 시 5년간 약 51조 원)을 청년 복지예산, 기후위기 대처, 남북협력기금 등으로 활용
- ◎ 구태의연한 안보정책 전환, 인간안보-공동안보로 전환
 - 청년 남성과 그 부모, 병사와 하급 간부의 희생을 강요하는 국가안보로부터 원하는 청년에게 기회가 되고 ‘제복 입은 시민’이 주역과 목적이 되는 ‘인간안보’로 전환
 - ‘한국형 모병제’ 도입-30만 명 정예강군 달성
 - 병사에게 최저임금 보장 등 ‘군 장병이 행복한 병영’
 - 경향모·핵추진잠수함 등 ‘안보 사치’, 보수 정부 능가 군비증강에 대한 북의 맞대응에 따른 ‘안보 딜레마’에서 벗어나 상대의 안보 우려 인정, 협력 통해 모두의 ‘공동안보’ 달성

□ 이행기간

- ◎ 임기 내, 한국형 모병제의 경우 2030년대 완전모병제 완료

□ 자원조달방안 등

- ◎ 불요불급한 군비증강 중지 및 병력감축 등으로 예산 절감
- ◎ 일반회계 및 남북협력기금 활용

제20대 대통령선거 정당정책 모음집



국민의당

국민의당

No.	정 책
1	5·5·5 신성장전략으로 미래먹거리와 청년일자리 창출하겠습니다
2	자주·실용·평화 책임외교전략으로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하겠습니다
3	공적연금 통합하여 청년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겠습니다
4	코로나19 자영업 영업시간 제한 폐지하고 150조 손실보상하겠습니다
5	반값 토지임대부 '안심주택'으로 내집마련 시대 열겠습니다
6	부모찬스 수시 폐지하고 학제개편으로 창의적 미래교육 하겠습니다
7	강성 귀족노조 혁파하고 공정 시장경제 확립하겠습니다
8	생애주기별 안심복지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9	책임총리-책임장관제로 제왕적 청와대정부 혁신하겠습니다
10	기후위기시대 탄소중립 추진하고,스마트 농어촌으로 식량주권 지키겠습니다

정책순위

1

5·5·5 신성장전략으로 미래먹거리와 청년일자리 창출하겠습니다

정책분야 경제, 과학기술

□ 목 표

- 대한민국을 세계 5대 경제강국(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으로 도약
- 인공지능 선도국가, 반도체 패권국가, 백신 주권국가화

□ 이행방법

- 5-5-5 신성장전략 추진
 - 5대 초격차기술(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차세대 원전 SMR, 수소에너지, 바이오산업) 육성
 - 5개 삼성전자급 글로벌 선도 대기업 육성하여 미래먹거리와 일자리 창출
 - 세계 5대 경제강국(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진입
- 과학경제강국 위한 정부조직 개편
 - '과학기술부총리' 직 신설
 - 대통령 직속 국가미래전략위원회 설치
 -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을 수석비서관급으로 조정
- 국가과학기술체계 구축과 지원사업
 - 「국가미래전략산업지원특별법」 제정
 - 국내 연구개발비 비중 임기 내 GDP 5%까지 확대
 - 2조 원의 '초격차 펀드' 조성
 - 초격차 분야 벤처기업 법인세 면제, 투자 규모의 50% 세금감면
- 4차 산업혁명 인재양성 및 확보
 - 5대 초격차 분야 핵심인재 50만 명 추가 양성
 - 4차 산업혁명 관련 특수목적고 17개 시도에 신설
 - 산학협력 기반으로 AI 등을 특성화한 대학 신설, 전액 국가장학금 지급
 - AI, 반도체 분야 우수인재를 전문연구요원으로 군복무 대체 프로그램 확대
 - 연구·기술인력 이민제도 도입으로 해외 우수인력 유치

- ◎ 포지티브 규제 →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전면적 규제혁명
 - 허용된 사업만 할 수 있는 ‘포지티브 규제’에서 → 금지된 것만 나열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규제 개혁
 - 「규제혁신법」 제정
 - 국무총리 직속 ‘규제혁신처’ 신설해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으로 구성

▣ 이행기간

- ◎ 과학경제강국 체계는 5년 내 완성
- ◎ G5 경제강국 진입은 10년 목표로 추진

▣ 자원조달방안 등

- ◎ 조직개편, 규제개혁을 우선적으로 하고, 예산비율 조정을 통해 추진

정책순위

2

자주·실용·평화 책임외교전략으로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하겠습니다

정책분야 국방, 통일, 외교통상

□ 목 표

- 북핵 폐기를 통한 ‘핵과 전쟁 없는 한반도’ ‘함께 사는 남북’
- 한미동맹에 기반한 국익 우선의 호혜적인 4강외교
- 스마트 과학강군 육성 및 선진병영 추진

□ 이행방법

- 북한 핵 위협에 대항하는 ‘한미 핵공유협정’ 추진
 -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한 한미동맹 통한 억제력 확보
 - 핵실험 재개나 미사일 발사 등 무력도발은 국제사회와 원칙 있게 강력대응
-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완성하고 사드 추가배치 검토
 - 상층방어망으로 주한미군 사드 40~150km 방어와 하층 방어망으로 L-SAM 40~70km, 신형 패트리어트 PAC-3 35km, 천궁2 10~20km 다층방어망 구축
- 준모병제 기반 스마트 과학강군 육성하여 강력한 안보태세 확립
 - 국방개혁 1호 조치로 국방부장관을 민간인으로 임명
 - 육군 위주의 병력구조를 첨단과학기술 공군·해군·해병대 비중 확대
 - 최첨단 무기체계 운영하는 전문부사관을 전체병력의 50%로 단계적 확대
 - 하이(high)급 전투기 도입하여 강력한 공군력으로 한반도 제공권 완전장악
- 탈피오트식 선진병영으로 재정립하고 사회진출지원금 1천만원 지급
 - 인공지능·로봇 활용해 과학적 경계시스템 구축하고, 테니스병, 관사병, 잡초병, 붕어빵병 등 불필요한 잡무 없애고 세탁, 조리 등 아웃소싱
 - 이스라엘 ‘탈피오트’ 벤치마킹해 병역을 자기계발의 시간으로 활용
 - 국방의무를 다한 청년들에게 1천만 원의 사회진출지원금 지급

- ◎ 한미동맹에 기반한 국익 우선의 호혜적인 4강외교
 - 2021년 5월 한미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을 완전하게 이행
 - 한중관계 회복 위한 3불정책 폐지와 호혜적인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 확립
 - ‘김대중-오부치 성명’ 정신에 기반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복원
 - 한러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와 북방경제협력 강화
- ◎ ‘핵과 전쟁 없는 한반도’ ‘함께 사는 남북한’ 정립
 - 북한과 대화는 진정성 있게 추진하되, 핵실험 재개, 미사일 발사 등 무력도발은 국제사회와 연대, 원칙 있고 강력하게 대응
 - 비핵화 진전될 경우 대한민국·북한·미국·중국·일본·러시아·기타 EU 국가들이 참여하는 국제 컨소시엄 구성 통해서 북한개발 추진
- ◎ 군인권 보호 및 기강 확립
 - 평시 군사법원 폐지로 군 내의 각종 범죄 근절 및 군인권 보호
 - 군 내 성폭력 및 인권 전담기구 설치해 각종 폭력사건 일벌백계

▣ 이행기간

- ◎ 5년 임기 내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 전역 장병 사회진출지원금(22만9천명 기준) 2조2,900억원 소요
- ◎ 방산비리 근절 및 세출예산 조정으로 조달

정책순위

3

공적연금 통합하여 청년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겠습니다

정책분야 복지

□ 목 표

-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특수직역간 불평등 해소
- 국민연금의 2055년 고갈과 2088년 1경7000조 원 적자 문제 해결
- 1990년 이후 출생 청년과 미래세대도 연금 받을 수 있는 구조 구축

□ 이행방법

- 일반국민과 공무원도 평등한 동일연금제(Common Pension) 추진
 - 베이비부머 1955년생 공무원연금 수령자와 국민연금 평균 수령자 간의 평균 257만 8000원 대 52만원 수령하는 불평등한 현실 개혁
 - 보험료 납부율, 국가·사용주의 부담비율, 소득대체율, 연금개시 연령 등 지급요건이 다른 재정설계 구조를 국민연금 기준으로 일원화
- ‘지속 가능한 통합국민연금법’ 제정
 - 공적연금 체제를 국민연금 단일체제로 개편
 - 평등하고 지속 가능한 공적연금 개혁 로드맵 제시
- 제도 개편 이전의 기득권 인정
 - 제도개혁 이후 가입시점 관계없이 동일한 제도 적용, 세대간 형평성 확보
- ‘범국민 공적연금 개혁추진회의’ 구성
 - 여야 정치권, 중립적인 시민사회, 연금재정 전문가로 구성
 - 연금 통합운영의 구체적 기준설계 및 국민께 투명한 공개

□ 이행기간

- 대통령 임기 내 국민연금 단일체제로 개편

▣ **재원조달방안 등**

- 법률 개정과 사회적 합의 사항으로 추가 재원 소요 없음

정책순위

4

코로나19 자영업 영업시간 제한 폐지하고 150조 손실보상하겠습니다

정책분야 보건의료, 경제

□ 목 표

- ‘정치방역’ 중단하고 ‘과학방역’ 추진
- 자영업자 영업시간 제한 폐지하고, 자영업·소상공인 손실보상
- 국가 중앙감염병전문병원(4차병원) 건립하고 백신 주권국가 추진

□ 이행방법

- 과학적 방역체계와 병상·의료인력 확보
 - ‘국민참여형 방역’ 앱으로 셀프 역학조사와 실시간 확인
 - 대형 전시시설, 체육관, 종합운동장 등 이동형 야전병원 설치로 병상 확보
 - 국가 중앙감염병전문병원(4차) 건립과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지방의료원 네트워크 체계 구축
- 자영업자 영업시간 제한 폐지
 - 방역패스 적용과 자영업 영업시간 제한은 이중규제이므로 폐지
 - 과학적 밀집·밀접·밀폐기준으로 자영업자 영업시간 제한 폐지
- 150조원(5년) 특별회계 확보하여 자영업·소상공인 충분한 손실보상
 - ‘코로나19 특별회계’ 제정,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 정부의 영업제한 시 법률로 자영업자 손실보상 의무화
 - 숙박, 여행, 공연·전시 등 손실보상법 제외업종을 포함한 손실보상
 - 국세청 자료에 기반하여 손실액 추계, 고정비의 80% 수준까지 지원
 - 자영업자 대출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인상 전 대출금리 적용
- 백신 미접종자 차별 철폐, 부작용은 100% 정부가 책임
 - 임신부, 특이체질 등 백신접종 어려운 분들 PCR 검사서로 대체
 - 백신의 각종 부작용 100% 정부가 책임

□ 이행기간

- 취임과 동시에 즉시 추진하고 나머지는 임기 내 완료

□ 자원조달방안 등

- 코로나19 특별회계(연간 30조 5년간 150조원)
 - 부가가치세의 10%와 개별소비세의 10%를 세입재원으로 매년 7조 원 (5년간 35조 원) 이상 확보
 - 정부 지출 구조조정으로 매년 약 10조 원(5년간 50조 원) 마련
 - 정부 인력 자연적 구조조정으로 매년 3조 원(5년간 15조 원) 이상 확보
 - ‘민관합동 조세특례 평가위원회’ 구성, 조세제한특례법 상의 불필요한 조세특례 일몰, 개별세법상 조세감면 정비로 매년 5조 원(5년간 25조 원) 이상 확보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시적 특별 복권 ‘(가칭)코로나19 퇴치복권’ 발행, 매년 1조 원(5년간 5조 원 이상) 수익금을 특별회계 세입 예산으로 확보
- 「감염병예방법」 개정
- 「코로나19 특별회계 설치에 대한 특별법」 제정

정책순위

5

반값 토지임대부 ‘안심주택’으로 내집마련 시대 열겠습니다

정책분야 경제, 복지

□ 목표

- 실수요자에 내집마련 기회 제공, 자가 보유율을 80%로 확대
- 청년과 서민 그리고 사회적 약자의 주거복지를 강화
- 부동산 투기 근절

□ 이행방법

- 5년간 전국에 주택 총 250만 호 공급
 - 토지임대부 안심주택으로 반값 주택 100만 호 공급
 - 반값 토지임대부 안심주택 50만호 청년에 우선 공급
- 초고층 주상복합형 ‘청년 캠퍼스’ 공급
 - 청년 캠퍼스는 서울과 지역별 도심에 용적률 상향으로 공중도시 건설
 - 저층과 지하에는 청년의 혁신과 도전을 위한 구글캠퍼스형 창업공간 + 지역주민과 함께 이용하는 문화예술, 체육 등 매력공간 배치
- 기준금리 수준의 45년 초장기 모기지론(주택담보대출) 제공
 - 대상 : 무주택 실수요자인 청년,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장기무주택자
 - LTV 80%+기준금리 수준의 이자+15년 거치 30년 상환
 - 전세 사는 청년들의 원금 분할 상환 의무화 폐지
-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적극 추진
 - 민관협력을 통한 재개발, 민간의 재건축을 활성화, 공공의 임대주택 건설로 역할을 분담해 공공성과 주거안정을 강화
 -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는 재건축사업은 용적률 상향조정
 -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지 않는 재개발사업에는 주민과 합의하여 용적률을 상향하는 대신 임대주택 공급비율을 높이겠음
 - 도심 아파트 리모델링 인허가 절차 간소화

- 부동산세(稅) 전면개혁
 - 실거주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취득세 100% 감면
 - 거래세 완화, 실거주 1주택자 재산세 감경, 다주택자에 누진과세 강화
 - ‘임대차 3법’ 개정, 계약갱신 연장 횟수만큼 임대인에 세제 혜택
 - 소득이 낮거나 없는 사람들의 종합부동산세를 집을 팔거나 상속·증여시 낼 수 있도록 ‘이연제도’ 도입
 - 지방정부가 지역별 실정에 맞는 부동산 정책 실행
- 부동산 청약제도에 ‘연령대별 쿼터제’ 도입
- ‘외국인 투기세’ 신설
 - 외국인 부동산 취득 후 비거주 시 취득가액 15% 부과, 재산세율 4% 증과
 - ‘외국인 부동산 취득 데이터 구축’으로 부동산시장 교란 파악, 강력 대응

□ 이행기간

- 임기 내 추진 및 완료

□ 자원조달방안 등

- 토지임대부 안심주택(임대·분양)은 택지비용 없이 건설비만으로 공급 가능
 - 국공유 유휴부지, 노후 공공청사, 국철·전철의 지하화를 통한 상부공간, 공공임대주택의 재건축과 리모델링, 공기업 미이용 부지, 지방이전 부지 등 활용
- 공공리츠(REITs) 및 주택도시기금으로 건설비 등 단기 건설자금 조달, 추가적인 필요 재원은 택지개발 및 주택개발이익 등으로 조달

정책순위

6

부모찬스 수시 폐지하고 학제개편으로 창의적 미래교육 하겠습니다

정책분야 교육, 인적자원

□ 목 표

- 부모찬스의 불공정한 대학입시, 취업으로 이어지는 기득권 대물림 개혁
- 1950년대 개도국 시대 낡은 학제 개편해 4차산업혁명시대 창의적 인재양성

□ 이행방법

- 부모찬스 수시 폐지, 정시 전면화
 - 일반전형 80%(절반은 수능 100% 전형+절반은 수능·내신 50%씩)
 - 특별전형 20%(사회적 배려계층 10%+특기자전형 10%)
 - 수능 연 2회(7월/10월) 시행, 높은 점수 반영
 - 민주화운동유공자 자녀 특별전형 같은 사회적 합의 없는 전형 폐지
- 로스쿨+사시제도 부활
 -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아도 '자격시험'을 통과하면 변호사시험 볼 수 있는 자격 부여
- 의학전문대학원 폐지
 -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의사 자격 보장하는 일은 없게 개혁
- 입시비리·채용비리 엄벌
 - 내신·스펙 위조 시 관련자는 업무방해 및 사문서위조로 강력한 형사처벌
 - 해당학생 입학 취소, 졸업자는 졸업취소 및 제적 조치
 - 대학 졸업 자격 기반으로 치러지는 모든 면허, 자격시험 자동 무효화
 - 허술한 입시관리 책임으로 대학은 정원감축 및 국가지원 축소
- '고용세습 및 채용청탁 금지법'을 통해, 현대판 음서제도 타파
 - 「채용절차공정화법」(고용세습 및 채용청탁 금지법) 개정
 - 채용청탁, 고용세습 발각 시 채용 취소, 관련자 엄벌

◎ ‘학제개편’과 4차산업혁명시대 ‘미래교육콘텐츠’ 개혁

- 현재: 만 6세 시작, 초등 6년 → 중등 3년 → 고등 3년 → 대학 4년 학제 만 3세 시작, 유치원 2년 → 초등 5년 → 중등 5년 → 진로탐색학교/직업학교 2년 → 대학 4년으로 학제개편
- 국가교육위원회를 교사·학부모·학생·관료·전문가·여야 정치권 등으로 구성
- 매년 위원회에서 향후 교육체계 10년 합의
- ‘교육 통제부’로 불리는 교육부 폐지
- 교육청은 ‘교육지원처’로 재편, 국가교육위원회 결정 정책 지원
- 대학과 연구는 총리실 산하/소관부처로 이양해 대학 자율적 운영 확대
- 4차산업혁명시대 인성·적성·창의력에 중점을 둔 교육콘텐츠로 바뀌 미래인재 양성 교육

▣ 이행기간

- ◎ 2022년 관련 법령 개정안 발의, 2023년까지 입법 완료 목표

▣ 자원조달방안 등

- ◎ 학제개편은 국가교육위원회에서 합의과정을 거쳐 단계적 시행
- ◎ 입시제도 개혁은 직접적 예산소요 없음

정책순위

7

강성 귀족노조 혁파하고 공정 시장경제 확립하겠습니다

정책분야 경제

□ 목표

- 청년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강성 귀족노조를 혁파
-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성장의 기회를 찾도록 정부가 뒷받침
- 개미만 올리는 주식시장의 공정성 회복

□ 이행방법

- 강성 귀족노조 혁파
 - 노조 불법 집회, 고용세습, 채용 장사, ‘떼법’ 등 위법행위 처벌
 - 사업주가 불법 파업에 대해 기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 노동이사제 시행 전면 보류
 - 공무원, 교원 노조 타임오프제 법제화 반대하고, 무효와 조치
- 노동이사제 시행 전면 보류해서 민노총의 패악 근절
 - 노동이사제 도입되면 노사 공동책임에 따른 생산성 향상보다는 노사 야합을 통한 도덕적 해이와 방만 경영으로 철밥통만 더욱 단단해질 것이므로 전면보류
- 공무원, 교원 노조의 타임오프제(Time-off) 법제화에 반대
 - 매년 최대 627억 원의 국민 혈세 낭비되는 공무원·교원 노조 타임오프제 도입에 강력 반대
- 물적분할한 자회사를 상장하지 못하도록 ‘분할 상장’ 금지
 - 소액주주들을 피해자로 만들고 대주주만 이익 보는 분할 상장, 즉 물적분할 된 회사의 상장 금지
- 기울어진 운동장 공매도 제도 개혁
 - 공매도 철저히 전산화·시스템 구축하고 ‘불법 공매도 적발 모니터링 시스템’
 - 모든 공매도 감독하고, 불법 무차익 공매도를 근본적으로 방지
 - 연기금이 보유한 주식의 공매도용 대여 전면 금지

- 주식시장 공정질서 확립, 불법세력 엄단
 - 상시적인 불공정거래통합감시기구 설치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남부지검 합수단+금감원)
 - 인공지능을 이용한 차세대 불공정행위 감시시스템 구축

▣ 이행기간

-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업은 2023년까지 완비
- 규제개혁 등 법안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지속 추진
- 경제구조 틀 확립은 임기 내 완성

▣ 자원조달방안 등

- '연구개발비' 비중 임기 내 인당 GDP의 5%까지 확대 등 세출조정

정책순위

8

생애주기별 안심복지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정책분야 재정, 경제, 복지

□ 목 표

- 출산~보육 국가책임제
- 절대빈곤 없는 안심공동체 대한민국
- 어르신과 장애인이 살기 좋은 나라

□ 이행방법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중위소득 40% 수준으로 상향하여 절대빈곤 탈출을 돕겠습니다.
 - 생애주기 안심복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의료급여와 주거급여, 노인 대상의 기초연금 등의 효과적인 정책 조합 추진
 - 생계급여·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중위소득 40% 이하 약 50만 명 비수급 빈곤층 혜택
 - 고의적으로 7년 이내 자산·소득 빼돌리면 수급자격 박탈, 지원액 추징
 -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근로장려제도 강화로 탈수급 유도
- 반값 공공 산후조리원 대량 설립
 - 전국 기초지자체별 반값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 설립 예산은 전액 국비 충당, 운영예산은 국비 최고 80%까지 지원
- 공공보육시설 아동수 대비 70%까지 확대
 - 2027년 임기 말 공공보육 이용률 70%, 국공립어린이집 10,845개 확충
 - 말을 배우는 아이들, 보육교사, 가정에 투명마스크 지급
- ‘한국형 전일제 학교’ 도입
 - 방과후 7~8시까지 4차산업혁명시대 인재양성 프로그램(코딩, 외국어) 운영

- ◎ 탈모약 가격을 반값으로 제공
 - 카피약 가격을 낮춰 저렴한 처방, 건강보험료 재정건전성 확보
 - 탈모에 대한 보건산업 연구개발 지원 대폭 확대
- ◎ 정신건강 국가책임제 실시
 - 정신건강 의료비 90% 건강보험으로 보장, 본인 부담상한제 실시
 - 강제 입원 권한은 지자체장이 아닌 전문가위원회로 이관
 - 전 국민 건강검진에 정신건강 검진 추가해 우울증 고위험군 연계 치료
- ◎ 어르신 일자리·건강·안전 적극 지원
 - 손주돌봄수당 신설, 어르신이 돌보는 아이 한 명 당 매달 20만 원씩 지원
 - 경로당을 실버건강센터로 바꿔 어르신들의 건강한 생활 지원
 -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추진
 - 공공병원부터 어르신 간병비 제로 실현
 - 독거노인들의 안전을 위해 미래형 노인돌봄서비스 체계 구축
- ◎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주거·교통·안전 보장
 - 장애인연금 지급 기준인 소득하위 70% 규정완화, 월 40만 원 보편적 지급
 -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장애인 특별공급 확대
 - 주택개조~원상복구 비용까지 보조금 지원
 - 교통 바우처 제공 등 장애인 이동권 보장
 - '사물인터넷형 안심서비스' 지원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 이행기간

- ◎ 임기 5년 동안 전국적으로 확대

▣ 재원조달방안 등

- ◎ 생계급여·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소요되는 재정 3~5조 원

정책순위

9

책임총리-책임장관제로 제왕적 청와대정부 혁신하겠습니다

정책분야 정치, 행정, 사법

□ 목 표

- '청와대 정부'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하여 대통령의 위상과 역할 재정립
- 공수처 폐지, 검경수사권 재조정, 정치검찰 퇴출

□ 이행방법

- '안철수 행정부'의 광화문대통령시대
 - 정부 명칭을 '안철수 정부'가 아니라 '안철수 행정부'로 명시
 - 광화문에 있는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 대통령 집무실 설치
 - 대통령 비서실 직원과 예산 절반으로 축소
 - '여야정 협의체' 실질화와 정치보복 금지
- '국민통합내각' 구성
 - 정파를 가리지 않고 유능한 인재를 등용
 - 국무총리, 국무위원, 기타 장관급 인사는 연합정치 정당에서 추천
- 책임총리제·책임장관제 보장
 - 국무총리와 장관들에게 권한과 책임 부여
 - 대통령은 외교안보와 국가 전략적 과제에 집중
 - 수석보좌관 회의가 아닌 국무회의 중심의 국정운영
 - 정치 관료 아닌 전문성을 가진 정통 직업 관료와 전문가가 공직사회 중심
- 대통령 임기 중반 재평가
 - 여야가 합의하는 조사 방법으로 국민의 신뢰 50% 이상 받지 못하면 사퇴
- 비대해진 정부와 공공기관 슬림화
 - 정부·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객관적인 조직경영 진단
 - 슬림하고 스마트하게 일하는 정부조직으로 혁신

- ◎ 국민에 봉사하는 책임정치 추진
 - 기초단체 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 폐지
 - 재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정당 무공천, 선거비용 모두 부담
- ◎ 권력기관의 정상화
 - 공수처 즉시 폐지
 - 경찰에 수사권 부여와 검찰의 수사지휘권과 기소권 부여
 - 금융·마약범죄 등 첨단범죄 대응 위해서 전문수사국 설치

▣ 이행기간

- ◎ 청와대 조직개편과 행정부 구성, 공수처 폐지는 집권 즉시
- ◎ 입법 사항은 국회와 협력하여 최대한 빠르게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 추가적인 재정소요 없음

정책순위

10

기후위기시대 탄소중립 추진하고, 스마트 농어촌으로 식량주권 지키겠습니다

정책분야 경제, 환경

□ 목 표

- 원자력에너지-신재생 등 에너지믹스로 2050 탄소중립 달성
- 국민건강과 식량주권을 지키는 '스마트 농어촌' 건설

□ 이행방법

- '혁신형 차세대원전(SMR) 기술개발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추진
 - 세계 최고 원전기술로 탄소배출 없이 안정적 에너지 확보
- 신한울 3·4호기 즉시 공사재개
 -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건설 중단에 따른 피해지원
- 한미 원자력협력 강화로 평화적 핵주권 확보
 - 파이로프로세싱(Pyroprocessing)으로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 사용후핵연료 대폭 감소시켜 관리문제 해소
- '기후위기법' 제정하고 '국가기후위원회' 설치
 - 에너지믹스로 △에너지 주권 확보 △경제성장 △탄소중립 실현
-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자원에너지부'로 개편
 - 산업과 에너지의 융합전략 초점을 맞추고 효과 극대화
 - 2018년 대비 40%인 2030년 NDC 재조정
 - 산업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기술 개발로 탄소중립
- 헌법의 '국가의 농업보호 및 육성 의무' 이행
 - 공익형 직불제 세분화, 선택형 직불제 다양화로 농가소득 안정
 - 장기 곡물 수급대책 수립, 곡물 자급률 목표치 설정으로 식량주권 확보
 - 계약재배 확대와 유통정보 제공으로 농산물가격 안정
 - '농업인력 충원기구' 설치 및 농업인력 확보

- 기후위기 시대 「농업재해보상법」 제정해 농작물재해보상의 공공성 강화
- GMO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으로 먹거리 기본권 보장

▣ 이행기간

- ◎ 2050 탄소중립 달성 위해 정권이 바뀌어도 이행될 수 있는 과학적 기반 마련

▣ 재원조달방안 등

- ◎ 재정지출 합리화 및 세출조정
- ◎ 탄소중립을 위한 과학기술 개발비용은 국내 연구개발비 확대

제20대 대통령선거 정당정책 모음집



기본소득당

기본소득당

No.	정 책
1	당신이 누구든 매달 65만 원 기본소득
2	토지세 기본소득 패키지로 부동산 불평등 해소
3	누구나 나답게 사는 성평등 사회
4	민주주의 기본소득으로 시작하는 정치개혁
5	기본소득 그린뉴딜로 2050 탄소중립 달성
6	공공사회서비스 강화로 모두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나라
7	공정한 디지털 혁신을 위한 기본소득 디지털뉴딜
8	디지털 전환에 발맞춘 사각지대 없는 노동권 보장
9	생태 위기를 극복하는 모두를 위한 공존 사회
10	국민을 위한 재정·통화제도 민주화

정책순위

1

당신이 누구든 매달 65만 원 기본소득

정책분야 재정, 경제, 복지

□ 목 표

- 전국민 기본소득 도입을 통한 불평등 해소
- 기본소득 목적세(탄소세/토지세) 도입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과 부동산 불평등 해소

□ 이행 방법

- 전국민 기본소득 시행
 - 월 65만 원의 기본소득 지급
 - 지식공유부에 대한 목적세로 시민세 도입,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를 통한 세수 마련
 - 기본소득 목적세(토지세/탄소세) 도입을 통한 교정 효과와 세수 확보

□ 이행 기간

- 2022년 준비 거쳐 2023년 월 40만원 시작으로 2026년 월 65만 원 지급

□ 자원조달방안 등

- 교정조세형 목적세(토지세/탄소세) 도입
 - 토지세 도입
 - 현행 종합부동산세를 대체하는 토지세, 모든 민간보유 토지에 공시지가 기준으로 개인 0.8%~1.5%, 법인 0.5%~1.3%의 3단계 누진세율로 토지세 부과
 - 2023년 37.5조 원에서, 2026년 44.2조 원의 토지세 세수 확보
 - 탄소세 도입
 - 화석연료 에너지 전체에 대해 2023년 1이산화탄소환산톤(tCO₂eq.) 당 6만 원 부과,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세율을 2030년까지 점진적 인상
 - 2023년 42조 원에서, 2026년 53.6조 원의 탄소세 세수 확보

- 지식공유부 기반 시민세 도입
 - 모든 소득 원천은 사회구성원 전체의 기여로 형성된 지식이 상당한 기여
 - 양도소득세 제외한 가계의 모든 법적 소득과 2021년 과세대상 상속증여가액에 대해 10% 단일세로 시민세 도입
 - 2023년 시민세 세수는 66조 원, 2026년 146.6조 원 추산
-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 비과세/감면제도 중 소득 보전의 성격이 있거나 고소득층에게 유리한 세제감면의 정비 개혁
 - 소득세 감면제도 정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통합, 기타 세제 개혁
 - 2023년 91.5조 원, 2026년 113.8조 원 추계
 - 공공부조 수당 등 현금 복지를 기본소득에 단계적으로 통합 추진
- 기본소득의 과세소득화
 - 기본소득 지급액을 과세소득화함으로써 재분배 효과를 높임
 - 세수는 기본소득 월 40만원 지급하는 2023년 20.1조원, 월 65만원 지급하는 2026년 42.1조원으로 추계
- 기존 현금복지급여의 조정
 - 기본소득 지급과 함께 기존의 현금복지의 일부를 기본소득에 통합함
 - 아동수당, 구직촉진수당을 포함한 제반 일자리 보조금 성격 급여는 2023년 폐지
 - 생계급여는 무소득 1인 가구 기준 2023년에 35만원, 2026년 28만원으로 감소 지급 이후 단계적 폐지, 기초연금은 2023년 20만원, 2026년 15만원으로 축소 지급후 이후 단계적 폐지
 - 기존 현금복지급여 조정에 의한 재원 절감분은 2023년 33.2조원, 2026년 44.4조원으로 추계

정책순위

2

토지세 기본소득 패키지로 부동산 불평등 해소

정책분야 재정, 경제, 복지

□ 목 표

- 부동산 불평등 해소 및 가격의 하향 안정화
- 부동산 지대경제 경제에서 혁신 경제로의 전환
- 토지임대부 주택 확대와 주거복지 강화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 보장

□ 이행 방법

- 기본소득 토지세 도입
 - 현행 종합부동산세 폐지, 모든 민간 보유 토지에 대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토지세 부과, 토지세 세수 전액은 기본소득으로 지급
- 공공환매 조건부 토지임대부 개발
 - 공공개발 시행 시 주택 및 산업/상업단지에 토지를 제외한 건물만 분양
- 토지주택은행의 설립
 - 현행 토지비축제도를 토지주택은행제도로 개선. 토지에 대한 매입/매각 등을 통해 공공개발 사업과, 부동산시장 안정 목표
- 주거복지의 강화
 - 10년 내 공공임대주택 비율 15% 달성 목표
 - 사회통합형 공공임대주택 확대
 - 공공임대주택 주거비 인하
 - 최저주거기준을 현행 유도주거기준(국토교통부)으로 확대시행
- 개발이익 환수제도 정비
 -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이윤 제한
 - 개발부담금 부담률 상향 등 개발이익환수 강화

▣ 이행 기간

- 토지세 기본소득
 -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제정 및 관계법령 정비, 2023년부터 토지세 기본소득 시행
- 토지임대부 개발
 - 2023년부터 2025년까지 50만 호 이상 토지임대부 주택공급
 - 공공이 개발하는 분양상가/산업단지의 경우 전면 토지임대부 개발방식 도입
- 토지주택은행 설립
 - 「토지주택은행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정
 - 적극적인 토지비축·판매 등의 역할을 통한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한 관계법률 정비
- 주거복지 강화
 - 2032년 공공임대주택 15% 달성 목표(연간 20만 호 공공임대주택공급)
 - 최저주거기준 관계법령 개정을 통한 최저주거기준의 현실화
- 개발이익환수제도 개선
 - 「도시개발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 정비후 시행

▣ 재원조달방안 등

- 토지세 기본소득 : 현행 종합부동산세를 대체하는 토지세, 모든 민간보유 토지에 공시지가 기준으로 개인 0.8%~1.5%, 법인 0.5%~1.3%의 3단계 누진세율로 토지세 부과, 재산세 토지분은 차감
 - 2023년 37.5조 원에서, 2026년 44.2조 원의 토지세 세수 확보
- 토지임대부 개발-토지주택은행 : 연간 2조 원의 토지주택은행 재원 조성, 정부와 국민연금과 도시주택기금, 일반 국민들의 투자 참여 및 임대수익 배당
- 주거복지강화 : 토지주택은행과 연계하여 사업시행, 연간 30조 원(22' 정부 예산 대비 1.5배 증가)

정책순위

3

누구나 나답게 사는 성평등 사회

정책분야 정치, 행정, 사법

□ 목 표

- 성범죄-여성폭력 근절
- 성과 재생산 건강권 보장
- 노동시장 성별 불평등 해소 및 모두돌봄사회 구축
- 다양한 가족구성권 보장
- 온라인 혐오 표현 없는 사회

□ 이행 방법

- 성범죄·여성폭력 근절
 -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개정, 불법촬영물 선제적 삭제 및 지원 예산 확대
 - 스토킹, 교제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 범위에 권력형 성범죄 명시, 업무상 위계 성폭력 적용 범위 확대
 - 국방부 산하 성범죄 전담기구 신설 등 조치로 군대 내 성폭력 근절
 - 피해자 중심 사건 처리지침 마련
- 성과 재생산 건강권 보장
 - 임신중지 의료 급여화 및 건강보험 전면 적용
 -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임신·출산 부문 건강보험 급여 항목 확대
 - 모든 여성 국민 대상 무상 월경용품 지급
 - 성소수자 친화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모델 구축
 - 포괄적 성교육 도입
- 성평등 노동과 돌봄
 - 「성별임금평등법」제정으로 성별임금공시, 채용성차별, 성별임금격차 해소

- 기본소득과 주3일 휴식제 도입을 통한 획기적인 노동시간 단축으로 평등한 돌봄을 위한 환경 조성
- 전국민 육아휴직 급여 최소 150만 원 보장
- 가족돌봄휴가 확대 및 유급화 시행
- ◎ 차별금지법 제정 및 다양한 가족구성권 보장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 민법,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으로 다양한 가족구성권 보장
 - 생활동반자법 도입 및 동성결혼 법제화
 - 1인 가구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적 정비
- ◎ 온라인 혐오 표현 규제
 - 차별금지법의 일부 조항을 통해 혐오 표현 직접 규율
 - 「혐오표현 대응법」 제정 및 (시민사회 자율규약으로서) 혐오표현 대응 행동강령 제정

▣ 이행기간

- ◎ 관련 법률 및 정책 2022년 임기부터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 무상 월경용품, 가족돌봄휴가, 전국민 육아 급여
 - 정부의 일반예산으로 편성

정책순위

4

민주주의 기본소득으로 시작하는 정치개혁

정책분야 정치, 행정, 사법

□ 목 표

- 정치적 대표성이 평등하게 보장되는 선거제도 개혁
- 정치 참여와 표현의 자유, 정치 약자 보호적인 공직선거법 개정

□ 이행 방법

- 평등한 정치참여의 전제조건, 민주주의 기본소득 시행
 - 모든 18세 이상 유권자에게 정치인, 정당에 후원할 수 있는 1만 원의 정치기본소득을 소멸성 디지털 화폐(CBDC) 방식으로 지급
 - 공직선거가 있는 시기 공직선거 당 1만 원 추가 지급
 - 후원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민주주의 기본소득 후원금액의 30%를 민주주의 참여소득으로 지급
- 국회의원 및 지방 광역의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 국회의원: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 지역구 의석과 비례의석을 각 253석으로 하여 총의석수 506석으로 함
 - 봉쇄조항을 폐지하고 정당에 대한 비례의석 배정을 1/의석수%로 함
 - 의석수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증원하되 세비, 보좌진 등의 각종 특권과 특혜를 줄여 관련 예산이 늘어지지 않도록 함
 - 지방의회: 광역의회 전면비례대표제로 하고, 기초의회는 1개 선거구에 3~4인 중심으로 뽑는 중대선거제 중심으로 개편
 - 대통령-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 정당정치의 다양성 보장
 - 선거 시기에만 2개 이상의 정당이 연합단일정당으로 후보를 내세워 경쟁하는 선거연합정당 허용
 - 정당설립요건 규정 폐지, 지역당 허용
 - 소수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자에 대한 공정한 언론 접근 보장

- 유권자의 선거운동과 정치 표현의 자유 확대
 -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한 규제 완화
 - 선거에서 정치표현의 자유 확대
 - 국가상설공론화위원회 설치

- 평등한 참정권 보장
 - 공직선거일의 유급휴일화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투표권 보장
 - 장애인 투표 접근권 보장
 - 발달장애인의 투표권 보장을 위한 시스템 마련
 - 투표소 접근권 독소조항 폐지, 장애인 접근권이 가능한 투표소설치 의무화
 - 시각·청각장애인의 투표권 및 정보접근권 보장
 - 교사/공무원의 정치 참여 보장
 - 정당가입 및 정치적 발언의 자유 확대
 - 청소년 참정권 확대
 -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의 정당가입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폐지
 - 교육제도 상 '모의투표' 허용 및 시행을 위한 교육지침 개정
 - 정치권 내부 성별 불균형 개선

□ 이행기간

- 관련 법률 및 정책 2022년 임기부터 추진
- 차기 국회의원 선거에서부터 선거제도 개혁안 적용

□ 재원조달방안 등

-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따라 입법연구-정책시행 비용을 정부일반예산 편성

정책순위

5

기본소득 그린뉴딜로 2050 탄소중립 달성

정책분야 보건의료, 환경

□ 목 표

- 탄소세 기본소득 도입과 공유지분형 그린뉴딜, 녹색금융 시행으로 탄소중립 목표 달성

□ 이행 방법

- 기본소득 탄소세 도입
 - 화석 에너지 전체에 대해 탄소세 도입과 세수의 기본소득 배당
 - 2030년 탄소배출량 50% 감축을 목표, 화석 에너지 전체에 대해 1이산화탄소상당량톤 당 2023년 6만원, 2026년 9만원의 탄소세 부과
 - 탄소세의 소득 역진성을 방지하고, 탄소중립 목표에 부합하는 높은 수준의 세율 부과를 위해 탄소세 세수를 기본소득으로 지급
- 기본소득 그린뉴딜
 - 「디지털·녹색 전환과 이익 공유를 위한 뉴딜기금법」 제정
 - 그린뉴딜기금의 목적을 기후위기 극복 및 생태사회 전환과 그 혜택의 국민 환원으로 규정
 - 기금 수익의 국민 배당 원칙을 규정함
 - 500조원 규모 그린뉴딜기금 설치
 - 2023년부터 2026년까지 각각 500조 원의 기금마련을 통해 그린 산업과 기술에 대한 대규모 공공투자 진행
 - 그린뉴딜기금의 투자 대상은 재생에너지 체제 전환을 위한 녹색 산업과 기술 전체
- 녹색금융 및 녹색 양적완화 시행
 - 은행의 기업 대출에 기업의 탄소중립 기여도 반영, 기후변화 관련 기업의 재무정보 의무 보고제 시행 등 녹색금융 도입
 - 50조원 규모 녹색 양적완화 시행
 - 한국은행법 제75조를 활용 중앙은행이 정부로부터 녹색 국채를 직접 매입
 - 정부가 녹색 국채로 조달한 자금은 그린뉴딜기금 재원으로 활용

◎ 탈석탄-에너지 전환 로드맵 수립

- 2030년 탈석탄 시행, LNG화력발전 대체없는 재생에너지 30% 달성
- 수송부문 탄소배출제로 로드맵, 내연기관자동차 감축 및 전기차 비중 확대
-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확대로 전국적 전력 수요관리 및 에너지 효율화
- 핵발전의 조속한 폐기
 - 우라늄 발전원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 폐기, 핵발전 위험부담금 산정
 - 핵발전 위험부담금은 핵발전소 중단 비용 및 가동 중 핵발전소의 내진 및 안전설계 확보에 사용

▣ 이행 기간

◎ 기본소득 그린뉴딜기금

- 2023년부터 2026년까지 그린뉴딜기금 500조 원 마련
- 2027년부터 조성된 기금 중 차입금 상환 및 전국민 배당 시작

◎ 녹색금융 및 녹색양적완화

- 2023년부터 2026년까지 50조 원 규모 녹색 자산 매입 시행

◎ 탈석탄-에너지 전환 로드맵

- 관련 법률 및 정책 2022년 임기부터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기본소득형 디지털·그린뉴딜 기금

- 한국투자공사(KIC) 운용자산 뉴딜기금으로 편입
- 국민연기금으로부터 차용하고 초기 자금 마련 후 순차적 상환
- 녹색 국채 발행, 통화제도 개혁을 통해 마련한 정부 재정 자금 투입

◎ 녹색금융 및 녹색양적완화

- 녹색금융은 비재정 공약, 녹색 양적완화는 녹색 국채 발행을 통해 재원 마련

◎ 탈석탄-에너지 전환로드맵

- 그린뉴딜기금 조성에 따른 투자 금액
- 입법연구-정책시행 비용을 정부일반예산 편성

정책순위

6

공공사회서비스 강화로 모두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나라

정책분야 재정, 경제, 복지

□ 목 표

- 소외받는 계층 없는 공공사회서비스의 재강화

□ 이행 방법

- 누구나 디지털, 디지털 기본권 구축
 - 디지털 전환 시기 필수재인 통신 데이터의 전국민 기본 5GB 무료 제공
 - 공공 WI-FI(와이파이) 관리시스템 정비 및 보안성 강화
 - 디지털 정보 케어 시행으로 노인 등 정보접근취약계층을 위한 디지털 포용 시행
- 돌봄 사회서비스의 공공화로, 탈시설-사회서비스 통합돌봄사회 구축
 - 탈시설-주거 지원에서 돌봄까지「통합돌봄법」제정
 - 돌봄비용 국가부담 원칙 수립
 - 사회서비스 공급체계 공영화
 - 사회서비스 산업 임금기준 마련 및 공공 고용인력 확대
-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동반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지원 사각지대 해소
 - 아동/청소년 관련 주거복지 강화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주거약자 항목 확대
 -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초를 반영한 「통합돌봄법」제정과 공적지원주택 확대
 - 현행 주거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 공공병상 30% 구축, 건강보험 보장성 80% 목표, 누구나 건강보장
 - 공공병상 및 의료 인력체계 개편으로 공공병상 30% 달성
 - 건강보험제도 보장성 강화 80% 달성
 - 「한국형 통합의료모델 제도」수립으로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 구축
-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혁
 - 주거급여 상 자기부담금 폐지

- 의료급여 상 부양의무제 완전 폐지
- 긴급생활지원제도 예산을 의무지출 예산으로 편성 확대

▣ 이행기간

- 관련 법률 및 정책 2022년 임기부터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따라 입법연구-정책시행 비용을 정부일반예산 편성

정책순위

7

공정한 디지털 혁신을 위한 기본소득 디지털뉴딜

정책분야 과학기술, 정보통신

□ 목 표

- 디지털 전환에 대규모 공공투자를 추진하고 그 성과가 국민 모두에게 귀속되도록 함
- 4차산업혁명 시기 새로운 자원으로 부상한 데이터에 데이터세를 부과해 세수를 기본소득으로 배당함으로써 데이터 경제의 성과를 모두가 공유함
-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반독점 규제 강화로 혁신 경제와 공정 경제의 기반 조성

□ 이행 방법

- 「디지털-녹색 전환과 이익 공유를 위한 뉴딜기금법」제정
 - 디지털뉴딜기금 500조원 조성하여, 디지털 산업과 기술에 대한 대규모 공공투자 진행
 - 메타버스, 디지털 트윈, 비대면 기술 인프라, 스마트 단지, 디지털 보안 강화 등 주요 디지털 분야 투자를 통한 경쟁력 제고
 - 2027년부터 디지털뉴딜기금 수익 일부를 전국민 기본소득으로 지급
- 기본소득 데이터세 도입
 - 데이터에 조세를 부과하여 세수를 기본소득으로 배당
 - 디지털 다국적기업에 대한 국제사회의 새로운 '디지털세' 합의에 의한 세수를 기본소득으로 배당
- 플랫폼 공정경제 수립
 -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지정제도 도입
 -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해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지정하고 원칙적으로 10년 유지
 -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는 인수합병(M&A)과 불공정행위 심사에서 경쟁제한성 입증 책임을 스스로 부담함(경쟁제한성 입증책임 전환)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온라인 플랫폼 입주업체 보호의무 강화

▣ 이행 기간

- 기본소득 디지털뉴딜기금
 -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디지털뉴딜기금 500조 원 마련
 - 2026년까지 투자 수익은 전액 기금으로 재투입
 - 2027년부터 조성된 기금 중 차입금 상환 및 전국민 배당 시작
- 기본소득 데이터세 도입
 - 법인세 또는 소비세 방식 중 적정 방법을 택하여 2023년부터 데이터세 부과하고 세수를 기본소득으로 지급
- 온라인 플랫폼 공정경제 수립
 - 관련 법률 및 정책 2022년 임기부터 추진

▣ 자원조달방안 등

- 기본소득 디지털뉴딜기금
 - 한국투자공사(KIC) 운용자산 뉴딜기금으로 편입
 - 국민연기금으로 초기자금 차용하고 순차적으로 상환
 - 국채 발행과 통화시스템의 주권화폐 전환을 통해, 차용액 상환 및 기금 규모 확장

정책순위

8

디지털 전환에 발맞춘 사각지대 없는 노동권 보장

정책분야 교육, 인적 자원

□ 목 표

- 기본소득과 함께 ‘주3일 휴식제’ 노동시간 단축
- 플랫폼 노동자 노동권 보장
- 노동시장 변화에 따라 부실화된 사회보험의 재강화
- 5인 미만 사업장, 현장실습 노동 등 취약 노동권 보호

□ 이행 방법

- ‘주 3일 휴식제’ 시행
 - 주 32시간제 + 연장근로 6시간 제한
 - 주간 표준 노동시간을 32시간으로 단축, 총 연장근로 허용시간을 주 12시간에서 주 6시간 이하로 단축
 - 유급휴가 연 30일제 시행
 - 1년 근무 이후 적용되는 연 15일 유급휴가를 연 30일로 연장
 - 매 2년마다 1일의 유급휴가 가산제도 없이 첫해부터 연 30일 고정
- 플랫폼 노동자 노동권 보장
 - 「플랫폼 노동자 권리법」제정
 - 플랫폼 노무제공자를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노동관계법 상 근로자로 당연 추정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성을 부인하려면 입증책임을 부담
 - 알고리즘에 의한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플랫폼 노동자의 설명을 들을 권리와 이의 제기 및 협상권 부여
 - 배달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권 강화
 - 배달 플랫폼 안전배달료 도입
 - 배달대행 사업자 등록제 도입
 - 이륜차 표준공임단가 도입, 오토바이 수리센터 자격증 및 등록제 도입

- 현행 특수고용노동자에게 적용되는 1:1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일반 노동자에 준하여 전액 사업자 부담 전환, 전속성 기준 폐지
- 감정노동자 보호법을 배달노동자 등 특수고용노동자에게도 적용

◎ 고용보험의 소득보험 전환

- 현 고용보험 상 제외되어있는 모든 취업자 대상의 소득보험제도 도입
 - 가입 대상은 모든 취업자 당연 가입으로 시행
 - 근로자에 대해서는 실업을 요건으로 하는 구직급여 지급, 그 외 모든 취업자(특수고용노동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에 대해서는 전년 동기 대비 30%의 소득감소를 소득급여 지급 요건으로 함
 - 소득보험 전환과 함께 현행 60% 소득대체율을 주요국과 비슷한 수준인 70%로 인상
 - 소득보험 전환과 함께 소득급여 상한을 최저임금의 1.2배로 정하여 인상

◎ 취약 노동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 「근로기준법」제11조(적용범위) 규정 삭제하여 사업장 규모에 따른 근로기준법 적용 차별 원천 폐지
- 현장실습제 폐지-직업계 고등학교 교육 정상화
 - 3학년 2학기 11월까지 기업체의 취업 관련 일체의 현장실습 폐지
 - 3학년 2학기 12월 이후부터 전국 동시 '직업계 고등학교 취업준비기간' 설정, 시험과 취업활동을 진행, 정식 취업은 졸업 이후 추진

▣ 이행기간

- ◎ 관련 법률 및 정책 2022년 임기부터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 소득보험
 - 고용보험제도 개혁을 통해, 소득보험료 재산정을 통한 소득보험재원 마련
- ◎ 기타 재원은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일반예산으로 확보

정책순위

9

생태 위기를 극복하는 모두를 위한 공존 사회

정책분야 보건의료, 환경

□ 목 표

- 생태적 한계 위기를 극복하고 모두의 공존을 위해 생명권과 존엄의 권리를 자연과 동물로 확장

□ 이행 방법

- 자연과 동물의 권리 보장
 - 동물과 자연의 권리, 공존의 가치를 헌법에 명시
 - 정치의 영역과 법정에서 대변될 권리 보장
 - 동물과 자연물도 특정 법적 권리를 소유한 법인임을 인정
 - 동물보호법을 동물기본법으로 개정
 - 반려동물 중심, 위반시 제재 경미 등 한계를 안고 있는 현행 동물보호법을 동물기본법으로 개정
 - 교육과정에서 동물실험 금지, 생명 윤리 및 생태 교육을 정규교육과정에 편입
- 생물다양성, 생태계 보전
 - 국제 수준의 법정 보호지역(육지, 해양) 30% 지정
 - 환경영향평가 독립기관 공탁제 도입
 - 대규모 어획, 남획을 금지하는 규제 시행
 - 신공항 건설 철회, 지역 난개발 중단
 - 지역 중심의 생태 참여소득 시행
- 순환경제시스템 구축
 - 국가단위 순환경제로드맵 수립
 - 폐기물 처리, 재활용 산업 등 순환 중심의 인프라 구축
 - 제품에 대한 순환형 설계를 중심으로 하는 제조업 구조 변환
 - 환경기초시설 공용화 및 쓰레기 처리 국가 관리체계 수립
 - 플라스틱 규제 정책 시행

- 공장식 축산 중단 및 탈육식 로드맵 수립
 - 축산동물 학대 행위에 실효성 있는 감시와 처벌 마련
 - 공장식 축산업 중단 및 점진적 폐지
 - 채식기반의 지속가능한 먹거리 정책 시행
- 야생동물 서식지 보전 및 거래 금지
 - 야생동물 보호구역 복원 및 확대
 - 야생동물 거래 금지
 - 민영 동물 전시 산업 금지, 공영 동물원을 야생동물 쉼터로 전환
- 동물 이용 산업 규제 및 축소
 - 반려동물 거래 원칙적 금지, 입양문화 확산, 반려인 책임 강화
 - 국가 동물실험윤리 위원회 설립 및 동물실험 관련 가이드라인 및 운영감독
 - 동물 이용 상품(가죽, 모피, 털) 이용 축소 방안 마련
 - 동물을 이용한 오락·유희·스포츠 산업 지원 중단 및 축소

▣ 이행기간

- 관련 법률 및 정책 2022년 임기부터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따라 입법연구-정책시행 비용을 정부일반예산 편성

정책순위

10

국민을 위한 재정·통화제도 민주화

정책분야 재정, 경제, 복지

□ 목 표

- 불평등 해소에 우호적인 재정 및 통화제도 개혁

□ 이행 방법

- 기획재정부 조직과 권한의 분리 개편
 - 경제 정책과 예산 편성권을 기재부에서 분리
 -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무부로 분리하는 정부조직법 개정
 - 기획예산처는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경제정책의 기획, 예산의 편성, 중앙행정기관 기획의 조정과 심사분석에 관한 사무 관장
 - 재무부는 예산의 집행, 국가 회계 및 국고 관리 업무 분담
 - 금융감독위원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영향력 차단, 실질적 독립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 주권화폐제도 도입
 - 민간은행이 유통 통화량의 대부분을 발행하는 현행 신용화폐 시스템을 폐지하고 국가가 직접 법정화폐를 발행하는 주권화폐 시스템으로 전환
 - 주권화폐 도입에 따라 국가로 귀속되는 화폐발행이익을 기본소득으로 배당함
 - 주권화폐 시스템 전환을 위한 대통령 직속 공론화기구를 통해 공론화 진행 후 2024년부터 이행
 - 주권화폐 전환에 CBDC 적극적 활용
 - 주권화폐 공론화 과정에 수행될 연구와 실험에서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주권화폐 발행 형태도 분산원장 기술이 적용된 CBDC를 적극적으로 검토
- 예산 법률주의 도입
 - 예산에 법률적 성격을 부여하여 예산에 대한 의회의 민주적 통제와 투명성을 제고함
 - 헌법 제 54조에 규정된 '예산안'을 '예산법률안'으로 개정하고 법률로 「예산법」제정

▣ 이행기간

- 주권화폐 제도 : 2023년부터 주권화폐공론화위원회 도입 1년여년간 연구와 공론화 과정을 걸쳐 2024년 도입
- 기타 관련 법률 및 정책 2022년 임기부터 추진

▣ 자원조달방안 등

-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따라 입법연구-정책시행 비용을 정부일반예산 편성

제20대 대통령선거 정당정책 모음집



국가혁명당

국가혁명당

No.	정 책
1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억 지급 및 국민배당금 매월 150만원 평생 지급
2	결혼하는 부부에게 3억원 지급, 출산수당 5천만원, 육아수당 매월 100만원 지급, 연애수당 매월 20만원 지급, 여성가족부 폐지 결혼부 신설
3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 무보수명예직으로 전환(지자체 의원 포함),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제도 폐지
4	징병제를 폐지 모병제로 전환하고, 기존 사병월급 매월 200만 원으로 상향 지급, 월남·6.25참전 용사 및 파독(광부, 간호사) 각 5억원 일시불 지급, 유엔본부를 판문점으로 이전
5	중·고등 전공 1과목만 시험 그 총점으로 대학 진학
6	청년취업 국가책임제 실시,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월 100만원 지급, 중소기업 5년 이상 근무자 창업 시 무이자·무담보·무보증 창업자금 3억원 융자 지원, 통일부 폐지 취업부 신설
7	양도소득세, 상속세, 부동산·자동차 보유세 폐지, 증권거래세, 갑근세 폐지, 김영란법 및 금융실명제법 등 잘못된 악법 폐지, 국민연금 폐지, 건강·고용보험료 중산층 이하 면제
8	용산 미군기지와 성남 서울공항 부지에 100만호의 신혼부부 주택 건설 무상 공급
9	반려동물 무료진료카드, 안경무료카드, 청소년안심식사카드 무료 제공
10	한반도 외곽 순환도로, 수도권 순환 고속전철 건설 및 BV벨트인(부산-블라디보스톡)에 있는 원산시 50년 임대 개발, 연해주 코리아 자치주 건설

정책순위

1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억 지급 및 국민배당금 매월 150만원 평생 지급

정책분야 경제

□ 목 표

- 국민 가계부채 2000조 해결
- 국민배당금으로 국민 모두가 중산층 이상으로 살아가는 중산주의 실현
- 돈 걱정 없는 세상 만들기

□ 이행방법

-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지급
 - 18세 이상 국민에게 각 1억씩 지급(1회)
- 국민배당금 지급
 - 18세 이상 국민에게 월 150만 원씩 평생 지급
 - 국민이 주주로서 배당금을 당연히 받아야 하는 권리
 - 주권재민(株券在民) 실현

□ 이행기간

- 코로나 생계지원금 1억 지급
 - 2022년 5월 대통령 취임 후 즉시(제1호 결재)
- 국민배당금 월 150만원 평생지급 시작
 - 2022년 5월 대통령 취임 후 2개월 이내(제2호 결재)

□ 자원조달방안 등

-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지급
 - 양적완화 4000조 실시
 - 『헌법제76조제1항』 대통령 긴급재정명령

- 한국은행이 국가 자산을 담보한 채권발행
- 미국, 일본과 상호 통화스와프 체결 추진

● 국민배당금 지급

- 취임초기
 - 취임 초기 당해연도 임시적 조치로 양적완화 예산에서 일부 대체
- 일반 회계년도
 - 국민배당금 등 지급예산 확보(800조 여원)
 - 국가 예산 600조원의 70% 절감 400조 여원 확보
 - 지방세를 국세로 통합하여 100조 마련
 - 재산비례별금제로 100조 마련
 - 고소득자 탈세방지로 100조 마련
 - 특수사업자 500만 신설로 100조 마련

정책순위

2

결혼하는 부부에게 3억원 지급, 출산수당 5천만원, 육아수당 매월 100만원 지급, 연애수당 매월 20만원 지급, 여성가족부 폐지 결혼부 신설

정책분야 복지, 행정

□ 목 표

- 망국적 저출산 해결
- 청년가정 결혼 생활기반 마련
- 인구 감소에 따른 사회적 경제 문제 해결

□ 이행방법

- 결혼하는 부부에게 3억 원 지급
 - 결혼자금 1억, 주택자금 2억(무이자, 무보증, 무담보)
- 출산수당 5천만원 지급
 - 출산하면 자녀 1명당 5000만원 지급
- 육아수당 매월 100만원 지급
 - 자녀 10세까지 매월 100만원씩 지급
- 연애수당 매월 20만원 지급
- 여성가족부 폐지 결혼부 신설
 - 정부부처 조직 개편

□ 이행기간

- 대통령 취임 후 2개월 이내 즉시 실행

□ 재원조달방안 등

- 저출산예산 45조 여원 및 성인지예산 32조 여원 절감액 사용
- 국가예산 600조 여원 70% 절감액 사용

정책순위

3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 무보수명예직으로 전환(지자체 의원 포함),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제도 폐지

정책분야 정치

□ 목 표

- 국회의원 100명으로 감축,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
- 지방자치단체 의원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
-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제도 폐지

□ 이행방법

- 취임 2개월 내 국회에 법안상정
- 현 국회가 공약 법안을 계속 부결 시 정신교육대 입소
※ 임시 국회의원 100명(무보수 명예직) 선발
- 선거제도 개선

□ 이행기간

- 취임후 2개월 내

□ 자원조달방안 등

- 예산절감 효과(예산낭비 요소 제거)

정책순위

4

징병제를 폐지 모병제로 전환하고, 기존 사병월급 매월 200만 원으로 상향 지급, 월남·6.25 참전 용사 및 파독(광부, 간호사) 각 5억원 일시불 지급, 유엔본부를 판문점으로 이전

정책분야 국방

□ 목 표

- 현시대의 국방 현대화 체제에 맞는 병역제도로 개편
- 군 사기 제고와 국방력 강화
- 병역기피 문제 해결
- 유엔본부를 판문점으로 이전

□ 이행방법

- 징병제 폐지 모병제로 전환, 징병제도 변경
- 기존 사병 월급 200만 원 이상으로 상향 지급
- 징병군인 제대 인원을 고려하여 모병 군인으로 대체
- 유엔 판문점 이전 건은 미국, 유엔과 외교를 통해 즉각 해결

□ 이행기간

- 취임 후 2개월 내 추진
- 모병제는 제대군인 인원에 맞춰 점진적으로 시행

□ 재원조달방안 등

- 양적완화
- 유엔본부 판문점으로 이전에 따른 유관기관 이전으로 자금 유입 기여
 - ※ 평화조성에 따른 국방비 절감 효과

정책순위

5

중·고등 전공 1과목만 시험 그 총점으로 대학 진학

정책분야 교육

□ 목 표

- ◎ 입시위주의 고질적 교육문제 해결
- ◎ 체덕지 위주의 청소년 전인교육 실현
- ◎ 창의적 인재 육성

□ 이행방법

- ◎ 수능시험 폐지
- ◎ 중등교육 6년과정에 개인이 선택한 1과목 시험 그 총점으로 대학 진학
- ◎ 현행 중·고등학교 1, 2, 3학년 재학생의 경우, 남은 학업 기간을 고려 탄력적으로 시행

□ 이행기간

- ◎ 취임 후 2개월 내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 예산절감 효과

정책순위

6

청년취업 국가책임제 실시,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월 100만원 지급, 중소기업 5년 이상 근무자 창업 시 무이자·무담보·무보증 창업자금 3억원 융자 지원, 통일부 폐지 취업부 신설

정책분야 행정, 산업자원

□ 목 표

- 청년실업자 구제
-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및 국가경쟁력 제고

□ 이행방법

- 청년취업 국가책임제 실시
-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월 100만원 국가에서 지급
- 중소기업 5년 이상 근무자 창업 시 무이자·무담보·무보증 창업자금 3억원 융자 지원
- 통일부 폐지 취업부 신설(행정부 개편)

□ 이행기간

- 취임 후 2개월 내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국가예산 70% 절감액
- 국가경쟁력 증대에 따른 세수 증대

정책순위

7

양도소득세, 상속세, 부동산·자동차 보유세 폐지, 증권거래세, 갑근세 폐지, 김영란법 및 금융실명제법 등 잘못된 악법 폐지, 국민연금 폐지, 건강·고용보험료 중산층 이하 면제

정책분야 사회

□ 목표

- 양도소득세, 보유세 등 폐지
- 상속세 폐지로 기업경영권 보호
 - 해외자본으로부터 국내기업 경영권 보호
- 1억 미만의 소액증권거래세 폐지로 주식 거래 활성화(기업 자금 조달 용이 및 경제활성화)
- 현행 잘못된 악법 폐지
- 한계를 다한 사회보장제도 폐지

□ 이행방법

- 조세제도 개혁
 - 상속세 제도폐지, 부동산(재산세, 종부세) 및 자동차 보유세 폐지
 - 1억미만 증권거래세 폐지
 - 소득이 없는 곳에는 부과하지 않는 조세원칙 적용
- 1억 미만의 소액증권거래세 폐지로 주식 거래 활성화
 - 기업 자금 조달 용이 및 경제활성화
 -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해외기업 국내 유치 용이)
- 현행 잘못된 악법 폐지
 - 김영란법 폐지, 쌍벌죄 폐지, 교도소 폐지(1개만 유지)
 - 금융실명제 폐지로 국내 자금 해외 유출 방지

□ 이행기간

- 취임 후 2개월 내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국가예산 70% 절감액으로 세수대체

정책순위

8

용산 미군기지와 성남 서울공항 부지에 100만호의 신혼부부 주택
건설 무상 공급

정책분야 건설교통

□ 목 표

- 결혼하는 청년층의 주거난 해결

□ 이행방법

- 용산 미군기지와 성남 서울공항 부지에 약 100만호의 신혼주택 건설
- 성남 서울공항 기능을 김포공항으로 이전하여 건립단지 및 주변 고도제한 해제
- 건축비는 상가 분양대금 등으로 충당
- 결혼하는 선착순으로 입주 분양

□ 이행기간

- 취임 후 2개월 내 추진

□ 자원조달방안 등

- 정부재정 투입
 - 양적완화, 국가예산 70% 절감액 사용
- 민간 건축비 확보
 - 상가 분양대금에서 건축비 일부 충당

정책순위

9

반려동물 무료진료카드, 안경무료카드, 청소년안심식사카드 무료 제공

정책분야 복지

□ 목 표

- 청소년 건강 보호 및 정신적 정서함양
- 청소년 시력보호

□ 이행방법

- 반려동물 무료진료카드
 - 동물을 매개로 한 질병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 청소년 무료안심 식사카드
 - 안심재료(무농약 음식재료 사용) 음식점 지정
- 무료 안경카드
 -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카드 제공
- 반려동물 관리체계 구축

□ 이행기간

- 취임후 6개월 내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국가예산 70% 절감
- 33정책 실현으로 국가경제 발전에 따른 세수 증대

정책순위

10

한반도 외곽 순환도로, 수도권 순환 고속전철 건설 및 BV벨트인(부산-블라디보스톡)에 있는 원산시 50년 임대 개발, 연해주 코리아 자치주 건설

정책분야 건설교통

□ 목 표

- ◎ 한반도외곽 순환고속철도 및 수도권 순환고속전철
 - 한반도 세계적인 관광지화
 - 해외 관광객 유치로 관광 수입증대
 - 전국지역 통합효과, 수도권 교통난 해소
- ◎ BV벨트인(부산-블라디보스톡)에 있는 원산시 50년 임대개발
- ◎ 연해주 코리아 자치주 건설

□ 이행방법

- ◎ 민간 전문기관의 예비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 ◎ 국내 민간 건설기업 참여 사업추진

□ 이행기간

- ◎ 임기 내 추진

□ 자원조달방안 등

- ◎ 민간자본 유치

제20대 대통령선거 정당정책 모음집



노동당

노동당

No.	정 책
1	재벌국유화·국가투자은행설립으로 공공경제 실현
2	1,000만 국가책임일자리로 완전고용
3	전 기업 탄소배출 감축의무제로 기후정의 실현
4	읍면동 공공가사돌봄센터로 국가책임 돌봄사회
5	민간임대 금지·공공주택 1,000만호로 공공주거 실현
6	의료·교육·교통·통신·에너지 공영화로 공공복지 실현
7	여성차별·폭력 없는 사회, 성·재생산권리 보장
8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차별과 배제 없는 평등사회
9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 한반도 비핵지대화
10	정당법 폐지, 교사·공무원의 정치활동 보장

정책순위

1

재벌국유화·국가투자은행설립으로 공공경제 실현

정책분야 재정, 경제

□ 목표

- 기후정의실현·산업전환·일자리창출 등을 위한 대규모 공공투자로 사회적 필요충족을 위한 경제체제 구축
- 공시대상 기업집단 (재벌) 국유화

□ 이행방법

- 국가투자은행 설립
 - 기후정의실현을 위한 투자, 사회적 필요충족을 위한 인프라 투자
 - 국가책임일자리, 기후일자리, 가사·돌봄일자리 전면 확대를 위한 투자
 - 재벌과 독점기업 국유화 지원
- 총수일가 소유지배 해체와 재벌국유화 추진
 - 금융법 상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대기업으로 적격성 심사 확대
 - 순환출자금지,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 기존 공정거래법 상 규제강화
 - 일감몰아주기, 자사주를 활용한 지분확대 목적의 기업분할 등으로 확보한 총수일가 지분 소각
 - 부당하게 축적한 총수일가 자산 환수
- 공적자금 투입기업 공영화
 - 구조조정 기업 공영화 추진
 - 기간산업 국유화 전담기구로 공영화 지원
- 국가기업운영위원회-국유자산감독위원회 설치
 - 국가기업운영위원회 설치로 기업·산업 경제계획과 사업운영 심의
 - 주요 기업 산업정책-탈탄소정책-노동정책 계획·집행·감독
 - 국가기업운영위원회 구성
 - 기업단위 운영위원회: 지역사회, 노동자 대표 등 관계자들로 구성

- 기업운영위-지역기업운영위원회-국가기업운영위원회 상향식 구성
- 국유자산감독위원회로 공적 소유지배구조 안정화
- 국유자산 공적 관리

▣ 이행기간

- 2022-2027

▣ 자원조달방안 등

- 연간 국가재정 1,000조원 확보로 국가투자 확대
 - 누진소득세로 통해 국세수입 확대 : 350조원에서 600조원으로 증대
 - 소득세 현행 최고세율 45%를 80%로 상향 : 누진소득세 실시
 - (소득세 확대에 비례해) 법인세 최고세율 25%에서 45%로 확대
 - 주식 및 채권 평가이익 과세, 종합소득세로 일원화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대폭 인상
 - 재벌·독점기업 독점이윤 및 사내유보금 환수 : 연간 100조원 내외
 - 세계개혁 및 기타 새로운 자원 확보 : 50조원

정책순위

2

1,000만 국가책임일자리로 완전고용

정책분야 노동

□ 목 표

- 일하고자 하는 모두에게 권리로서 양질의 영속적인 일자리 보장
 - 중위소득 및 평균노동시간으로 구성된 양질의 영속적 일자리
- 국가책임일자리 1천만개 확보, 노동시장 사회화
 - 전체 고용량 2,000만개 일자리 중에서 국가책임 일자리 1,000만개 공급
 - 민간노동시장 저임금·장시간일자리 규율·퇴출로 불안정노동체제 청산
 - 비정규직 철폐, 성별 임금격차 해소
- 국가책임 완전고용 법제화

□ 이행방법

일자리 내역	수량	비고
국가책임 기후일자리	80만	전력·에너지 부문, 탈탄소 생산부문
산업전환 공영화 일자리	80만	디지털전환 및 산업전환 국가신규투자
재벌 사회화 일자리	120만	기존 100만(10대재벌) + 신규 창출 20만
기존 공공부문 확장	33만	보건의료, 교육, 사회복지 등 인력 확충
민영화 부문 재공영화	20만	전력·교통·통신 등 민영기간업체 공영화
현행 공공부문 일자리	260만	일반정부 222만 + 공기업 38만
가사노동 사회화 일자리	190만	· 식품, 요리, 가사 자영업 150만 사회화 · 가사서비스 시장 노동자 재고용
돌봄 사회화 일자리	117만	· 영유아 돌봄 190만 가구, 노인돌봄 150만 가구, 장애인 돌봄 10만 가구 기준 · 기존 돌봄 노동자 재고용
이동·배송 일자리	50만	플랫폼 노동 사회화
영양사 및 안전 일자리	50만	가사돌봄 재생산 관련 영양 및 안전관리
총 계	1,000만	

▣ 이행기간

- 2022-2027

▣ 자원조달방안 등

- 국가재정을 OECD 수준에 따라 GDP의 50%, 1,000조원까지 확대

정책순위

3

전 기업 탄소배출 감축의무제로 기후정의 실현

정책분야 환경

□ 목 표

- 기후정의 실현

□ 이행방법

- 기업 탄소배출 감축의무 전면확대
 - 현행 197개로 제한된 기업 탄소배출감축의무 전면 확대
 - 탄소배출권거래제 폐지로 탄소배출 감축 강제
 - 에너지 생산·전달·소비과정 사회적 통제 법제화, 5년간 7조원에 달하는 에너지 다소비기업 전기요금혜택 폐지
- 녹색성장기본법 폐지와 기후정의기본법 제정, 기후정의위원회로 기후정의 대중운동과 사회적 권력 형성
 -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50% 이상으로 법제화
 - 재벌과 에너지자본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노동자·농민·여성·청년 등이 주도하는 기후정의위원회 또는 기후정의국민의회로 대체
 - 기후정의를 위한 대중운동 형성, 기후정의를 위한 사회적 권력 형성
 - 산업별 탄소배출 감축 의무 부여
 - 기후예산 편성 및 집행권
-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대중운동, 기후정의총파업
 - 기후위기 주범, 국가와 자본의 책임을 묻는 사회적 총파업 조직운동 전개
 - 국가와 자본에 맞선 노동자민중 주체의 정의로운 전환
- 기후위기 가속하는 반생태 사업 중단
 - 가덕도 신공항 건설중단
 -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중단·기존 석탄화력발전 조기폐쇄·핵발전 중단

▣ 이행기간

- 즉각 추진

정책순위

4

음면동 공공가사돌봄센터로 국가책임 돌봄사회

정책분야 노동, 여성

□ 목 표

- 사회서비스 시장화로 개인과 가족에 맡겨진 가사·돌봄 공영화
- 모든 가사·돌봄 노동자 국가책임 직접고용
- 사회서비스 공영화

□ 이행방법

- 공공사회서비스기본법제정
 - 돌봄·보육·가사 등 사회서비스 공급책임을 공공으로 전환
 - 사회서비스기관 국가-지방정부 직접운영 명문화
 - 사회서비스 시장화를 조장하는 현행 사회보장기본법 폐지
- 국가책임사회서비스원(공단)·공공가사돌봄센터 설립
 - 공공사회서비스기본법과 함께 전국기초지자체에 공공가사돌봄센터 설립
 - 가사노동을 돌봄노동과 함께 사회화, 가정과 개인에게 전가되는 양육과 가사노동에 대한 사회적 분담·공급체제 구축
 - 가사노동 관련 서비스 업종의 사회화, 공적 공급체제 구축
 - 민간위탁 사회서비스 공영화: 지자체에 따라 단기간 내 공영화 어려울 경우 위탁계약 종료 사업부터 공영화
- 어린이집·요양시설 전면 국공립화
 - 보육·요양은 국가의 책임인바, 모든 어린이집과 요양시설을 공영화함
- 사회서비스 공영화로 사회서비스노동자 노동권 보장
 - 보육·가사·돌봄노동자 노동조건 악화로 이어지는 사회서비스 시장화 폐지
 - 공공책임 사회서비스 노동자 직접고용으로 노동권 보장

▣ 이행기간

- 5년 단위로 추진하면서 그 결과를 이후 계획에 반영함

▣ 자원조달방안 등

- 국가재정을 OECD 수준에 따라 GDP의 50%, 1,000조원까지 확대

정책순위

5

민간임대 금지·공공주택 1,000만호로 공공주거 실현

정책분야 복지

□ 목 표

- 공공주거 실현

□ 이행방법

- 민간임대 금지와 공공주택 1,000만호 보장으로 공공주거 실현
 - 국가책임 공공주택 공급의무 법제화, 민간임대 금지
 - 공공 선매권제도로 주택매도 시 공공 우선매수. 공공주택 확대
- 다주택소유금지와 국유토지 확대
 -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금지
 - 토지는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주택 도입, 환매조건부 주택 도입
 - 택지소유 상한제 실시
 - 기업 비업무용 부동산 공공택지화
 - 공공택지 분양금지와 공공개발
- 불로소득 차단
 - 개발이익 완전 환수 (토지초과이득세 도입)
 - 종합부동산세 확대
- 주택소유 없이도 노후생활 보장
 - 공공주택 보급으로 주거안정성 확보
 - 의료·간병 등 노후 기초생활 보장
 - 노인 기초연금 대폭 인상

□ 이행기간

- 2022-2027

▣ **재원조달방안**

- 토지초과이득세 도입으로 개발이익 완전 환수
- 종합부동산세 확대

정책순위

6

의료·교육·교통·통신·에너지 공영화로 공공복지 실현

정책분야 복지

□ 목 표

- 보건의료 공영화로 보편적 의료서비스 제공
- 공공대학체제 구축으로 무상교육 실현
- 통합공공교통체제로 보편적 교통권 보장
- 통신산업 공영화로 통신공공성 확대
- 공공에너지체제로 에너지복지 보장

□ 이행방법

- 의료공영화
 - OECD 평균수준 공공의료기관·공공병상 확대(공공병원 50%, 공공병상 70%)
 -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의료관리청 신설, 공공의료 통합운영·지원체계 수립
 - 17개 광역시·도 2개 이상 공공병원 확보, 70개 중진료권 중 공공병원 없는 24개 권역에 1개 이상 공공병원 확보
 - 검역인력과 역학조사관 확충
 - 공공의료인 양성과정 신설
 - 백신과 치료제의 공공개발
 - 공공주치의 제도도입으로 1차 의료 강화. 포괄적 공영의료서비스 도입. 일차의료센터-병원-종합병원으로 이어지는 포괄적 지역공공병원체계 구축
 - 공공의료기관 예비타당조사 면제
- 입시폐지와 공공대학체제 구축
 - 수능 폐지와 '대학입학 자격고사' 실시, 학교의 학생선발권 폐지
 - 모든 국공립대를 대학통합네트워크로 통합해 공공대학 체제 구축
 - 사립대학과 사립전문대학의 공영형 사립학교 또는 국공립대학 전환으로 고등교육 공영비율 50%까지 우선 확대

- 대학통합네트워크 지방캠퍼스 전략적 국고지원으로 대학 서열폐지
- 대학통합네트워크부터 등록금 폐지, 대학교육 무상화

● 전 지역 통합교통공사 설립

- 기초-광역자치단체 공공교통수단 통합 공영화
- 버스완전공영제와 택시완전월급제 시행
- 지하철-버스-마을버스 공영화에 기반해 통합공공교통체제 구축
- 광역교통청 설립으로 도시간 교통체제 통합 재편
- 공공교통 국가투자 확대, 지역 공공교통 적자 국비지원
- KTX-SRT 재통합

● 통신산업 공영화

- 유무선통신 공영화로 중복투자와 홍보비 과다지출 방지
- 기본료 폐지와 사용자 대폭 인하

● 공공에너지체제로 에너지 복지 확립

- 전력산업 통합공기업 설립으로 공공에너지 체제 구성
- 에너지복지법 제정, '에너지 빈곤층' 개념 명시, 빈곤층 에너지 무상공급

▣ 이행기간

- 5년 단위로 추진하면서 그 결과를 이후 계획에 반영함

▣ 자원조달방안

- 국가재정을 OECD 수준에 따라 GDP의 50%, 1,000조원까지 확대

정책순위

7

여성차별·폭력 없는 사회, 성·재생산권리 보장

정책분야 여성, 인권

□ 목 표

-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을 근절하고, 성과 재생산의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를 건설함

□ 이행방법

-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기준 재정립
 - 비동의 강간죄 제정 (강간죄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
 - 스토킹범죄 반의사불벌조항 폐지
 - 가해자 중심 사법체계 전면 개혁
 - 전국 지자체에 성폭력대응 기관 마련 (외부전문위원으로 구성된 독립 성폭력사건 해결기구 설치, 가해자 즉각적인 업무정지 등)
- 피해자 지원조치 강화
 - 실질적 피해자 회복지원체계구축 (의료·법률지원, 고용유지, 소득보장, 디지털정보 삭제)
 -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전국으로 확대
 - 스토킹피해자보호법 제정
- 성폭력 예방조치로서의 포괄적 성교육 의무화
 - 전 사업장 법정 의무교육으로 포괄적 성교육 실시 (30인 미만 사업장 예외 없이 적용)
 - 초·중·고·대학까지 포괄적 성교육 의무화
 - 고위공직자 임명시 반성폭력 교육 의무화
- 온전한 재생산 권리보장
 - 성재생산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 유산유도제 즉각 도입, 사후피임약 일반의약품 지정, 임신중지시술 의료보험적용
 - 근로기준법 유산·사산휴가 적용범위에 임신중지 포함
 - 태아산재법 일터 적용 안착화, 태아산재법 개정 보완 (아버지 태아산재 인정, 소급적용기한 확대, 보험급여 확대)
 - 이주·장애여성 배제 없는 지역재생산권리센터 구축

- 장애인시설 재생산권리침해 실태조사
- 청소년 피임접근권 확대
- 여성청소년 생리대 무상공급
- ◎ 현행 가족중심 법제도 전면개편
 - 여성가족부 성평등부로 개편과 역할 강화(여성과 성소수자에 대한 적극적 평등조치, 젠더 평등 정책 현실화)
 - 생활동반자법 제정으로 다양한 가족구성권 보장

▣ 이행기간

- ◎ 2022-2027

정책순위

8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차별과 배제 없는 평등사회

정책분야 인권

□ 목 표

- 성소수자·장애인·청소년·이주민 등 소수자에 대한 모든 차별철폐

□ 이행방법

- 포괄적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
 -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외모,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상태, 사회적신분에 의한 차별금지 제도화
- 성소수자·장애인·청소년·이주민 차별철폐
 - 성소수자의 노동권, 가족구성권, 양육권 등 온전한 제 권리 보장
 -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탈시설자립생활권 보장, 24시간 장애인 활동지원
 - 16세 선거권·정치결사권·정당활동 등 청소년의 정치적·사회적 권리보장
 - 청소년 노동3권 보장
 - 고용허가제 폐지, 이주민에 대한 온전한 사회보장제도 적용, 미등록이주민 폭력단속 금지
 - HIV감염인의 인권·평등권·프라이버시권 침해하는 에이즈예방법 19조 폐지
- 성소수자 기본권 보장
 - 동성혼 법제화
 - 결혼제도 밖 가족공동체를 인정하는 생활동반자제도·시민결합 법제화
 - 사실혼 가구 동등한 권리보장, 사실혼 및 실질적 가족구성 인정요건 간소화
 - 성소수자 가족구성원에게 차별 없는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제도 적용
 - 포괄적 성교육, 성별 이분법과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중심 교육과정 전면개편
 - 성소수자인권교육 의무화 및 성소수자인권교육표준안 마련
 - 교원·교원양성기관 성소수자 인권교육 의무화
 - 성적체성을 처벌하는 균형법 92조의 6 폐지

◎ 국가책임 장애인 기본권 보장

1) 장애서비스 공영화로 탈시설 자립권 보장

- 탈시설 권리를 포함 의료적 관점이 아닌 사회적 관점에서 장애개념 재정립
- 국가장애인위원회 및 지자체별 장애인위원회 신설, 자립지원체계 구축
- 장애보험 신설로 OECD 평균 이상 장애인권리예산 확보
- 권리중심 사회보장 강화, '장애인기본법' 제정 추진
- 국가장애서비스공단 활동지원사 직접고용
- 장애인거주시설 신규입소 금지, 장애인거주시설 단계적 전면 폐쇄

2) 장애인 노동권 보장

-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폐지, 안정적 고용과 4대보험 등 노동권 전면보장
- 재활 중심 보호작업장 폐지 및 국가책임 권리중심일자리로 재고용
- 현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를 국가책임 중증장애인 권리중심일자리로 전환, 4만개 이상 신설

3) 장애인 교육권 보장

-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전면개정,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경쟁교육 폐지로 실질적 통합교육 실현
- 특수학급의무화, 통합교육지원인력 증원, 장애인교원확대, 교육지원인력 증원

4) 장애인 이동권 보장

- 저상버스 도입 국가예산 확대
- 통합교통공사를 통해 지역 간 장애인이동권 차별철폐
- 1역사 2동선 도입
- 통합교통공사 직접운영 광역이동지원센터 설립으로 특별교통수단 공공운영
-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중증장애인 75명당 1대 의무 확보

▣ 이행기간

- ◎ 2022-2027

정책순위

9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 한반도 비핵지대화

정책분야 외교통상

□ 목 표

- 평화조약 체결, 핵무기금지조약 가입과 비핵지대화로 평화체제 수립

□ 이행방법

-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
 - 상호불가침·국교정상화·한미동맹폐기·주한미군철수·북핵폐기 명시
 - 대대적 군축, 항공모함 등 광역최첨단무기 운영 중단과 북의 상응조치 추진
 - 체결주체는 남·북·미를 기본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정전협정 당사자인 중국 추가
- 유엔 핵무기금지조약 즉시 가입
 - 유엔 핵무기금지조약 즉시 가입
 - 모든 핵무기 개발·실험·생산·보유·사용·핵우산금지하는 조약으로 현 50개국 비준, 2021년 1월 22일부터 발효
 - 현재 공인·비공인핵무장국은 물론 미국 핵우산 보호국도 조약에 가입하지 않음
 - 공인·비공인 핵무기 보유국을 망라해 ‘핵무기 폐기 프로그램’ 요구
 - ‘핵에너지 포기프로그램’을 핵무기 폐기 프로그램과 병행 추진
- 한반도 비핵지대화와 평화조약 동시 이행
 - 비핵국가 핵무장 포기, 미국·러시아·중국의 동북아 비핵국가 핵공격 금지, 핵우산 제공 금지를 내용으로 동북아 비핵지대화 조약 추진
 - 전 세계 비핵화 및 동북아 비핵지대화 동시 진행으로 한반도 비핵지대화 조건 구축
 - 북핵, 미국의 핵우산과 선제 핵공격 훈련 동시 폐기
 - 한반도 내 핵무기 개발·보유·수송·훈련 금지

□ 이행기간

- 2022-2027

▣ **재원조달방안**

- 별도의 재원 필요 없음

정책순위

10

정당법 폐지, 교사·공무원의 정치활동 보장

정책분야 정치

□ 목 표

- 노동자 민중의 자유로운 정치활동 보장
-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

□ 이행방법

- 정당법 폐지
 -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은 정당요건을 강제하는 정당법 자체가 없으며, 선거 참여 정치단체에 대한 별도규정이 있을 뿐임. 독일 역시 정당을 보호하고자 정당법을 둠
 - 한국 정당법은 정당요건을 국가가 자의적으로 규정해 민중의 자유로운 정당활동을 제한
- 교사·공무원 정치활동을 금지·제한하는 법제도 폐기·개정
 - 1) 교원노조법·공무원노조법 폐기
 - △노조설립 특례 규정 △해고자 조합원 자격 배제 △정치활동 금지 △단체협약 효력범 위 제한 △쟁의행위 금지를 명시한 현 교원노조법과 공무원노조법 폐기
 - 교원노조·공무원노조 특별법 폐기와 일반 노조법 적용
 - 2)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관련법 개정
 - 현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정당법·선거법은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표현 금지 △정당가입과 후원금지 △입후보 제한 등을 명시
 - 관련 법률 전면 개정·폐기

□ 이행기간

- 즉시 입법을 통해 실행함

□ 재원조달방안 등

- 별도 재원이 필요 없음

제20대 대통령선거 정당정책 모음집



새누리당

새누리당

No.	정 책
1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6대 공약 40개 과제
2	법치와 윤리가 바로 서고비정상이 정상화되는 공정한 나라
3	굳건한 안보로 안심하고 사는 나라
4	시장경제가 바로 서는 일자리 많은 나라
5	지방분권으로 권력분산 제대로 실현되는 나라
6	사교육 부담도 전교조도 없는 교육이 바로 서는 나라
7	산업화의 역군이 존경받고 당당하게 노후를 누리는 나라

정책순위

1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6대 공약 40개 과제

정책분야 정치개혁

□ 대한민국 재건을 위한 국가 대개조 프로젝트

- 대한민국 정체성과 보수우파의 가치를 지켜내겠습니다

□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6대 공약 40개 과제

- 법치와 윤리가 바로 서고 비정상이 정상화되는 공정한 나라
- 굳건한 안보로 안심하고 사는 나라
- 시장경제가 바로 서는 일자리 많은 나라
- 지방분권으로 권력분산 제대로 실현되는 나라
- 사교육 부담도 전교조도 없는 교육이 바로 서는 나라
- 산업화의 역군이 존경받고 당당하게 노후를 누리는 나라

정책순위

2

법치와 윤리가 바로 서고비정상이 정상화되는 공정한 나라

정책분야 정치개혁 사법윤리

- 대통령탄핵 주동자 심판
- 대통령 명예 회복과 즉각 석방
- 불법 편파보도 언론에 대해 재허가 불허 등 강력한 제재
-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반하는 제반 법령 즉각 폐지해 헌법 가치 수호
- 사기, 횡령 등 파렴치 경제범죄 형량 대폭 강화 및 흉악범 사형 집행
- 5.18 유공자 전수조사 및 가산점 진상규명 통해 청년 불평등경쟁 구조 철폐
- 인사기능 통폐합한 대통령 직속 '국가인재원' 신설 (원장임기 보장 10년)
- 부총리 중심제 도입, 경제/산업/사회/과학 부총리가 장관 지휘하는 국정시스템 추진
- 동성애 금지 및 윤리도덕 교육 강화

정책순위

3

굳건한 안보로 안심하고 사는 나라

정책분야 국방 외교통상

- 강력한 자강 대한민국으로 안보 확립, 국민 안보 불안 해소
- 국방예산 50조원으로 증액, 강력한 첨단 정보 과학군 양성
- 한·미 동맹, 주한미군, 한미연합사 체제를 확고히 유지
- 북핵 대응은 미국의 핵우산 확실한 보증, 문제 발생시 우리의 핵무장 추진
- 대북관계는 상호주의 원칙을 엄격히 준수
- 처우개선을 시작으로 현역, 예비역, 군인가족의 노고에 실질적 개선으로 보답
-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도 전략적동반자 관계 유지
- 사이버위협 대비 범정부기구 설치 및 사이버테러방지법 통과
- 방산비리 척결로 군 신뢰 회복, 처벌 대폭 강화로 사전 차단 및 재발 방지

정책순위

4

시장경제가 바로 서는 일자리 많은 나라

정책분야 재정/경제

-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불필요한 규제철폐, 진입장벽 제거, 청년일자리 창출 등 중소기업 중심 정책 추진해 한국 경제의 재도약 발판 마련
- 공무원연금 개혁과 사학연금 개혁 통해 절약되는 490조 원 중 일부를 청년 일자리 창출에 투입
-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통한 강력한 노동개혁 추진
- 김영란법 음식물 3만원 제한 조항 삭제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 불법사채업자와 일수업자 처벌 강화하고 제2금융권으로 소상공인 대출 유도
- 다국적 기업의 무분별한 점포확대를 소상공인에 대한 침탈행위로 규정, 진입범위와 점포규모 조정 등 국내 진입 제한
- 세무, 법무, 노무 등 경영지식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에게 교육 기회 확대

정책순위

5

지방분권으로 권력분산 제대로 실현되는 나라

정책분야 정치 행정자치

- 국회의 세종시 이전으로 수도권 집중화 해소 및 지역 활성화
- 광역시 기초의회 폐지 및 광역의원 정수 2배 확대
- 지방자치단체 인사권 독립 추진으로 지방분권 조기 달성
-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3단계로 8:2에서 6:4로 조정해 지방재정 확충

정책순위

6

사교육 부담도 전교조도 없는교육이 바로 서는 나라

정책분야 교육

- 교육감 및 교육위원 직선제 폐지
- 국정역사교과서 사용 의무화로 대한민국 정체성 확립하고 애국적 미래 세대 육성
- 대입 수시전형 폐지와 전형방식 단순화 등으로 사교육비 대폭 절감
- 특목고, 외고 정원 대폭 축소 통해 일반고 수준 향상 유도
- 시설-공공/운영-민간 형태의 보육시설 도입해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설 확대
- 구역별 거점보육시설 확대, 중소기업 공동직장보육시설 건립 대폭 지원

정책순위

7

산업화의 역군이 존경받고堂堂하게 노후를 누리는 나라

정책분야 보건복지

- 20억 이하 재산 상속·증여세 완전 폐지
- 물가 상승분 반영한 기초노령연금 지급
- 노인 지하철 무료 이용 손실 국고 보전
- 만성질환 고령자에 대한 의료보험 본인 부담비율 인하
-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

제20대 대통령선거 정당정책 모음집



새로운물결

새로운물결

No.	정 책
1	권력구조 개편 및 정치 개혁
2	공공부문·관료 개혁
3	국가균형발전
4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대책
5	보편적 소득안전망·저출산고령화 대책
6	G10 대한민국 만들기
7	1가구 1주택 꿈 이루기
8	교육개혁
9	청년 5대 권리장전
10	선진과학기술·4차산업혁명 대책

정책순위

1

권력구조 개편 및 정치 개혁

정책분야 정치·행정·사법

□ 목 표

- 승자독식 정치 구조를 깨뜨리겠습니다.
- 정치는 줄이고 권력은 나누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 시민의 참여를 통한 정치플랫폼을 마련하겠습니다.
-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

□ 이행방법

-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
- 책임총리제와 책임장관제 실시
- 헌법개정국민회의 구성(새정부 출범 1년 내) 2023년 국민투표 실시
- 2024년 총선과 제21대 대통령 선거 동시선거 통해 제7공화국 출범
- 제20대 대통령은 임기를 2년으로 단축
- 청와대·정부 권력은 줄이고 내각 중심으로 국가운영
-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 정당 국고보조금 폐지 → 유권자에게 정치 바우처(5천원) 지급하여 지지정당에 후원
- 국회의원 3선 초과 연임금지, 국민소환제 도입, 면책특권 폐지
- 국회의원 보수 제한(중위소득 1.5배) 보좌관 수 감축 등 국회의원 특권 개혁

▣ 이행기간

- 2023년 국민투표 개헌 통한 정치개혁 마무리

▣ 자원조달방안 등

- 국고 증액(개헌 위한 국민투표 실시)

정책순위

2

공공부문·관료 개혁

정책분야 정치·행정·사법

□ 목 표

- 관료 개혁을 통해 일하는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 공공부문 엘리트 순혈주의를 혁파하겠습니다.
- 철밥통 공기업을 개혁하겠습니다.

□ 이행방법

- 공직을 관리직과 전문직으로 나누고 관리직은 정년 폐지
- 일반 행정 공무원 수 과감히 감축(퇴직 공무원 20%만 허용)
- 5급 행정고시를 폐지하고 외부 전문가 영입 확대
- 공무원 직급을 9등급에서 6등급으로 축소
- 7급 공무원 일정 비율은 사회적 약자에 할당
- 토지·건축 인허가 시민배심원제 도입
- 규제담당 공무원 대폭 감축
- 공공부문 전관예우 폐지로 관피아·공피아 타파
- 공공기관 일몰제 도입
- 정보비대칭성 해소 위한 정책과 통계정보 투명한 공개
- 법조계 엘리트 인사시스템 개혁
- 대규모 외부 경영진단을 통해 민영화·구조조정·경영혁신 단행

- ◎ 경영진단 결과에 따라 공기업별 혁신 프로그램 지원
 - 정부의 인사개입과 낙하산 최소화(전문성 중심으로 인산)
 - 내부 복지제도 및 인사는 성과중심으로 전환

▣ 이행기간

- ◎ 2022년~2026년까지
- ◎ 2024년(3년 간) 외부 경영진단 후, 혁신프로그램 지원

▣ 재원조달방안 등

- ◎ 본예산 증액 및 기금 증액
- ◎ 경영진단 비용은 각 공공기관별 각출

정책순위

3

국가균형발전

정책분야

정치·행정·사법

□ 목 표

- 수도권 1극 체제를 전국 5극 체제로 전환하겠습니다(5개 서울 만들기).
- 어디에 살든 고른 기회를 누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
- 전 국토를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습니다.

□ 이행방법

- 5개의 서울수준의 메가시티를 구축
 - 수도권(강원)·부울경·대구경북·대전충청·광주호남
- 중앙과 지방 간 재정균형을 위한 ‘재정연방제’ 도입
 - 지자체에 규제 자율권 등 경제행정권을 부여
 - 지역개발, 복지, 문화, 교육 사업의 우선순위를 지방이 결정
 - 소득세·법인세에 공동세를 도입, 부가세 지방 비중 확대
- 충청 이남 이전 기업에 대해 법인세 추가감면
 - 이전할 경우, 10년 고용유지 조건으로 상속·증여세 획기적 감면
- 수도권 대학 지방이전으로 인재균형 달성
 - 서울대 학부 지방 이전, 사립대 이전 인센티브 제공(취득세·상속·증여세 등)
 - 의대·약대·바이오·AI 등 정원 확대와 공기업 인재 선발 50% 채용 인센티브
- 지방의료기관 및 문화시설 확충으로 생활균형
 - 지방대학 병원 수준 크게 향상, 문화인프라 구축과 문화바우처 제공

□ 이행기간

- 2022년~2026년(5년간)

▣ **재원조달방안 등**

- 직접적 재정지출 없음(지방이전 기업·대학 등 규모에 따라 세제혜택 변동)

정책순위

4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대책

정책분야 재정·경제·복지

□ 목 표

-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피해보상을 신속·과감·충분하게 지원하겠습니다.
- 기술경쟁력 있는 세계적 강소기업을 만들겠습니다.

□ 이행방법

- 즉각적인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지원(2022년)
 - 예산(607조원) 중 재량지출 10% 구조조정으로 즉시 30조원 마련
 - 구조조정 대상은, 지역구 선심성 예산 및 유사·중복사업 중심
 - 거대양당 합의만 하면 재정건전성 해치지 않으면서 해결 가능
- 지원방식은 <先지원 後정산>으로 과감하게 지원
- 현재 손실보상률: 80% → 100%로 지원 확대
- 손실보상금 부족 할 경우, 국채발행으로 충분하게 지원
 - 국채발행 규모만큼 2023년도 예산편성에 SOC·지역구 선심성 예산 동결
- 중소·중견기업 글로벌 비즈 플랫폼 구축
- 혁신 스타트업 10만개 육성, 유니콘기업 100개 육성
 -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까지 규제개혁·금융·세제 집중지원
 - 청년 창업지원센터 확대 설치(아이디어만으로 입주 및 지원)
- 규제개혁청 신설로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
 - 모든 규제를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방식(금지되는 것 외 모두 허용) 전환
- 벤처기업 실패 안전망의 탄탄한 확충
 - 대출에 따른 관행적 연대보증 폐지(기술 신용보증제도 활성화)
 - Death Valley 특별 펀드 조성

- ◎ 벤처육성을 위한 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복합기업집단법) 개정
 - 불공정 관행 개선으로 가맹 하도급 분야 획기적 개선

▣ 이행기간

- ◎ 2022년~2026년

▣ 재원조달방안 등

- ◎ 손실보상 부족분에 따라 국채발행
- ◎ 본예산 증액 및 관련 기금 확충

정책순위

5

보편적 소득안전망·저출산고령화 대책

정책분야 재정·경제·복지

□ 목 표

- 보편적 소득안전망을 마련하겠습니다.
- 공적연금을 개혁하겠습니다.
-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 이행방법

- 보편주의 원칙의 사회보장제도 확립
 - 동일한 피해 및 수요 있을 시, 차별없이 지원 반면 필요가 다르면 차등지원
 - 소득중심의 사회안전망 강화, 전국민 고용안전망 및 기회복지안전망 구축
- 공적연금 개혁을 통한 미래세대 부담 완화
 - 정권별 연금 폭탄 돌리기 방지책 마련
 - 다층소득체계 구축으로 노후소득보장제도 확립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군인·공무원·사학) 간 연금소득 격차 적정화
-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위한 적정 보험료 인상 및 국가책임 강화
 - 재원부담 기준 공적연금법에 규정
 - 개별법 급여의 3자부담원칙 규정
 - 국가·고용주·근로자 부담기준 시행령 위임
- 현재 '저출산고령화 위원회'를 저출산 위원회로 분리
- 다자녀 가구·부모봉양 가구에 분양가점제 대폭 적용
- 有자녀 부모의 일자리 교육·훈련·정보 등 국가지원
- 다자녀 가구 대상, 의료·교통·문화·예술 등 예약·대기 시 요금 인하 및 급행(Express)창구 활용 등 일상적 혜택

- ◎ 고령자의 공동체 생활 지원 확대
- ◎ 고독처 신설로 고독사를 예방·관리

□ 이행기간

- ◎ 2022년~2026년

□ 재원조달방안 등

- ◎ 본예산 증액 및 관련 기금 확충

정책순위

6

G10 대한민국 만들기

정책분야

국방·통일·외교통상

□ 목 표

- 글로벌 리더십으로 당당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 실리외교로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 국제사회와 함께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 이행방법

- 글로벌 디지털 경제영토 확장
 - 디지털 청년 인재 10만명 육성, 중소·중견기업 글로벌 무역 확장
 - 디지털 통상협정 적극 추진
 - Mega FTA: CPTPP, USMCA, USJDTA, ASEDA, DEPA 등
 - 세계5대 디지털 통상강국
 - 기업역량·정부통상·4차산업 기술 → 디지털 기반 국제협력과 협상 주도
- 디지털 통상규범 선제적 대응
- 국익우선 실리외교와 글로벌 가치중심의 전략추진(경제·외교·안보)
 - 미국(안보)-중국(경제) 분리구조 탈피(외교의 정치화 탈피)
 - 새로운 도전에 대한 공동대처 및 선도적 대응
 - 美中문제, 코로나, 기후위기, 글로벌 공급망 등 새로운 도전 대응
- 자유민주주의 원칙 하에 평화적 남북대화 지속
- UN제재와 무관한 한민족 공동체 문화교류 추진
- UN제재 허용범위 내, 개성공단 국제 컨소시엄 제안·추진

▣ 이행기간

- ◎ 2022년~2026년

▣ 자원조달방안 등

- ◎ 본예산 증액 및 관련 기금 확충

정책순위

7

1가구 1주택 꿈 이루기

정책분야 산업자원·건설교통

□ 목 표

- 나라를 망치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 확실한 규제개혁으로 안정된 주택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 이행방법

- 생애 첫 주택구입자 및 주택실수요자 금융 우대 지원
 - 〈최초 주택구매자〉 개념 도입, 주택구입비용 대폭 지원
- 150만호 주택공급
 - 보존가치 떨어진 그린벨트(3등급 이하) 공공부지 택지개발
 - 단,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청년·신혼부부 등에 공공주택 우선 분양
 - 민간주택 수준의 주택공급으로, 토지임대부 분양 및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통한 ‘미니뉴타운’ 건설로 신속한 주택공급
- 예측가능한 공급과 인·허가 관련 신속총괄행정(fast track) 시행
- 고도제한 및 용적율 상향 조정 등 주택건설 규제완화
- 종합부동산세 개편
 - 1가구 1주택자 15년이상 보유, 10년 이상 거주시, 종합부동산세 면제
 - 현행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 11억 → 15억으로 상향
 - 일정 소득 이하 고령의 1주택자는 양도 시까지 과세이연제도 도입
 - 현행 12~15억, 50~94억 과표구간 세분화로 주택보유 수 비례 부담증가
 - 다주택자 세부담의 전년대비 증가율 연간 상한선은 현행 300%에서 조정지역 2주택자는 200%, 3주택 이상자는 250%로 인하

◎ 양도소득세 개편

- 1가구 1주택자 15년 이상 보유하고 10년이상 거주 시, 양도소득세 세율 일괄 10% 적용, 20년 이상 보유하고 10년 이상 거주 시, 전액 감면
- 다주택자의 주택이 시장에 매물로 나오도록 현행 양도세 중과 2년 유예
- 2년 유예기간 종료 후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5%p 상향

▣ 이행기간

- ◎ 2022년~2026년

▣ 재원조달방안 등

- ◎ 본예산 증액 및 관련 기금 확충

정책순위

8

교육개혁

정책분야

교육·인적자원

□ 목 표

- 해소를 위한 교육개혁을 하겠습니다.
- 교육격차 해소 통해 사회적 계층이동을 원활하게 하겠습니다.

□ 이행방법

- 교육부 폐지 및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 초중등 교육, 시·도 교육청으로 완전 이관
 - 교육부 폐지 후 기능은 국가교육위원회로 이관
 - 교육위원회 위원: (임기) 10년 (구성) 산업계·교육전문가·교육수요자 주축으로 구성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고등(대학)교육재정교부금 신설로 대학재정 확충
- 취업·교육·기회 3대 할당제 도입
 - 지역인재할당제 확대, 대학입시할당제 도입, 고졸채용할당제도 도입
- 교육 '메기'를 통한 교육혁명 전환
 - 누구나·언제나·어디에서나 교육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
- 대학교육 지원방식을 '대학지원'에서 '학생지원'으로 전환
- 대학진학 문을 넓히는 입시제도
 - 학생부종합전형 폐지 및 내신 중심/수시 단순화
 - 수능 2회 실시(고득점 제출), 중장기적으로 수능 자격시험화, 국공립대 일정비율 추천제, 사립대 입시 자율화
- 미래인재 육성과 대학경쟁력 제고
 - 거점대학 중심 국공립대 통폐합·특성화·학과 구조조정(서울대 수준 육성)
 - 서울대 학부 지방이전 및 서울 소재 사립대 지방이전 유도(세제 혜택 등)
 - 사립대 경상비 지원 점진 축소, 등록금·학과설치·정원 자율 등 운영 자율화

- 교육재단의 자산처분을 일부 귀속 허용하는 사립대 구조조정
- 지방대 특성화로 강소대학 육성

▣ 이행기간

- 2022년~2026년

▣ 재원조달방안 등

- 직접적 재정지출 없음(지방이전 대학 규모에 따라 세제혜택 변동)

정책순위

9

청년 5대 권리장전

정책분야 교육·인적자원

□ 목 표

- 청년의 누려야 할 기본권리를 확실히 마련하겠습니다.

□ 이행방법

- 첫째, 안전할 권리보장
 - 여성의 생활안전 보장
 - 청년세대가 부담하게 될 미래 국가부채의 한도를 제한
 - 모든 학자금 대출상환 시점을 취업시점으로 조정
 - 군 의무복무 기간을 국민연금에 포함하고, 보험료는 국가부담
- 둘째, 일할 권리와 자산형성 기회 보장
 - 청년 취업·창업 투자를 위한 '청년 기회바우처'를 지원
 -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청년 스타트업 창업 및 창직 위한 '청년 규제 샌드박스' 신설
 - 청년 스타트업 취업자 일자리 보장제 실시
- 셋째, 주거기본권 보장
 - 청년이 원하는 양질의 공공주택 공급확대 하고, 청년 우선 배정
 - 중위소득 이하 청년가구(1인 가구 포함) 생애 첫주택 장기모기지론 이자 부담 지원
 - 토지임대부 주택과 공공임대주택에 청년·신혼부부 우선 입주권 제공
- 넷째, 자기계발권 보장
 - 졸업 후 1년까지 '청년패스권' 발급, 전국 공공 지식인프라 무료이용 지원
 - 대학 미진학 청년에게도 대학생을 위한 국가장학금, 학자금 융자혜택과 동일한 수준의 취업·창업 학습자금 지원
- 다섯째, 정책참여 제도화
 - 청년 후보자의 총선 기탁금 50%로 조정

- 미래세대 직접영향 미치는 정책추진 시, '청년심의회' 구성·결정

▣ 이행기간

- ◎ 2022년~2026년

▣ 자원조달방안 등

- ◎ 직접적 재정지출 없음(지방이전 대학 규모에 따라 세제혜택 변동)

정책순위

10

선진과학기술·4차산업혁명 대책

정책분야 과학기술·정보통신

□ 목 표

- 다양성·자율성 下, 과감한 R&D투자로 추월경제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10대 산업 초격차 분야로 기술강국으로 우뚝 서겠습니다.
- 디지털 플랫폼 확장·그린혁신경제로 국가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 이행방법

- 다양성 및 자율성 하에 실패를 용인하는 연구 환경 확립
- 국가경제 존망 걸린 대규모 R&D 획기적 투자(한국형 Moonshot 프로젝트)
- 과학기술분야 연구대학, 교육대학, 산학협력 등으로 특화
- 미래 먹거리 10대 산업 초격차 분야에 대대적 투자
 - 초격차 Big10: AI반도체, 배터리(2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수소산업, 양자컴퓨터, 퀀텀 디스플레이, 6G, 차세대 모듈원전(SMR), 플렉시블OLED
 - R&D 인프라 구축과 해외인재 영입, 재정·세제지원, 규제개혁을 통한 생태계 조성
- 추격·우위유지 분야(4차산업)에도 기술패권을 위한 R&D지원 확대
 - AI, Iot, 로봇, 블록체인, 빅데이터, 클라우드, 5G, 메타버스 등
 - 미래 혁신성장을 위한 지원확대
- 플랫폼 경제의 글로벌 확장성을 높이는 데 지원 강화
-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사업에 총력지원
- 플랫폼 사업에 대한 규제를 글로벌 기준으로 개혁
- 생산자, 플랫폼사업자, 플랫폼노동자 간 상생모델 개발·지원

- ◎ 소·부·장 산업에 대한 지원 확대 강화(기존투자 확대)
 - IP R&D(지식재산기반 R&D) 의무화 → 글로벌 특허전쟁 대비
 -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등 중점 지원 대상 100개
- ◎ 탄소중립을 위한 신성장동력 산업 활성화·촉진 및 R&D 지원

□ 이행기간

- ◎ 2022년~2026년

□ 재원조달방안 등

- ◎ 본예산 증액 및 기금확충

제20대 대통령선거 정당정책 모음집



신자유민주연합

신자유민주연합

No.	정 책
1	한·미·일 군사동맹강화와 한·일 핵무기 공동개발
2	공영방송 폐지와 빅테크 언론검열 금지
3	법원 내 사조직 폐지, 사전선거 폐지, 수개표 실시
4	대규모 재개발을 통한 풍부한 민간주택공급
5	대학의 완전 자유화 보장과 사학재단 자율 정리
6	연금개혁
7	신혼부부 주택구입에 95% 정부지불보증
8	박근혜 대통령 재심을 통한 거짓 세력의 응징과 적폐수사로 수감된 인사들의 석방과 사면
9	5·18 역사왜곡처벌법 (5·18민주화운동특별법) 폐지 와 5.18유공자 공개
10	중대재해처벌법 폐지와 노동이사제 도입 반대, 탈원전 정책 폐기

정책순위

1

한·미·일 군사동맹강화와 한·일 핵무기 공동개발

정책분야 국방

□ 목 표

- 국방분야에서 한국, 미국, 일본의 동맹강화를 통해 완벽한 방위시스템 구축
- 일본과 핵무기 공동개발을 통한 핵무장화

□ 이행방법

- 한·미·일 연합훈련 강화
- 일본 요코스카 항에 주둔 중인 미국함대의 제주도 이전 추진
- 일본과의 핵무기 공동개발을 통해 핵무기확산을 우려하는 국제적인 압력 약화
- UN의 아시아본부를 DMZ에 유치

□ 이행기간

- 취임 후 즉시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한·미·일 연합훈련 강화와 일본과의 공동핵무장 추진에는 별도의 많은 예산이 불필요

정책순위

2

공영방송 폐지와 빅테크 언론검열 금지

정책분야 언론

□ 목 표

- 정치적 편향성이 없는 공정한 방송환경 확립
- 방송전파를 산업용으로 사용하여 정보통신사업 활성화 촉진
- 공영방송 폐지에 따른 광고물량의 민간방송사 이동으로 민간방송사 수익 증대
- 대형통신사들에 의한 언론검열 불허

□ 이행방법

- KBS가 사용중인 3개 채널(제1, 제2, 교육방송)의 주파수를 국가가 회수
- 회수한 주파수를 통신사업자에게 경매를 통하여 임대
- MBC의 경우 방송문화진흥회 지분을 민간에게 매각
-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이 자의적으로 이용자들의 글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말소시키지 못하도록 입법

□ 이행기간

- 취임 후 즉시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회수된 KBS 3개 채널 주파수 경매를 통해 매년 수조원대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방송문화진흥회가 보유한 MBC주식의 70%를 매각하면 약 1조 가량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방송문화진흥회는 이 자금으로 민간방송사가 양질의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음

정책순위

3

법원 내 사조직 폐지, 사전선거 폐지, 수개표 실시

정책분야 사법, 선거

□ 목 표

- 공정한 사법제도 확립
- 공정한 선거제도 확립

□ 이행방법

- 법원 내 우리법 연구회와 국제인권법 연구회 등 사조직을 철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 구체적인 실행방법은 김영삼 대통령이 군대 내 하나회를 해체시킨 방법을 참고
- 사전선거를 폐지하고 본투표일을 2일로 확대
- 투표종료 직후 투표소에서 수개표 실시

□ 이행기간

- 취임 후 즉시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법원 내 사조직 해체는 재원조달이 불필요
- 사전선거를 폐지하고 투표종료 직후 투표소에서 수개표를 실시하면 기존의 선거관리비용이 대폭 절감될 수 있음

정책순위

4

대규모 재개발을 통한 풍부한 민간주택공급

정책분야 건설교통

□ 목 표

- 기존 대도시 재개발과 재건축을 통한 풍부한 민간주택공급
- 대도시 재개발과 재건축에 첨단기술(설계, 시공, 자재, 관리)사용을 의무화하여 기술개발을 촉진 시키고,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미래 주택 환경 구현
- 첨단도시의 탄생으로 고급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 신도시 개발 억제로 국가예산(토지보상 등) 절감

□ 이행방법

- 서울의 강북 등 낙후지역 용적율을 2000-3000%로 상향
- 민간업자가 사업을 제안하고, 정부는 가능한 민간업자의 요구를 수용(필요한 경우 특별법 제정)
- 국민연금을 투자자로 참여시켜 개발이익이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는 이익회수 시스템 구축

□ 이행기간

- 취임 후 즉시 추진

□ 자원조달방안 등

- 민간주도의 재개발 재건축은 별도의 예산이 필요치 않음

정책순위

5

대학의 완전 자유화 보장과 사학재단 자율 정리

정책분야 교육

□ 목 표

- 대학에 대한 정부간섭을 최소화하여 대학이 미래산업사회에 창의적으로 대응
- 대학교육 자율화로 불필요한 행정비용 삭감
- 인구감소에 따라 사학재단이 스스로 재단을 정리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

□ 이행방법

- 정부가 대학의 신입생선발, 학과개설, 등록금 결정 등에 간섭할 수 있는 모든 규정을 철폐
- 필요하다면 대학이 정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부는 대학에 지원한 부분만을 관리 감독
- 인구감소에 따라 사학재단이 일부 자산을 영리목적의 개인(사학재단 설립자) 또는 법인에 귀속 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

□ 이행기간

- 취임 후 즉시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대학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면 많은 예산이 절감
- 특별법 제정으로 사학재단이 줄어들면 사립대학에 지원되는 예산의 감축이 가능

정책순위

6

연금개혁

정책분야 재정

□ 목 표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원연금, 사학연금 등을 국민연금으로 통합
- 연금에 사회부조(扶助)적 개념 도입으로 연금수입 확대
- 지속 가능한 연금시스템 구축

□ 이행방법

- 신규로 임용되는 공무원, 교원, 군인은 국민연금에 가입 (공무원연금, 교원연금, 사학연금은 신규가입자 없음)
- 소득이 있는 연금수급자는 연금을 납입 (연금을 수령하면서 동시에 연금 납입)

□ 이행기간

- 취임 후 즉시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소득이 있는 연금수급자도 연금을 수령하면서 동시에 연금을 납입케하여 연금수입을 확대
- 초과세수가 발생하면, 정부는 우선적으로 신규가입자가 없는 공무원연금과 교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에 출연
- 국민, 교원, 사학, 군인 연금납부액을 상향하여 조정(연금의 지급시기를 늦추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음)

정책순위

7

신혼부부 주택구입에 95% 정부지불보증

정책분야 복지

□ 목 표

- 젊은 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급
- 결혼을 적극 권장하여 저출산 극복

□ 이행방법

- 신혼부부가 구입하는 생애 최초주택에 주택금융공사가 주택구입가의 95%를 지불보증
- 예를 들면, 신혼부부가 10억원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5%인 5천만원만 본인이 부담, 나머지 9억5천만원은 금융기관에서 대출, 주택금융공사는 금융기관의 대출 9억5천만원에 대한 지불을 보증
- 금리는 '기준금리 +시중 은행 마진'을 적용
- 주택금융공사는 입찰을 통해 가장 낮은 마진을 제시하는 금융사를 선정

□ 이행기간

- 취임 후 즉시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는 주택구입가의 95%에 해당되는 금리를 부담해야하므로 자신의 소득에 비해 무리한 가격의 주택 구입은 자제 할 것임. 따라서 주택금융공사의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정책순위

8

박근혜 대통령 재심을 통한 거짓 세력의 응징과 적폐수사로 수감된 인사들의 석방과 사면

정책분야 정치

□ 목 표

- 소위 적폐수사로 단죄된 인사들의 즉각적인 석방과 박근혜 대통령 재심을 통한 탄핵과정의 불법성 확인으로 사법정의 실현

□ 이행방법

- 문재인 정부의 적폐수사로 구금된 인사들의 즉각적인 석방과 사면
-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당성 규명에 관한 특별검사임명
- 국회 탄핵소추과정의 정당성과 적법성 검토
- 공정하고 정확한 태블릿PC 포렌식검사
- 박영수 특검의 수사 적법성 검토
-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과정 적법성 검토

□ 이행기간

- 취임 후 즉시 추진

□ 자원조달방안 등

- 탄핵의 불법성을 입증하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과 활동에 수십 억의 세금이 필요

정책순위

9

5·18 역사왜곡처벌법(5·18민주화운동특별법) 폐지와 5.18유공자 공개

정책분야 행정

□ 목 표

- 국민의 기본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5.18민주화운동특별법의 폐지
- 5.18 유공자 공개를 통하여 가짜 유공자 색출

□ 이행방법

- 국회를 통한 5.18민주화운동특별법 폐지
- 일정 기간을 통해 5.18 유공자 중 부적격자는 스스로 신고(비공개)하여 유공자자격을 자진 반납하도록 권고
- 부적격자 자진 신고기간이 끝나면 5.18명단을 공개
- 공개된 명단에 한해서 그 자격을 다시 검증

□ 이행기간

- 취임 후 즉시 추진

□ 자원조달방안 등

- 가짜의 5.18 유공자를 걸러냄으로서 예산을 절감

정책순위

10

중대재해처벌법 폐지와 노동이사제 도입 반대, 탈원전 정책 폐기

정책분야 산업자원

□ 목 표

- 산업활동의 위축을 초래하는 중대재해처벌법 폐지
- 기업의 경영활동을 방해하는 노동이사제 도입 반대
-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여 값싸고 안정적인 에너지를 사용하고 원자력산업을 국가의 주력산업으로 육성

□ 이행방법

- 중대재해처벌법은 국회를 통해 폐지
- 노동이사제 도입이 입법화되지 않도록 국회를 설득
- 원자력 발전소 폐지 과정의 불법성을 수사하고, 원자력 발전소를 추가로 건설

□ 이행기간

- 취임 후 즉시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은 한국전력이 자금을 조달함

제20대 대통령선거 정당정책 모음집



우리공화당

우리공화당

No.	정 책
1	붉은적폐 청산 및 악법 폐지
2	소득주도성장정책 폐기 및 성장중심경제정책
3	국가건전재정법 제정과 포퓰리즘정책의 억제
4	방역체계 개혁
5	혁신적 국토균형발전정책 추진
6	탈원전정책 폐기 및 원전산업의 육성
7	민노총·전교조 해체
8	교육제도 혁신
9	선거제도 개혁
10	내각제개헌 및 민주통합정부음모 분쇄

정책순위

1

붉은적폐 청산 및 악법 폐지

정책분야 정치, 사법

□ 목 표

- 붉은적폐 청산 및 악법 폐지를 통한 헌법질서 회복

□ 이행방법

- 붉은적폐 청산
 -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은 권력분립과 적법절차 등의 헌법원리를 위반하여, 국회·법원·검찰·국정원 등과 같이 독립적인 권한과 기능을 갖는 국가기관들을 정권에 예속시키거나 무력화시켜 국가기관들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하였다.
 -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은 탈원전 정책 등 주요한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수많은 직권남용을 자행하였다. 또 방역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중국인 입국 금지·백신 확보와 같은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등 수많은 직무유기죄를 범하였다.
 -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은 검찰과 법원을 통제하여, 울산시장선거 개입의혹사건, 월성1호기 경제성조작 의혹사건, 대장동 특혜 의혹사건 등 수많은 권력형 게이트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방해하는 사법농단을 자행하였다. 또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박근혜 정부의 주요 인사들에 대한 모욕적이고, 강압적인 수사와 기소를 통해 불법적인 정치보복과 인권침해를 자행하였다.
 -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에 의해 파괴된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이 자행한 붉은적폐를 청산하여야 한다.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붉은적폐청산위원회>를 구성한다. <붉은적폐청산위원회>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적인 준사법적 기관으로서,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의 헌법 질서 파괴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실시한다.

◎ 악법 폐지

-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의 하수인이 된 국회는 공수처법, 대북전단금지법, 5·18역사왜곡금지법, 노동3법, 부동산3법, 주52시간근로시간제한 등 헌법질서를 파괴하고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악법들을 제정하였다. 또 국가보안법폐지 법률안, 언론중재법 개정안(언론징벌법),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법안 등 많은 악법적 법안들이 발의되었다.
-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이 북한과 맺은 굴욕적인 판문점선언과 군사합의 및 중국과 맺은 사대적인 3불합의는 심각하게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주권을 침해한다.
- 이러한 악법들과 악법적 법안들은 위헌법률심판 또는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무효화한다. 또 북한이나 중국과 맺은 반헌법적 선언이나 합의는 무효선언을 통해 폐기한다.
- 특별법의 제정 또는 긴급명령의 발동 ⇒ 〈붉은적폐청산위원회〉 구성 ⇒ 붉은적폐에 대한 철저한 조사 ⇒ 책임자 처벌 기타 후속조치

▣ 이행기간

- ◎ 2022년 ~ 2027년

▣ 재원조달방안 등

- ◎ 국비

정책순위

2

소득주도성장정책 폐기 및 성장중심경제정책

정책분야 경제

□ 목 표

- 소득주도성장정책 폐기 및 성장중심경제정책 추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성장동력 확보

□ 이행방법

- 소득주도성장정책의 폐기

-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은 경제논리에 어긋나는 해괴한 소득주도성장정책을 강행하여 대한민국의 경제와 재정을 파탄시켰다.
- 소득주도성장정책은 인위적으로 가계의 임금과 소득을 증대시킴으로써 소비를 증대시키고, 이를 통해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경제정책이다. 이 정책은 가계의 임금과 소득을 증대시키는 방법을 정상적인 경제성장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일방적인 희생과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퍼주기 정책)에서 찾기 때문에, 자유시장경제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사회주의적 경제정책이다. 이 정책은 경제성장을 통해 임금과 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이 아니라, 임금과 소득을 인위적으로 증대시켜 경제성장을 이룬다는 정책으로 <말이 마차를 끄는 것이 아니라 마차가 말을 끄는> 본말이 전도된 정책이다.
- 대한민국의 경제와 재정을 파탄시킨 소득주도성장정책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 성장주도경제정책으로의 전환

- 대한민국이 경제성장의 동력을 회복하여,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경제의 패러다임을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함으로써 투자의 증대, 생산성 향상, 고용 창출, 기업의 경쟁력 확보 등을 통하여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성장주도경제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 4차산업혁명 시대에 유망한 분야로 떠오르고 있는 산업(IT산업, BT산업, AI산업, 에너지산업 등)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젊은 인재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국제경쟁력을 확보한다.

- 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다양한 규제(과다한 최저임금, 주52시간근로시간제, 과도한 세금, 경제인에 대한 과도한 처벌 등)를 철폐하여 경제주체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한다.
- 스타트업 등 다양한 형태의 창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창의적인 경제활동을 장려하여 미래의 성장동력을 확보한다.
- 정책 선언 ⇒ 법제 및 조직 정비 ⇒ 정책 추진

▣ 이행기간

- ◎ 2022년 ~ 2027년

▣ 자원조달방안 등

- ◎ 국비

정책순위

3

국가건전재정법 제정과 포퓰리즘정책의 억제

정책분야 재정

□ 목 표

- 국가재정의 건전성 확보 및 미래세대의 재정부담 경감

□ 이행방법

-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은 집권세력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복지원사업이나 코로나 재난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포퓰리즘적 퍼주기정책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포퓰리즘적 퍼주기정책은 국가의 재정지출을 과도하게 확대하여 국가채무를 급격하게 증대시킴으로써, 미래세대의 조세부담을 증대시키는 동시에 전반적인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크게 악화시켰다.
- 포퓰리즘적 퍼주기정책을 막고 국가재정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용 및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재정의 건전한 운용에 관한 일반원칙과 세부기준을 명문화하는 국가건전재정법을 제정한다. 국가건전재정법은 국가(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적용하여,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포퓰리즘적 퍼주기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통제한다.
- 국가건전재정법에는 1)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2)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며, 3)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원칙이 명시한다. 또 이러한 원칙을 위반하는 국가기관·개인·집단에 대해서는 엄격한 형사처벌과 함께 재정손실에 대한 보전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 국가건전재정법은 정부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을 법적인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통제함으로써 국가재정의 건전성과 지속성을 확보한다. 또 국가건전재정법은 포퓰리즘적 퍼주기정책을 통한 과도한 국가재정지출을 억제함으로써 미래세대에게 재정부담을 전가하는 것을 막고, 현재세대와 미래세대가 공평하게 재정부담을 분담하게 한다.
- 법안의 발의 ⇒ 국회에 의한 입법 ⇒ 법에 따른 재정정책 추진

□ 이행기간

- 2022년 ~ 2027년

▣ 자원조달방안 등

- 국비

정책순위

4

방역체계 개혁

정책분야 보건의료

□ 목 표

-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방역체계의 수립

□ 이행방법

-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은 중국에서 코로나가 발생한 초기에 중국인의 입국금지와 같은 기본적인 방역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 국내에 코로나가 확산된 이후에도 충분한 의료인력·의료시설·백신 등 의료물자를 확보하는데 실패하여 코로나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방역 참사가 벌어졌다.
-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은 코로나 발생 초기에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확진자의 수가 적은 것이 K-방역의 성과라는 자화자찬을 늘어놓았다. 하지만 초기에 확진자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은 국민의 자발적 협조와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었다. 문재인 정권이 한 것이라고는 강압적인 통제와 방역실태의 은폐뿐이었다. 즉, K-방역은 허울뿐인 보여주기식의 정치방역이었다. 확진자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난 최근에는 K-방역이 백신패스제 등을 통해 국민을 통제하는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 이제 강압적이고 기만적인 정치적 방역체계를 폐기하고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방역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방역정책은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감염병의 확산추세에 맞춰 신속하고 적정하게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 감염병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1) 감염병 정보의 신속하고 정확한 수집과 분석 및 공개, 2) 충분한 물량의 백신과 치료제의 선제적 확보, 3) 충분한 의료 인력과 의료 시설의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특정한 집단·지역·직군을 자의적으로 감염병 확산의 주범으로 규정하는 마녀사냥식 방역정책은 효율적인 방역을 저해하기 때문에 결코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
- 과학적 근거 없이 식당 등의 영업시간이나 수용인원을 제한하고, 백신패스제를 실시하는 것은 자영업자들과 일반 국민에게 감염병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으로 특히, 자영업자들에게 희생불가능한 피해를 주게 된다. 따라서 자영업자들과 일반 국민에게 주는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역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방역피해자에 대해서는 지원금, 대출, 세제 지원 등의 선별적 맞춤형 지원을 통해 부담을 적절하게 분담하도록 한다.

- 전문가들로 구성된 <코로나방역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방역실패의 원인과 피해실태를 철저히 조사한 후, 방역실패의 책임소재를 밝혀 관련자들에게 엄격한 법적 책임을 묻고, 피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대책을 마련한다.
-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 공청회 ⇒ 특별법의 제정 ⇒ 위원회의 구성 ⇒ 방역체계의 개혁

□ 이행기간

- 2022년 ~ 2027년

□ 자원조달방안 등

- 국비

정책순위

5

혁신적 국토균형발전정책 추진

정책분야 지방자치

□ 목 표

-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과 균형적 발전

□ 이행방법

-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수도권은 인구가 너무 많고, 지방은 인구가 너무 적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주택 부족, 집값 폭등, 전·월세 부족, 교통 혼잡, 환경오염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지방은 기업의 역외 이전, 상권의 붕괴, 일자리 부족, 열악한 교육·문화·의료 인프라 등으로 인해 고사 직전의 위기를 맞고 있다.
- 이제 지방에서도 사람이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혁명적인 발상의 전환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면서 함께 발전하고 거주하는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적절한 수준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혁신적 국토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 국토균형발전을 이룩하는 가장 중요한 관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법, 지방교부세를 증액하는 방법, 재정자립도가 일정한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특별지원금을 지급하는 방법, 재정자립도를 높이는데 큰 성과를 거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성과지원금을 지급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
- 이러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재정자립도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지방의 재정자립도를 획기적으로 높임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이 지역 내에서 자족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 민간 차원에서도 지방의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지방의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등의 세금감면과 각종 규제의 면제와 같은 지원대책을 실시한다. 지방의 대학에 대해서는 학교운영비 지원, 국가장학금 확대, 학교운영의 자율성 확대 등의 조치를 취한다. 지방의 의료기관이나 문화시설에 대해서도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갖도록 다양한 지원을 실시한다.
-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 법률개정 및 제도정비 ⇒ 법률과 제도의 시행

▣ 이행기간

- 2022년 ~ 2027년

▣ 자원조달방안 등

- 국비

정책순위

6

탈원전정책 폐기 및 원전산업의 육성

정책분야 산업자원

□ 목 표

- 망국적인 탈원전정책의 폐기와 원전산업의 육성

□ 이행방법

-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은 관련 업계와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망국적인 탈원전정책 내지 원전폐기정책을 강행하였다. 이로 인해 원전산업의 기반이 붕괴되고, 원전 수출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또 원전과 관련된 고급인력이 대규모로 해외로 유출되고, 원전과 관련된 학과가 존폐의 위기에 몰려있다. 더욱이 원전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상권과 경제가 황폐화하고 있다.
- 이제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이 추진한 탈원전정책을 폐기하고 원전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원전산업의 육성은 전반적인 경제성장과 수출증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기요금을 인하하며, 나아가 에너지주권을 확립하고 탄소중립의 실현을 앞당기게 된다.
- 원자력발전은 석유와 LNG 기타 신재생에너지에 비해 경제성이 아주 높은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자립을 실현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다.
- 원자력발전은 온실가스의 배출이 거의 없는 청정한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원자력발전산업을 육성함으로써, 환경오염과 지구온난화로 인한 생태계파괴를 최소화하고 탄소중립의 실현이라는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다.
- 일부 환경론자들은 원전의 안전성에 커다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엉터리 주장일 뿐이다. 다른 에너지원에 비하여 발전단위당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는 현저히 낮다. 또 원전에 관한 과학과 기술의 발전과 운영체계의 개선은 원전의 안전성을 더욱 높여주고 있다.
- 탈원전정책의 폐기 및 원전육성정책의 선언 ⇒ 법률제정과 제도정비 ⇒ 원전육성정책의 시행

▣ 이행기간

- 2022년 ~ 2027년

▣ 자원조달방안 등

- 국비

정책순위

7

민노총·전교조 해체

정책분야 노동, 교육

□ 목 표

- 근로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노조로서의 순수성을 상실한 민노총과 전교조의 해체를 통한 노사 관계와 교육의 정상화

□ 이행방법

● 민노총 해체

- 노동조합은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근로자들의 자발적인 조직이다. 하지만 민노총은 사업장의 범위를 넘어 전국적 단위에서 정치투쟁을 전개하는 정치단체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이미 노동조합으로서의 순수성을 상실하였다. 특히 민노총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체제와 시장경제질서를 부정하는 반국가적 활동을 노골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민노총의 이러한 활동은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 민노총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고용세습을 단체협약을 통해 제도화하려는 시대착오적 악습을 자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서의 폭압적인 갑질과 같은 악행들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악습과 악행은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방해하여 경제를 침체시키고, 청년 일자리를 앗아가고 있다.
-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확보하고 경제발전과 산업평화, 그리고 청년 일자리의 확보를 실현하기 위해 민노총은 반드시 해체되어야 한다.

● 전교조 해체

- 전교조는 교사나 교수의 권익을 증진시킨다는 교원노조 본연의 목적과 기능을 벗어나 학교를 교육의 장이 아니라 정치투쟁의 장으로 변질시켰다. 전교조는 학생들에게 그들의 능력을 계발하고, 올바른 국가관과 가치관을 심어주는 진정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반국가적인 이념을 주입하는 좌편향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전교조의 활동은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고 헌법에 규정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존립을 위협하는 것이다.

-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고, 올바른 교육을 받을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하며,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존립을 유지하기 위해 전교조는 반드시 해체되어야 한다.
- 특별법의 제정 및 소송의 제기 ⇒ 특별법과 판결의 집행

▣ 이행기간

- ◎ 2022년 ~ 2027년

▣ 자원조달방안 등

- ◎ 국비

정책순위

8

교육제도 혁신

정책분야 교육

□ 목 표

- 학제의 획기적 개편을 통해 4차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교육제도 마련

□ 이행방법

- 현재 대한민국 사회는 산업사회의 단계를 넘어 정보사회의 단계로 접어들었고, 융합과 초연결성을 특징으로 하는 4차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의 변화는 국민의 생활양식을 총체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제도를 혁신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 [6-3-3-4]의 4단계로 구성된 현재의 학제는 산업사회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학교 안팎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정보사회에서는 학교교육의 단계를 줄이면서 각 단계에서 집중적이고 압축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학제를 혁신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 현재의 4단계 16년의 학제를 3단계 14년의 학제 [5-5-4]로 개편한다. 초등학교를 6년제에서 5년제로 1년 단축하고, 초등학교의 취학연령을 현재의 만 7세에서 만6세로 낮춘다. 아동들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해서 충분한 유아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취학연령을 낮추고 교육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아동들의 교육성고를 높이는데 더 적합하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초등학교의 초등교육을 대학의 고등교육으로 연결시키는 중등교육기관으로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성격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통합하여 5년제의 중등학교로 변경함으로써 중등교육의 체계성과 통합성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 새로운 학제 하에서는 학생들이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학업을 완료하여 만20세가 되면 대학을 졸업할 수 있으며, 군복무를 마친 경우에도 만24세에 사회에 진출할 수 있다. 학교를 떠나서도 사회에서 충분한 교육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학생들을 지나치게 장기간 동안 학교교육에 묶어둘 필요가 없다.
- 학제 개편을 통해 학업을 마친 사람들이 조기에 사회에 진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청년시기에 실패한 사람도 다시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재도전의 기회를 갖게 된다. 또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을 늘림으로써 고령화 사회에서의 경제활동인구의 부족에 대비할 수 있다.

-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 공청회 ⇒ 교육관련법의 개정 ⇒ 학제개편의 시행

□ 이행기간

- 2022년 ~ 2032년

□ 자원조달방안 등

- 국비

정책순위

9

선거제도 개혁

정책분야 정치

□ 목 표

- 올바른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 이행방법

-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가장 중요한 절차인 선거는 국민의 의사가 자유롭게 표현되고, 선거결과에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도 정교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 현재의 선거제도는 선거의 공정성·투명성과 관련하여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 사전투표제와 전자개표(계수)제이다. 선거일이 공휴일로 지정되어 누구나 선거 당일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투표는 예산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투표 방식 및 투표함 보관·이송과 관련하여 끊임없이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사전투표제는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 투표함을 투표소에서 개표소로 이동하고 개표소에서 전자개표(정확하게 말하면 전자계수)를 실시하는 것 역시 참관인들이 투표지의 유효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투표지가 각 후보자에게 올바르게 집계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개표과정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개표의 신속성이 아니라 개표와 집계의 정확성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투표소 현장에서 참관인들이 입회하는 가운데 수개표가 이루어지도록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 중앙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거관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선관위가 선거여론조사·언론보도·선거운동·투표과정·개표방식 등 선거의 전반적인 과정과 관련하여 여당에게 유리하고 야당에게 불리한 편파적인 선거관리 혹은 거대정당 후보자에게 유리하고 중소정당 후보자에게 불리한 불공정한 선거관리를 자행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기관·단체·개인에 대해서는 엄중할 처벌을 가하도록 해야 한다. 선관위의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선거관리는 선거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여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이다.

- 검찰과 법원이 선거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기소와 소송을 게을리하는 경우에도 민주주의 파괴라는 차원에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사정기관을 비롯한 국가기관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 선거관련 법령의 개정 ⇒ 선관위의 공정선거관리 책임 강화 ⇒ 선거제도 개혁조치의 시행

□ 이행기간

- 2022년 ~ 2027년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

정책순위

10

내각제개헌 및 민주통합정부음모 분쇄

정책분야 정치

□ 목 표

- 내각제개헌 및 민주통합정부 구성을 획책하는 기득권세력의 음모를 분쇄하여 대한민국의 정체성 수호

□ 이행방법

- 내각제개헌 및 민주통합정부 음모는 국민의힘이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의 붉은적폐청산과 정권 교체라는 국민의 염원을 무시한 채, 대선에서 승리한 다음 더불어민주당과의 기만적인 야합을 통해 내각제개헌을 실시하고 양당이 중심이 된 민주통합정부를 구성하겠다는 저의를 드러낸 것이다
- 내각제개헌 및 민주통합정부 음모가 현실화되면, 좌파세력의 촛불쿠데타가 완성되어 좌파 100년 집권의 문을 열어주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은 김정은이 지배하는 사회주의 연방국가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이렇게 되면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이 망쳐버린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사라지며, 친북주사파세력과 거짓촛불세력들이 자행한 붉은적폐를 청산하는 것도 불가능해진다.
- 특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거짓·사기 탄핵이 합법화되고 정당화됨에 따라, 불법탄핵에 대한 진상규명과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회복이 불가능하게 된다.
- 이승만 건국대통령의 자유정신과 한강의 기적을 이룬 박정희 대통령의 반공·애국정신이 부정되고, 자유민주주의체제와 자유시장경제를 기반으로 찬란한 발전을 이룩한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는 짓밟히게 된다.
- 우리공화당은 좌파세력과 위장 우파세력이 권력구조를 대통령제에서 의원집정부제나 내각제로 변경하려는 망국적인 내각제개헌 음모와 이 두 세력이 권력을 분점하면서 영구집권을 획책하는 민주통합정부 음모를 반드시 분쇄할 것이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수호하고 찬란한 역사를 계승하는 길이다.

- 내각제개헌 및 민주통합정부 구성에 대한 철저한 정보수집 및 분석 ⇒ 음모분쇄 투쟁위원회 구성 ⇒ 투쟁활동의 전개

▣ 이행기간

- 2022년 ~ 2027년

▣ 자원조달방안 등

- 소요예산 없음

제20대 대통령선거 정당정책 모음집



진보당

진보당

No.	정 책
1	땅보다 땀,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나라
2	모두를 위한 성평등한 나라
3	농민기본법 제정으로 농업대혁명, 자영업자 생계 전면보장, 노점상도 경제적 주체 인정
4	일하는 청소년, 집 없는 청년, 모두를 위한 평등사회
5	부동산 투기공화국 해체하고 제2의 토지개혁 실현
6	기후위기, 지금이 아니면 안됩니다
7	모두가 차별없이 함께사는 세상, 무상교육·무상의료·무상돌봄
8	부자에게 세금을! 재벌해체로 경제민주화 실현
9	국회의원 특권 폐지, 직접민주주의, 선거제도 개혁으로 정치개혁 실현
10	한반도 평화번영통일 시대

정책순위

1

땅보다 땀,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나라

정책분야 노동(교육·인적자원)

1.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노동중심 자주평등국가’ 명시하는 ‘노동헌법’

- ◎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노동 중심 자주평등공화국이다.’ 명시. 근로자 아닌 노동자로 규정하고, 모든 사람의, 노동의 권리 및 직접-무기고용, 노조 할 권리 등을 헌법에 명시
 - 노동헌법 개헌
 - 헌법 32조1항 모든 사람은 노동의 권리를 가짐, 국가는 고용안정, 적정임금,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보장 명시.
 - 헌법 32조3항 해고제한의무, 직접고용, 무기고용 원칙 명시하여 전국민 일자리 보장의 근거를 만들.
 - 헌법 33조1항 모든 사람은 노조 결성, 가입할 권리 명시
 - 경찰, 군인 제외 나머지 공무원 노동3권 보장
 - 노동자의 이익균점권, 경영권 참가 신설

2.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까지 일하는 모두를 위한 ‘전국민노동법’

- ◎ ‘전국민노동법’ 제정으로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까지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권을 보장. 노조할 권리, 온전한 노동3권, 일할 권리,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등 실현
 - ‘전국민노동법’ 제정 및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개정
 - 임금근로자를 넘어 비임금근로자(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등) 등 모든 일하는 사람들에게 노동권 보장
 -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3. 국가가 돌봄, 생태 등 좋은 공공일자리 보장하는 ‘국가고용책임제’

- ◎ 국가가 고용을 책임지며 ‘기본권’으로서 일자리 보장. 일자리를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일자리 제공하고 임금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획기적 확대. 헌법 제32조 1항을 모든 사람은 노동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고용안정과 증진, 적정임금 및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보장해야 하며... ”로 개정

- ‘국가고용보장법(가)’ 제정
 - 국무총리 주재하에 국가와 지자체는 돌봄, 가사, 생태, 지역 차원의 공공사회서비스부 문 일자리 창출 및 임금 삭감없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총 200만개 추가 창출
 - 지역별 취업기관 활용 ‘일자리은행’운영 일자리를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일자리 제공

4.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임금삭감 없는 ‘주4일제’

- ◎ 임금 삭감없고, 차별없는 주 4일제 전면적 도입. 연간노동시간 1,700시간대 실현, 100만개 일자리 마련. 일과 삶의 균형 ‘워라벨’실현, 저출생 극복 가능
- 노동시간 단축 특별법 제정
 - 노사정 동수로 노동시간단축위원회(+산업별 위원회) 구성, 종합적 수립·집행
 - 법정근로시간 주 32시간, 연장근로 5시간 제한, 년 1700시간 초과 금지 노동시간 상한제 도입.
 - 교대제, 야간노동 최소화 및 일자리 확대와 연결(100만 일자리 창출)
- 근로기준법 59조(근로시간 및 휴게 시간의 특례) 폐지

5.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 ◎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전면 보장을 위한 산업안전 3법 추진
- ‘중대재해처벌법’강화
 -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중대재해처벌법 전면적용
 - 중대재해 발생시 해당 법인 및 대표자에 과징금 부과 및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사업주에 대한 ‘구속’수사 등 처벌 강화, 원청 직접 책임 강화
-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건설안전특별법 적용하여 안전 보장함.
 -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모두에게 안전관리 책임법으로 규정 및 위반에 대한 형사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 폭염, 한파 등 재난 경보시 ‘작업중지권’ 부여
 - 사망 또는 중상해가 일어난 공정 또는 재해발생 사업장은 도급을 금지하고 직접 고용하도록 강제

정책순위

2

모두를 위한 성평등한 나라

정책분야 여성(교육·인적자원)

1. 모든 형태의 혐오와 차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 제정

-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헌법상의 평등권을 보호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함.

2. 성범죄 없는 안전한 나라 ‘N번방 방지법’ 강화·‘파트너폭력 방지법’ 제정

- 오프라인 성범죄를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여기는 것처럼, 디지털 성범죄물의 유포와 시청, 소지 등도 성적 인격권 침해로 간주하는 인식 전환이 필요.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발생 시 물리적 폭력 외에도 언어·경제·심리적 영역에서의 학대와 폭력도 포괄하여 피해자 신고 성립 및 보호 조치 진행
 - N번방 방지법 강화
 - 디지털성범죄 특수성 고려, 범죄자 적극 처벌을 위한 양형 기준안 제시
 - 불법촬영물 공급망 해외서버 단속 및 처벌을 위한 ‘사이버 범죄 조약(일명 부다페스트 조약)’에 가입하여 국제공조수사 적극 활용
 - 파트너 폭력방지법 제정
 - 폭력의 심각성 축소하는 ‘데이트폭력’ 대신 ‘파트너 폭력’으로 용어 규정
 - ‘스토킹 처벌법’ 개정
 - 피해자에게 위협 초래하는 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
 -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면 개정
 - 사건 현장에서 가해자 체포 우선제도 도입
 - 피해자보호명령 신청 절차 간소화 및 신속한 결정 필요

3. 안전한 임신 중지 보장과 출산을 위한 ‘성·재생산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 성과 재생산 관련 문제는 당사자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며, 비밀을 침해받지 않는다는 원칙이 확립되어야 함. 또한 나이, 장애, 언어 등의 차별 없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본인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충분히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

- 성과 재생산 건강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국가의 책무, 취약계층의 성과 재생산 건강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성.재생산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 제정’

4. ‘채용성차별 근절’ 및 ‘성평등임금공시제’로 성별임금격차 해소

- 여성 구직자들은 노동시장의 진입단계에서 좋은 일자리로의 진입이 가로막혀 있고, 노동시장에 진입한 여성들의 직종분리, 업무배제, 승진 누락 등 다양한 차별로 성별임금격차가 나타나고 있음.
 - 채용성차별 근절
 - 채용 시 결혼, 임신 등에 관한 차별적 질문을 하는 것을 남녀고용평등법이 금지하는 성차별행위로 규정
 - 채용단계별 합격자 성비 공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채용성차별 처벌규정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 ‘성평등임금공시제’
 -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까지 의무화
 - 남녀고용평등법상 임금자료 제출 의무화 등 관련 법개정 통해 점차 확대
 - 100인 이상 기업부터 ‘성평등지표’ 평가 시행, 기준 점수 미달 시 총급여액의 1% 벌금 징수

5. 결혼하지 않아도 살기 좋은 ‘생활동반자법’ 제정

-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해야 함. 혼인, 혈연관계가 아니어도 주거, 생계를 공유한다면 가족이며 사실혼, 비혼 동거 등 법률혼 이외 혼인에 대한 차별 폐지가 필요함.
 - 결혼하지 않아도 살기 좋은 ‘생활동반자법’ 제정
 - 민법·건강가정기본법 개정 등 ‘가족’을 언급하고 있는 240여개 현행법 정비
 - 특정한 1명과 동거하며 부양하고 협조하는 관계를 맺고 있는 성인을 ‘생활동반자’로 규정, 법률혼과 같은 관계로 인정하고 지원정책 대상에 포함

6. 고용단절 방지 ‘바로복직제도’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하여 ‘바로복직제’ 실현
 - 여성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노동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또는 기업 총 매출액의 1% 벌금으로 처벌수위 상향.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특별근로감독관 배치 조항 신설

정책순위

3

농민기본법 제정으로 농업대혁명, 자영업자 생계 전면보장, 노점상도 경제적 주체 인정

정책분야 농민, 자영업, 노점상(교육·인적자원)

1. 농민기본법 제정, 식량자급률 100% 법제화 및 농민에게 농산물가격결정권 보장

- 코로나19, 기후위기로 식량위기가 높아짐. 특히 한국은 식량수입 5위 국가로써, 세계 곡물자급률 평균(100.8%)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20.2%에 머물고 있어 식량위기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음. ‘농민기본법’ 제정을 통해 농민의 개념을 정리하고, 농민등록제를 도입해 농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함.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폐기, ‘농민기본법’ 제정
 - 식량자급률 목표 100% 법제화, 식량자급률 목표 달성을 위한 농지확보
 - 농업을 국가 미래전략 산업으로 정하고, 2년마다 계획 수립
 - 농산물가격 결정에 농민 참여를 기본으로 한 농민 권리보장
 - 농업의 공공성 강화, 국가책임농정 실현

2. 농민수당 제정으로 농민수당 ‘월 150만원’ 도입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44조 원을 쏟아가며 공공기관 이전 등을 추진했지만 수도권 과밀화를 막는 데 실패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짐. 사람에 대한 투자와 농어촌지역에 대한 강력한 인센티브(농민수당 매월 150만 원) 작동으로 농민을 500만 명으로 확대하고, 수도권 과밀화를 해결해 나가야 함.
 -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획기적 대책으로 ‘농민수당법’ 제정 - 매월 150만 원 지급
 - 농민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정리
 - 농업예산 5% 확보 (2022년 16조 6,767억 원으로 2.8%, 5%일 경우 30조원 예상)
 - 10년 이내에 농민 500만 명으로 확대 (2020년, 220만 명)
 - 농민수당 매월 150만 원 지급 예산확보

3. 3000평 농지 임대 및 맞춤형 행정지원으로 ‘청년농민 30만 명’ 양성

- 농업에 종사하는 청년은 매년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음. 농가 인구의 76%는 50대 이상의 중장년층, 그 중에서 65세 이상 고령층의 비중은 점점 높아지고 있음. 특히 청년 창업농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는 농지임. 청년농이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주체로 성장하려면 생산기반인

농지 마련, 문제 해결의 장 등 밑거름을 마련해야 함.

- 청년농민 30만 명 육성, 청년농민의 벗이 되는 행정으로 맞춤형 지원
 - 청년농민 정착지원금 일시 지원 3억 원
 - 3,000평 농지 무상임대 (신규 청년농부터 단계적 도입)

4. 자영업자 생계보호를 위해 코로나19 손실보상 100% 및 부채탕감

- ◎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자영업자들이 극심한 타격을 입음. 자영업자 손실보상법이 마련됐지만, 법 개정 전 피해는 보상에서 제외하고, 매출 기준 80%만 인정하는 등 실효성.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부담이 증가할 경우 파산할 가능성이 높은 자영업 고위험가구는 19만2천 가구, 가구당 부채는 3억5천만 원, 총부채 규모는 80조 원 가까이 됨. 정부의 코로나19 국채 발행 및 은행의 초과이익 환수로 자영업자 부채탕감을 실시해야 함.
- 자영업자 100% 손실보상 및 부채탕감
 - 손실보상법 개정. 현행 손실보상 80%를 100%로 조정. 필수고정비 반영하고, 손실보상 대상 확대
 - 코로나19 국채 발행 및 은행 초과이익 환수로 자영업자 부채탕감

5. 불법이 아니라 당당한 사회경제적 주체로 '노점상 생계보호특별법' 제정

- ◎ 노점상은 개인의 책임보다는 사회의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한 불가피한 생존 수단의 한 방편임. 단속을 통해서만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없으므로 비공식부분 실체로 인정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합리적 정책 전환이 필요.
- 노점상을 사회경제적 주체로 인정하는 '노점상 생계보호 특별법' 제정
 - 노점관리 대책, 노점상 가이드라인 등 단속과 감축 위주 노점정책을 폐기하고 노점상 생계보호 특별법 제정 및 노점상 관련 법률 정비
 - 당사자가 배제된 노점상 감축정책 노점상가이드라인 및 노점관리대책 중단
 - 도시 미관 재구성 위주의 전시행정사업 폐기. 다양한 상행위의 하나로 노점을 인정. 노점 생존권 보장

정책순위

4

일하는 청소년, 집 없는 청년, 모두를 위한 평등사회

정책분야 청년, 청소년(교육·인적자원)

1. 알바도 실업급여, 취업준비생 이직준비급여 받을 수 있도록 '청년고용보험'

- ◎ 저소득 청년일수록 이직이 잦을 수밖에 없음. 저임금에 미래를 찾기 어려운 직장이라면, 청년들은 이직 외에 다른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취업준비 환경보장
 - 졸업반 학생 고용보험제 도입
 - 고교 및 대학 졸업반 학생들 대상으로 국가가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함.
 - 졸업후 진학자 및 취업자는 지급대상 제외, 구직자의 경우 졸업 실업급여 지급됨.
 - 고용보험 개편으로 '청년이직급여' 신설
 - 이직준비급여 중 청년층(만 18세에서 만 34세까지)은 그 특성을 반영하여 횟수의 제한이 없는 '청년 이직준비급여'를 지급 (600일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

2. 청년주거문제 해결 '청년월세 10만원 상한제', 공공주택 '집사용권'

- ◎ 우리나라의 부채 잔액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주거 마련에 따른 부채 잔액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데, 그중 청년층이 65.1%로 가장 높음.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청년층과 그렇지 않은 청년층 사이의 양극화(자산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청년층부터 시작해 전국민으로 집사용권 확대를 불평등 격차 해소. '집'을 소유와 투기의 대상이 아닌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개념으로 패러다임 전환
 - '청년월세 10만원 상한제'
 - 무주택청년, 취업, 취업준비, 학업 등의 이유로 부모세대로부터 독립하여 거주하고자 하는 모든 청년. 공동거주를 희망하는 2인 이상의 청년을 대상으로 임대보증금 또는 전세보증금 이차지원, 월세지원을 통해 임대료 자부담 월1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지원
 - 공공임대주택 입주, 전세임대주택(공공기관이 건물주로부터 임대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
 - 집사용권 제도 도입
 - 양도, 증여, 매매가 불가(타인 거주 불가). 이를 어길 시 최소 10년간 사용권 정지
 - 주거면적 및 기타 환경 등을 이유로 개인이 주택을 별도로 매입하고 매입한 주거로 이

주할 경우 집사용권 상실

3.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노동보호 ‘청소년 노동보호법’ ‘고졸노동자 지원센터’

- ◎ 생계형 청소년 노동의 비율이 증가추세지만 고용 안정성이 낮음. 성인 못지않게 장시간 노동, 야간노동, 노동 재해, 임금체불이 비일비재함. 고졸노동자 또한 불안정 노동으로 고통 받고, 저임금·장시간 노동, 학력 차별에 시달림.
 - 청소년노동보호법 제정
 - 사용자가 청소년을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게 하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성과급 업무에 고용금지. 근로시간 제한(1일 7시간 주 35시간, 야간근로금지), 휴게보장, 건강검진의 조항을 두어 청소년의 건강과 안전 보장
 - 청소년이 노동과 동시에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적 책임 명시. 검정고시, 수능, 자격시험 등을 준비하는 청소년에게 10일 이내의 유급 교육휴가 부여하고, 비용은 국가가 부담
 - 고졸노동자 지원 센터 설립
 - 정보의 불평등을 막고 고졸노동자를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 아울러 산재나 부당노동행위 등을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
 - 7개 권역별 (서울청, 중부청, 부산청, 대구청, 광주청, 대전청, 제주도) 설립을 우선으로 지역 실정 고려해 산하 센터 설립.

4. 학생인권조례를 넘어 모두 청소년의 인권 보장을 위한 ‘청소년인권법’ 제정

- ◎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청소년 기본법’이 있지만 실질적인 권리에 대한 구체성이 부족하며, 기존의 법과 제도 안에서의 권리 실현만을 담고 있는 한계가 있음. 청소년인권법 제정으로 사각지대 없이 모든 청소년의 인권 보장
 - 청소년인권법 제정
 - 학습 시간 제한 및 자유롭게 쉴 권리 보장
 - 의사와 개성을 표현할 권리 보장 · 학교별 청소년 인권침해 규정 삭제 의무화

5. 청년의 정신건강 무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청년스트레스 센터’ 설립

- ◎ 최근 5년간 공황장애, 불안장애, 우울증 등 심리 불안증상으로 진료 받은 환자 증가율 1위가 모두 20대인 것으로 나타났음. 청년의 정신건강 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정신건강 증진 및 예방을 위한 정책을 강화함.
 - ‘청년스트레스센터’ 건립
 - 상담서비스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을 확대하고 상담, 치료를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 청

년에게 무상서비스 제공. 청년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청년의 네트워크 활동 지원

정책순위

5

부동산 투기공화국 해체하고 제2의 토지개혁 실현

정책분야 주거·부동산(산업자원·건설교통)

1. 토지공개념 3법(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 개발이익환수제) 전면 추진

- ◎ 헌법에 자산불평등 해소와 불로소득 환수를 분명히 하는 ‘토지공개념’을 명시하고 실질적으로 구현할 ‘토지 공개념 3법’을 추진
 - 택지소유상한제
 - 법인의 택지 소유 자체를 제한하고, 개인의 택지 소유에 상한선
 - 서울, 광역시의 경우 200평 이상 소유 금지(단, 5년 이상 실거주 경우 예외 300평)
 - 초과소유 택지는 공공이 매입하여 공공주택으로 제공
 - 토지초과이득세
 - 개인과 기업이 보유한 유희토지가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정상지가상승률을 초과하여 상승하는 경우 초과이익을 환수
 - 토지가격의 지역별 편차가 상이하여 ‘지방세’로 부활하고 1천만 원 이하는 30%, 1천만 원 초과는 50%를 탄력적으로 적용. 지방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
 - 개발이익환수제
 - 개발이익환수제를 제정 당시 수준인 50%까지 환수로 개정

2. 20평 1억대 30평 2억대 건설원가아파트 연간 10만호 공급

- ◎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공급
- ◎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이므로 건설원가대로 공급
 - 기본형 건축비를 기준으로 전국 어디서나 30평은 2억원대, 20평은 1억원대로 공급가능.
 - 건설원가 상시 공개로 건축비 거품을 제거하면, 평당(3.3㎡) 500만 원대로 품질 좋은 아파트를 공급 가능.
- ◎ 공공택지 민간매각 중단하고 건설원가아파트와 장기공공임대 100%
 -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 중단으로 원천적으로 토건세력과 부동산투기카르텔 근절
- ◎ 건설원가아파트 연간 10만호 공급

3. 고위공직자 1가구 1주택 의무화 및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 금지

- 집값 폭등으로 인한 서민 고통이 가중되고 있지만 정부 고위공직자 10명 중 7명이 재산증가 (부동산 가액변동에 따른 재산 증가가 32.2%) 1가구 3주택부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기용 주택일 가능성이 높음.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
 - 재산 공개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은 실수요 이외의 보유부동산을 백지 신탁하도록 법률을 제개정함.
 - 고위공직자부터 1가구 1주택 실현,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세 대폭 강화
 -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 금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보유세 관련 법개정

4. 주거안정을 위해 지역별 '장기공공임대주택 20% 의무화'

- 지역별 공공임대주택 비율 지정(20%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보 의무화)
 - 서울, 경기도, 광역시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20% 이상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함
 - 광역시도가 아닌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도 15~20%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의무비율 지정
- 자자체 등 공공기관 주택선매지역 지정을 통한 공공주택확보
- 공공임대주택 유형 단일화, 소득별 임대료차등제 조기도입

5. 임차인 보호 '평생계약갱신청구권제' 및 임대료 제한하는 '공정임대료' 도입

- 주택임대차보호법 재개정으로 모든 주거용 건물의 전월세 인상률 상시 규제하고 공정임대료, 평생 계약갱신청구권 제도 도입
 - 공정임대료 제도(최초 공정임대료 산정, 매년 도시별 인상률 상한제 실시)
 - 직접 거주하지 않는 모든 임대용 주택에 대해 등록과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개별주택 공시가격제도처럼 전월세 가격도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산정. 건물주가 마음대로 전월세 임대료를 인상하지 못하도록 함.
 - 지역별 공정임대료 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정임대료를 결정 고시함.
 - 전월세 평생계약갱신청구권제
 - 주택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세입자가 원할 경우에만 해지할 수 있도록 함.
 - 2년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 1회에만 허용된 계약갱신청구 권리는 회수 제한없이 허용
 - 모든 주거용 건물의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 모든 임대주택은 (재)계약시 해당기간 전월세 인상률 범위내에서만 전월세 가격을 정하도록 함.
 - 임대료 인상률은 전월세가격, 물가인상률, 소득증가 등 지역별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임대료산정위원회에서 결정함(시도 의회에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정책순위

6

기후위기, 지금이 아니면 안됩니다

정책분야 기후·에너지(보건의료·환경)

1. 탈석탄/탈원전/탈내연으로 205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

- 1.5도 온도목표 달성을 위해 석탄을 비롯한 화석연료와 결별해야 함. 지금까지의 에너지전환은 지역 주민의 희생을 바탕으로 진행됨. 수요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함에도 기업책임보다 재산권이 우선시됨.
 - 탈석탄/탈원전/탈내연으로 205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
 -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변동성 자원의 확대와 핵발전 퇴출 가속화
 - 국가 에너지수요가 감소세가 이뤄지도록 전력정책 재검토
 - 2050년 재생에너지 100% 국가로!
 - 공영화된 분산형 전력시스템으로의 전환에 따른 투자, 지원 및 행정적 대비

2. 2029년 석탄발전소 퇴출 및 2030년 온실가스 50% 감축 법제화

- 2029년 석탄발전소 퇴출과 모든 해외 화석연료 투자에 대한 중단 조치 시행하여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2017년 대비 70%로 상향

3. 신공항 건설중단 및 KTX-SRT철도 통합을 통해 '공항 대신 철도'로 기후위기 대응

- 수송부문은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의 주요 영역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탈석탄,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의 국가적 관리가 필요한 부분임. 철도의 경우 대부분 전력기반 시스템으로 대표적인 저탄소 배출 교통수단이며, 세계적으로도 철도중심 공공교통시스템 구축을 기후위기 대응의 주요 축으로 설정하고 있음. 항공은 시간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큰 운송수단으로 현재 교통 분야에서 차지하는 전체 온실가스량은 크지 않으나 항공이 확대될 경우 기후위기를 앞당기는 효과를 발생시킴.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부산 가덕 신공항,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새만금 신공항, 울릉도 공항, 백령도 공항, 제2 제주공항 등 6곳의 신공항 건설이 추진 중임.
 - 철도 전면화, 항공 최소화를 원칙으로 신공항 건설 재검토
 - KTX-SRT철도 통합을 통해 철도 전면화로 기후위기 대응
 - 철도 전면화, 항공 최소화를 원칙으로 남북철도 추진

4. 녹색성장이 아닌 노동중심 산업전환 ‘기후정의기본법’, ‘공동결정제도’ 도입

- 기후위기에 산업전환이 한국에서는 기후위기의 주범인 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을 위한 전환’으로 변질되고 있음. 이미 에너지 산업, 자동차 산업 등에서 고용의 변화가 시작되었지만 노동자는 완전히 배제됨. 자동차 산업의 경우 ‘노동없는 미래차 전환’에 따라 전기차, 자율주행, 수소차 등 구조전환이 시도됨. 이에 따라 특히 기존산업 부품업체의 줄도산과 지역사회 붕괴 위험까지 우려되는 상황. 에너지 산업 또한 정부가 나서 민간투자를 늘리며 석탄발전이 퇴출되는 자리에 시장기반의 민영화로 변질되고 있음. ‘탈탄소만 된다면 민간이든 재벌이든 괜찮고, 태양열 발전판을 설치하기 위해선 농지를 덮고 산림을 깎아도 좋다’는 매우 위험한 시각임. 이처럼 시장에 맡겨둔 에너지전환은 이미 독일 등에서 실패한 바 있음.
 - 에너지 공공성을 위한 민영발전서 공영화 및 ‘통합발전공기업’으로 민주적 공공소유 형태 전환.
 - 조세제도 개편으로 기업 규제 및 책임 강화
 - 기후위기에 따른 전환비용은 기업의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등 직접세 비율을 올리는 형태로 마련함.
 - 세수의 확용은 전환과정에 기후 취약계층(노동자, 농민, 지역주민 등) 보호, 공공인프라 구축 등에 활용
 - 노동 중심 산업전환을 위한 ‘기후정의기본법’ 제정 및 ‘공동결정제도’, ‘노조법 개정’ 등 법안 마련
 - 1.5도 제한, 기후정의 원칙에 부합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법제화
 - 모든 산업전환 과정에 노동자, 지역사회의 주도적 참여 보장. 일터에서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확립.
 - 노사 공동결정제도 도입을 통해 고용안정 대책, 직업훈련 지원, 공정거래 촉진 방안 등을 수립함. 사업장 단위에서도 노동자 희생 없는 산업전환 달성.
 - 노조법 개정을 통해 기업별로 대응할 수 없는 산업별, 업종별 협약을 실현함. 사용자 단체범위 확대, 교섭의제 확대, 국제기준 부합하는 파업권 보장,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폐기

정책순위

7

모두가 차별없이 함께하는 세상, 무상교육·무상의료·무상돌봄

정책분야 교육, 의료, 장애인(교육·인적자원)(보건의료·환경)

1. 장애인의 차별 없는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로드맵 실행과 장애인 이동권·노동권·교육권·건강권·주거권·정보통신권 전면보장

- ◎ 탈시설 로드맵은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선택을 통하여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가짐을 인정'하고, '지역사회로의 통합과 참여'가 가능하도록 보장
 - 모든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생활을 욕구 기반이 아닌 권리 기반으로, 즉 장애인이 기본 권으로 인정하고 단계적 시설폐지를 통한 자립 생활 권리보장.
 -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연령, 거주 시설형태 등과 관계없이 '비차별'원칙 수립
 - 장애인 이동권·노동권·교육권·건강권·주거권·정보통신권 전면보장

2. 대학무상교육 실현과 학자금 대출 부채 탕감

- ◎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68%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고, 취업에서도 대학 졸업을 기본으로 하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대학 무상교육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대다수의 대학생은 학자금 대출을 부채로 안고 사회로 진출. 임금의 대부분이 학자금과 월세로 지출되며 자립의 기반을 마련하지 못함.
 - '반값등록금' 먼저 실현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으로 재원 마련
 - 국공립대학부터 등록금 무상 도입으로 대학 등록금 전반적 인하 효과 기대
 - 학자금 대출 부채 탕감

3.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한 '영유아교육 국가책임제' 도입

- ◎ 현재 유아·보육 이원화체제 청산하고 영유아교육 체제로 전환 0세~2세를 위한 '영아학교'와 3~5세를 위한 '유아학교'로 전환하여 차별없는 유아교육으로 동일한 교육서비스제공
 - 0~5세 유아/보육을 교육부로 통합하고 완전무상교육 실현
 - 장애 영유아 의무 교육권 보장 ○ 유아교사 교권확보(공무직 전환)

4. 110만 돌봄노동자 국가직접고용 및 아동부터 노인까지 돌봄국가책임제 실현

- 코로나19는 돌봄 없이 이 사회가 유지될 수 없음을 확인. 코로나가 만든 ‘돌봄 공백’은 소득격차·학력 격차로 이어지며 사회 불평등의 원인이 됨. 돌봄의 문제를 개인이 아닌 국가가 책임지는 방식으로 해결
 - 돌봄노동의 가치 인정과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돌봄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권리보장 및 처우 개선에 기여를 위한 돌봄노동기본법 제정과 국가 직접고용 실현
 - 돌봄정책기본법 제정·돌봄노동자기본법 제정
 - 사회서비스원 직영 국공립사회복지시설 설립 및 확충
 - 생애주기에 맞게 아동부터 노인까지 돌봄국가책임제 실현
 - 온종일 돌봄체계확대 초등돌봄사각지대 해소
 - 국공립보육시설 50%확충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
 - 아동수당 만18세까지 확대
 - 20~40대 1인 가구 맞춤형 돌봄(긴급상황 호출서비스 확대, 주거지 중심 서비스 확대)
 - 노인 돌봄체계 강화(생계급여 수급 노인 전체에 기초연금 30만원 지급)

5. 공공병원 및 공공의료인력 확대와 전국민 주치의 제도 도입

- 우리나라 전체 병상 중 공공병상은 약 10% 정도에 불과, 턱없이 부족한 수준임. 공공병원 확대와 의료 인력을 확충으로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더불어 주치의제도 시행으로 의료 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도 국민들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
 - 70개 중진료권에 500병상 이상의 공공병원 확보
 - 공공의대 확충 및 교육비 보조 등을 통한 의사 인력 확충
 - 간호 인력 수급을 위한 간호사 임금과 근로 처우 개선
 - 출산휴가, 육아휴직으로 인한 상시적 결원인력을 정원으로 충원하는 모성정원제 실시
 - 보건의료인력 확충으로 ‘보호자 필요 없는 병원’ 전면 실시
 - 초등학생부터 전국민 주치의제도 도입으로 국민의 건강권의 체계적 관리

6. 동물권·채식권 전면 보장

- 그동안 동물에게 자행되었던 비윤리적 행위들을 줄여나가고 동물과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기후 위기와 감염병 위기에서 인간과 동물 모두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해야 함.
 - 반려동물과 반려인 모두를 위한 펫샵 폐지와 진료수가 표준화
 - 공장식 축산 모라토리엄 선언 및 동물복지형 축산으로 전환

정책순위

8

부자에게 세금을! 재벌해체로 경제민주화 실현

정책분야 경제·조세(재정·경제·복지)

1. 상위 0.1% 자산 100억 이상 자산가(슈퍼리치)에게 '부유세' 부과로 불평등 해소 재원 마련

- ◎ 자산불평등이 극심해진 상황에서 상위 0.1% 자산가에게 '부유세'를 부과하여 서민들의 교육 의료 등 재원으로 사용해야 함
 - 상위 0.1% 금융자산 100억 이상에게는 2%, 상위 0.01%인 금융자산 300억 이상은 3%를 부과하여 연간 46조 원 가량의 재원 확보
 - 확보된 재원은 대학무상교육(10조 3000억) 실현 및 살기 좋은 공공임대주택 및 20평 1억대 건설원가아파트 공급(22조), 돌봄노동자 적정임금으로 국가직접고용(3조), 공공병원 및 의료인력 확보 등 공공의료 강화(10조) 등 사회보장 강화

2. 고용위기 기간산업 국유화 및 산업은행 개혁

- ◎ 각국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 불평등 해소, 코로나19 등 사회.환경적으로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간산업을 국가가 관리 통제하는 것은 전략적 산업정책 목표를 추진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음. 이를 위해 산업은행은 기간산업 매각 전문이 아닌 공적통제와 관리를 제대로 하는 국가지주회사로 기능을 전환해야 함.
 - 기간산업을 소수의 재벌이 아닌 국가와 사회가 지배하는 산업구조로 질서 재편
 - 산업은행 구조조정 목적과 방식을 고용을 비롯한 공적 가치를 창출하는 구조조정으로 전환
 - 항공, 조선 등 고용위기 기간산업부터 국유화 실시
 - 산업은행의 목적과 업무에 '고용의 안정.촉진'을 규정
 - 산업은행의 구조조정 기준의 변경 : 고용중심의, 생산의 사회적, 공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기업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도록 구조조정의 목적과 방식 변경
 - 산업은행을 기간산업을 관리하는 국가지주회사로 전환, 국가지주회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방안 확립
 - 노동자, 지역 등 이해관계자 피해 방지를 위한 공동위원회 구성

3.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갑질 방지와 독점규제

-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서비스 확산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산업의 규모와 영향력이 급증함.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이용사업자와 소비자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 과정에서 불공정 경쟁, 수수료 부담 반영의 제품가격 인상, 소비자 분쟁 등 다양한 부작용과 갈등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플랫폼 생태계의 공정과 상생을 위해 새로운 경제환경에 맞는 거래질서 구축과 온라인 플랫폼 독점 및 갑질 문제 근절 대책이 필요함.
- 온라인 플랫폼 기업 독점규제법 제정
- 중개거래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
 - 일방적인 해지 등 부당 거래거절의 규제
 - 노출 순위 결정 기준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 이용사업자 관련 정보 접근권.데이터 독점 방지
 -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신속한 피해구제·분쟁해결 절차 도입
 - 이용사업자들의 단체구상권, 단체교섭권 부여

4 경제 양극화해소와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초과이익공유제’와 ‘납품단가 연동제’도입

-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와 불공정행위는 우리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대·중소기업 및 소속 노동자의 경제력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임. 재벌대기업 중심의 전속거래구조와 불공정행위는 4차 산업혁명과 다양한 산업의 융복합으로 인해 기존의 제조업 분야를 넘어 문화.예술.용역 하도급 등의 새로운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음.
- ‘초과이익공유제’ 도입과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 ‘초과이익공유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익공유제를 시행할 경우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함.
 - 원자재 가격 상승분 반영 ‘납품단가 연동제’
 - 중소기업.납품업체들의 집단교섭 보장 및 하도급법 개정

5. 재벌 사내유보금 사회적 환수

- IMF 외환위기 후 재벌에 대한 과세제도 폐지 시행된 2002년부터 기업 사내유보금이 급증하여 2019년 기준 30대 재벌 사내유보금은 957조에 이르게 됨. 같은 기간 가계소득 분배율이 8% 정도 감소한 반면, 기업소득분배율은 8% 증대함. 재벌 사내유보금은 비정규불안정 노동에 대한 이윤착취구조의 문제임.
- 재벌 사내유보금을 사회적으로 환수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환수된 사내유보금은 비정규직, 장애인고용, 최저임금인상 지원, 청년실업 해소 등 비정규 불안정 노동을 위한 ‘노동자기금’으로 적립

정책순위

9

국회의원 특권 폐지, 직접민주주의, 선거제도 개혁으로 정치개혁 실현

정책분야 정치(정치·행정·사업)

1. 국회의원 '수당 최저임금 3배 이하, 3선 연임 제한, 1가구 1주택 의무화'로 특권 폐지

- ◎ 국회의원의 특권영위로 인해 불신이 깊어지고 있음. 높은 보수는 국회를 불신하는 원인 중의 하나이며, 일하지 않고 꼬박꼬박 세비를 챙기거나 '셀프 인상'을 할 때마다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어온 바 적정한 국회의원 수당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할 시점임. 국회의원 또한 사조직과 파벌문제, 부정부패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므로 '국회의원 3선 연임 제한'을 도입하여 공직사회를 개혁하고자 함.
 - '최저임금 3배 이하'로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제2조)
 - 국회의원 3선 연임 제한 공직선거법 개정
 - 고위공직자 1가구 1주택 원칙 확립 및 투기 방지

2. 국민투표, 국민소환, 국민발안 3대 직접민주주의 제도 강화

- ◎ 국민이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투표 부의권' '국민발안제' '국민소환제도' 도입이 필요함.
 - 국민에게 '국민투표 부여권' 도입
 - 국회 과반이 찬성하거나 국민 10% 이상이 발의에 참여해 요구하는 경우 대통령은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국민이 법률 및 헌법을 발안하는 '국민발안제' 도입
 - 유권자 50만명 서명으로 개헌발안. 공고3개월 이내 국민투표 회부,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와 과반수 찬성 확정
 -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 지역구 국회의원 소환투표 발의는 지역구 선거권자 15% 이상 동의
 - 비례대표 국회의원 소환투표 발의는 전국 선거권자 수를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로 나눈 수의 15% 이상 동의

3. 위성정당 방지 추가한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및 재보선 원인 제공 정당 후보 공천 금지

- 지난 20대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나 ‘위성정당’으로 애초 취지가 붕괴되는 사태가 발생함. 본래 취지에 맞게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며, 위성정당 방지 조항을 추가하여 연동형 비례대표제 왜곡을 차단함.
 - 위성정당 방지 추가한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입
 - 국회의 의원정수를 400인으로 하되 비례대표와 지역구선출 국회의원의 비율을 1:1로 함. (제21조의 항 신설)
 - 비례대표 배분 방식은 연동형 100%를 적용한다.(제189조 개정) 현행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기준인 100분의 3이상을 폐지하고 의석수 배분을 1/N로 하도록 함.(제189조 개정)
 - 위성정당 방지 조항 추가
 - 지역구에 출마한 정당은 반드시 비례 명부를 제출하도록 의무화. 비례명부 미제출시 지역구 후보 등록은 불가하도록 함.(신설)

4. 광역의회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및 기초의회는 3~5인 중선거구로 확대

- 정당지지율에 비해 거대 양당이 의석수를 많이 가져가는 현상은 기초의회에서 마찬가지임. 현행 기초의원 선거에서 다양한 정치세력의 입성을 도모하기 위해 1개 지역구에서 2~4명을 뽑는 ‘중대선거제’를 실시하지만 애초 취지가 무력화되어 있는 상황임.
 - 현행 2~4인까지 뽑는 제도를 3~5인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로 개편
 - 기초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실시
 - 기초의원 비례대표 비중을 현행 13%에서 50%로 확대하고 의원정수 확대
 - 선거구 분할 허용 조항 폐지 및 ‘공직선거법’ 개정

5. 선거권 피선거권 16세 하향, 청년 기탁금 하향, 청년추천보조금 신설로 청년정치 참여 확대

- 청년·청소년의 정치참여를 전면적으로 보장해야 함. 현행은 연령이나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별로 기탁금을 정하고 있고, 당선, 사망 또는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반환하고 있음. 청년후보자의 기탁 금액을 하향하고 그 반환요건을 완화하고 공직선거에 청년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청년추천보조금을 배분함으로써 각 정당의 청년후보자 추천을 독려하고, 청년의 적극적 정치참여를 확대하고자 함.
 - 선거권 및 피선거권 연령 만 16세로 인하: 공직선거법 제15조(선거권), 제16조(피선거권) 개정, 헌법 제67조 개정
 - 정당가입 연령 제한 폐지: 정당법 제22조 개정
 - 청년후보자의 기탁금을 현행 금액의 50%로 하향함.

- 청년추천보조금 신설로 청년 정치참여 확대

정책순위

10

한반도 평화번영통일 시대

정책분야 평화통일(국방·통일·외교통상)

1. 한미연합훈련 중단 및 국가보안법 폐지

- 전쟁이 중단 된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모든 공격을 중지하고, 군사의 철군 및 기지의 철거가 동반되어 진행되어야 함. 한반도 긴장 고조의 하나의 원인이며 군사적 적대관계를 형성하는 한미연합훈련 중단이 필요함. 적대관계의 대표적인 반통일 법체계로는 국가보안법이 있으며, 현행 헌법 제3조(영토조항), 제4조(통일원칙) 등의 폐지 및 개정이 필요함.
 - 한미연합군사훈련 영구 중단
 - 주한미군 단계적 철수 계획 계획 발표
 - 전시작전통제권 즉시 환수
 - 사드 철거
 - 국가보안법 폐지

2. 정전협정 70년이 되는 2023년까지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으로 전환

- 아직까지 완전히 종결되지 않은 한국 전쟁의 완전한 종결을 선언하고 신뢰 회복과 화해를 기반으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이 필요함. 비정상적인 정전상태를 완전히 종식하고 한반도에 드리워져 있던 냉전과 분단구조를 깨끗이 걷어 내므로써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토대 마련
 - 정전협정 70년이 되는 2023년까지 종전선언 및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3. 9급 공무원 초봉 급여로 2024년까지 모병제 전환

-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인한 징집대상 부족 상황. 징집 군 복무인원을 27만 명 선으로 감축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2025년 8천명, 2039년 8만 7천명 부족 예상. 평화와 군축을 위해 모병제로 전환이 시급히 요구됨.
 - 20만 병력 감축 및 모병제 전면 전환
 - 상비병력 20만 명으로 단계적 감축(전체 인구의 0.4% 수준)
 - 2022~23년 징모혼합제 운영, 2024년 지원병제 전면 도입
 - 복무기간 12개월로 단축

- 9급 공무원 초봉 급여 책정
 - 고위급 장성 감축 군 구조의 개선
 - 2020년 병 인건비 2조원 대비 1.5배 수준으로 인상되나, 간부 인건비 감소분을 감안 하면 2020년 인건비 기준으로 30% 예산 감축 효과

4. 병력 20만으로 군축과 국방비 축소로 복지예산 확대

- ◎ 현재 한국의 국방분야는 과도한 군비와 과다한 병력, 불요불급한 해외 무기 구입 등 모든 분야의 개혁이 필요한 상황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남한의 선제적 군비축소로 남북 상호 군축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함.
 - 병력 20만으로 선제적 군축
 - 과도한 국방예산 동결과 축소로 복지 예산 확충
 - 해외 무기 도입 사업 중단
 - 비인도적 무기의 도입 및 개발 중단
 - 국방안보 전략 변화, 민간 국방장관 임명
 - GDP 대비 1.3% 군비축소, 인구대비 0.4% 병력규모

5.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전면 재개 및 우주분야까지 남북과학기술협력시대 개막

- ◎ 정치, 군사 분야는 분단 체제를 허물고 통일로 가는 길을 여는 것이라면, 경제 분야는 통일 국가의 물적 토대를 건설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남북 경협을 통한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 번영 추구. 우주 개발 영역은 최첨단 과학기술이 집약된 분야로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우주 과학을 국가중점과학 분야로 내세우고 있음. 북한은 독자 기술을 이용한 발사체 및 인공 위성 발사 성공. 북한은 2016년 제2차 '국가우주개발' 5개년 계획을 마무리 하면서 2020년 12월 '우주과학기술토론회-2020'을 통해 평화적 우주개발 정책 관철을 위한 사업에서 이룩된 과학기술 성과들을 소개하고 우주과학기술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동하기로 함. 남북과학기술협력으로 남북우주과학시대 개막 가능
 -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
 - 개성공단 진출 기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남북 정부의 제도적 보장
 - 동해안 남북 연계 관광특구 추진
 - '남북 경협 재개 - 남북 경협 재설정 - 남북 경협 전면화'의 3단계 추진
 - 남북 합동 우주 개발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조선우주협회' 공식 합동 프로젝트 진행

제20대 대통령선거 정당정책 모음집



통일한국당

통일한국당

No.	정 책
1	세계 5대 경제강국
2	강력한 안보와 동북아 평화시대
3	따뜻한 복지, 행복한 국민
4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나라
5	공정과 정의, 희망의 나라
6	성숙한 법치주의와 상식이 존중받는 나라
7	국민과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강국
8	세계인의 문화를 창조하는 글로벌 문화강국
9	국제사회를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국가
10	통일한국을 위한 준비된 나라

정책순위

1

세계 5대 경제강국

정책분야 재정, 경제

□ 목 표

- 일본을 추월하여 세계 5대 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 이행방법

- 자유와 창의를 기반으로 한 세계 일류기업의 육성
- 남북경제공동체 구축을 통한 동아시아의 통합 완성
- 과학기술 혁신과 친인류적 경제성장 전략 추구
- 세계 한민족 경제네트워크 구축
- 경제운용방식의 대전환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 균형 및 조화의 추구하고 경제적 약자의 보호
- 공정경제 시스템과 대기업의 책임 경영
- 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건전성 확보
- 항공우주 산업 육성 및 우주시대의 주도
- 1차산업 육성과 식량안보 강화

□ 이행기간

- 2022년 ~ 2026년

□ 재원조달방안 등

- 기존 예산 활용
- 일반 회계조정 등으로 마련
- 법률 및 제도 개선

정책순위

2

강력한 안보와 동북아 평화시대

정책분야 국방, 통일, 외교통상

□ 목 표

- 강력한 안보를 바탕으로 동북아 평화시대를 열겠습니다

□ 이행방법

- 한반도 비핵화와 힘의 우위를 통한 평화유지
- 스마트 기술로 무장한 스마트 강군 육성
- 견고한 한미동맹 유지 및 자주국방 능력 강화
- 동맹·우호국과의 안보협력 강화
- 방위산업의 효율화 및 안보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
- 군복무 개선 및 보훈책임의 강화
- 남·북한 대화 및 교류협력의 확대
- DMZ세계평화지역 선포 및 국제평화기구 창립
- 한반도 주변 국가와 평화협력을 위한 대화채널 구축
- 한반도 전쟁 종식 및 한반도 평화체제로 전환

□ 이행기간

- 2022년 ~ 2026년

□ 재원조달방안 등

- 기존 예산 활용
- 일반 회계조정 등으로 마련
- 법률 및 제도 개선

정책순위

3

따뜻한 복지, 행복한 국민

정책분야 복지

□ 목 표

- 따뜻한 복지로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이행방법

- 국민 생존권 보장을 국가의 의무로 명시
- 더 큰 자유와 복지,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 가족애 (家族愛) 증진을 통한 가족사회안전망 강화
- 아이는 웃고, 청년은 희망차고, 중년은 당당하며, 노인은 걱정없는 사회
- 지역·계층·세대·남녀 간의 갈등이 없는 사회
- 개방적인 이민정책과 다문화 사회 조성
- 자아 실현을 통해 행복을 추구하는 사회
- 100세 시대 맞춤형 정주안정을 통한 행복한 사회
- 이산가족의 슬픔을 공유하고 함께 치유하는 사회
-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행복한 생활

□ 이행기간

- 2022년 ~ 2026년

□ 재원조달방안 등

- 기존 예산 활용
- 일반 회계조정 등으로 마련
- 법률 및 제도 개선

정책순위

4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나라

정책분야 보건의료

□ 목 표

- 모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 이행방법

- 감염병 대응체계 확립 및 글로벌 협력 강화
- 편하게 숨 쉴 수 있는 공기
- 믿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
-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위생관리와 유통환경 조성
- 쓰레기 및 유해폐기물 관리 체계 수립
- 지속가능한 탄소중립시대 및 친환경 에너지·신기술 산업체제로 전환
- 재난·재해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 및 생활안전통합시스템 구축
- 핵, 범죄, 전쟁의 공포로부터 안전한 사회
- 질병의 공포로부터 안전한 사회
- 일자리 상실의 공포로부터 안전한 사회

□ 이행기간

- 2022년 ~ 2026년

□ 재원조달방안 등

- 기존 예산 활용
- 일반 회계조정 등으로 마련
- 법률 및 제도 개선

정책순위

5

공정과 정의, 희망의 나라

정책분야 정치, 행정, 사법

□ 목 표

-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 이행방법

-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평등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
- 솔선수범하는 공직사회 건설과 이해충돌의 방지
- 신뢰와 믿음을 통한 사회적 자본의 축적
- 공정과 정의를 통한 한마음 통합사회 실현
- 공공 부문의 투명화 및 효율성 제고
- 공정하고 정의로운 노동환경 조성
- 공정하고 정의로운 부와 권력의 이동
-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허용되지 않는 사회 실현
- 정치적 특혜가 없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실현

□ 이행기간

- 2022년 ~ 2026년

□ 자원조달방안 등

- 기존 예산 활용
- 일반 회계조정 등으로 마련
- 법률 및 제도 개선

정책순위

6

성숙한 법치주의와 상식이 존중받는 나라

정책분야 정치, 행정, 사법

□ 목 표

- 상식이 통하고 법치주의가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이행방법

- 법치에 앞서 상식이 통용되는 사회 실현
- 국민과의 소통 강화 및 상생의 시대 추진
- 주민자치권 강화와 주민자치의 시대 추진
- 국가권력의 독립성 보장과 실질적 법치주의 실현
- 국민의 요구와 시대에 부합하는 국회의 개혁
- 행정의 개혁으로 일 잘하는 정부 추진
-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 국민의 참정권 보장과 선거제도의 개혁
- 지방분권과 지방정부의 효율성 도모
- 디지털시대와 국가 법률시스템의 개선

□ 이행기간

- 2022 ~ 2026

□ 자원조달방안 등

- 기존 예산 활용
- 일반 회계조정 등으로 마련
- 법률 및 제도 개선

정책순위

7

국민과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강국

정책분야 교육, 인적 자원

□ 목 표

- 미래성장을 위해 지속가능한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 이행방법

- 국가발전의 근본토대인 지속가능한 교육시스템 완성
- 사교육 효과 및 공교육의 정상화
- 공평하고 투명한 대학입학제도 및 대학의 독립성 강화
- 교육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 공동체 실현
- 과학인재 및 글로벌 인재 양성
- 직업교육 시스템 강화 구축
- 교육현장의 자율성 강화 및 수요자 중심 교육 강화
-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교육 혁신
- 취약계층 맞춤형 교육안전망을 통한 교육정의 실현
- 글로벌 교육 경쟁력 강화 및 세계적인 교육강국 부상

□ 이행기간

- 2022년 ~ 2026년

□ 자원조달방안 등

- 기존 예산 활용
- 일반 회계조정 등으로 마련
- 법률 및 제도 개선

정책순위

8

세계인의 문화를 창조하는 글로벌 문화강국

정책분야 문화, 관광, 스포츠

□ 목 표

- 국민이 사랑하고 세계인이 향유하는 글로벌 문화강국이 되겠습니다 .

□ 이행방법

- 문화·체육·예술산업의 글로벌경쟁력 제고
- 창의적인 문화콘텐츠 육성 및 창작지원시스템 구축
- 국민생활 속에서 함께 성장하는 문화산업 육성
- 지속적인 문화산업 성장을 위한 전문가의 체계적 육성
- 문화 소비격차 해소 및 문화복지 확대
- 자생적인 문화·예술·체육의 생태환경 조성
- 문화·예술·체육인에 대한 지원 강화 및 복지 확대
- 문화예술체육단체의 자율성 보장 및 정부정책 참여 확대
- 남북 문화 교류 활성화 및 문화 동질성 회복
- 세계문화네트워크 구축 및 한류의 세계화

□ 이행기간

- 2022년 ~ 2026년

□ 자원조달방안 등

- 기존 예산 활용
- 일반 회계조정 등으로 마련
- 법률 및 제도 개선

정책순위

9

국제사회를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국가

정책분야 외교통상

□ 목 표

- 국제사회를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국가가 되겠습니다 .

□ 이행방법

-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
- 개도국에 대한 지원 및 국제개발협력 강화 → 세계 문화를 선도하는 인류문명 선도국으로 부상
- 비전통적 안보위기에 대한 선도적 대응 강화
- 국제개발협력과 국가전략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극대화
- 자유무역과 공정무역 확산
- 국제기구를 통한 선진 외교 활성화
- 공공외교를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
- 국제분쟁 및 평화에 대한 기여 확대
- 새로운 국제질서 수립과 한반도 통일시대 주도

□ 이행기간

- 2022년 ~ 2026년

□ 자원조달방안 등

- 기존 예산 활용
- 일반 회계조정 등으로 마련
- 법률 및 제도 개선

정책순위

10 통일한국을 위한 준비된 나라

정책분야 통일

□ 목 표

- 통일한국을 위해 준비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이행방법

- 통일한국을 위한 통일로드맵 완성 및 실천
- 통일한국을 대비한 법제도의 구축
- 통일한국을 위한 통일재원 확보
- 북한의 개혁개방 지원 및 북한주민과의 신뢰 개선
- 통일운동의 확산과 국론 대통합
- 한민족의 통일역량 강화와 한민족 네트워크 강화
- 탈이념 선언 및 중도실용의 정치 실천
- 남북한회담 정례화 및 남북한 신뢰 구축
- 아시아공동체 추진을 통한 통일한국 완성
- 통일한국을 위한 국제사회 공감대 확산

□ 이행기간

- 2022년 ~ 2026년

□ 자원조달방안 등

- 기존 예산 활용
- 일반 회계조정 등으로 마련
- 법률 및 제도 개선

제20대 대통령선거 정당정책 모음집



한류연합당

한류연합당

No.	정 책
1	한반도프로젝트
2	국가대변혁
3	미래를 선도하는 한류
4	미래를 준비하는 정치
5	국가진단위원회 구성
6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7	튼튼한 안보, 실리외교
8	요람에서 무덤까지, 희망을 주는 사회정책
9	예방 시스템 구축
10	새로운 100년, 새로운 세계를 준비하는 세계시민 양성

정책순위

1

한반도프로젝트

정책분야 경제, 통일, 외교통상, 문화

(1) [한반도프로젝트] 정의

- 한반도 비무장지대(DMZ)에 전 세계가 함께하는 세계문화예술도시를 건립하는 것입니다.

(2) [한반도 프로젝트] 구상

- 한반도 비무장지대 DMZ는 분열과 대립의 상징으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세계문화예술도시를 건립하여 상생과 화합을 위한 대공간으로 탈바꿈하게되면 대한민국의 미래와 세계평화, 인류 번영의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 38개국 주한외국대사관의 후원으로 개최되었던 '2007 세계명인 문화예술대축제'에서 [한반도 프로젝트]가 제안되었습니다. 주한외국대사 관관계자들은 한반도의 안정과 세계평화를 위해서 현실적이면서도 혁신적인 계획으로 평가하고 지지를 해주었습니다.

(3) [한반도 프로젝트] 진행

- 비무장지대에 세계문화예술도시를 건립하겠다는 합의가 담긴 남북 공동 성명을 발표해야 하며 실현을 위해 국제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 남북 열차 운행구간인 경의선과 동해선이 지나는 비무장지대에 세계문화예술도시가 건립되면 앞으로의 유라시아 대륙철도와 연결하게 됩니다.
- 태평양권 국가들이 우리나라 항구를 이용하여, 철도로 유라시아 대륙과 연결하게되니 우리나라가 세계물류의 중심국으로 도약하게 될 것입니다.
- 문화 활동을 통해 막대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되며, 지정학적 요충지인 한반도의 이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 문화예술촌은 세계 각 나라의 전통가옥으로 건축물을 조성하여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고, 대륙별, 국가별, 민족별로 서로 다른 문화를 이어온 전통이 한자리에 모여, 어울림의 미학으로 펼쳐지는 지구촌이 될 것입니다.

(4) 세계문화예술도시 구성

- 세계문화예술도시는 문화예술공간, 축제 공간, 학회 및 회의 등을 위한 공간, 관광 및 레저 공간으로 크게 4가지 범주로 구성할 것입니다.

(5) 세계문화예술도시 건립 효과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될 것입니다.
- 세계문화예술도시 운영기구가 실질적인 문화 UN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 한류의 지속 및 확산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 경제적 효과가 확대될 것입니다.
 - 세계문화산업의 발전으로 수출입 증대, 한류의 확산으로 한류와 연계한 수출입 증대
 - 남북이 서로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상호 협력하여 투자 유치 등 인적 물적 교류를 통해 경제성장 발전(유라시아 철도 이용으로 인한 시간, 운송비 절감효과 / 다량의 물류 수송 교역량 확대/ 항공, 해운 등 운송 산업 발전 / 지속적인 고용 창출 효과 / 통일에 필요한 제반 준비가 마련되어 통일비용 절감)

(6) 대한민국의 새 시대

- 한반도 프로젝트 실현으로 대한민국은 세계문화 중심국으로 도약 가능 또한, 정치적·경제적·외교적·문화적으로 『대한민국의 새 시대』 도래

(7) 차후 계획 - UN 유치

- 세계문화예술도시가 실질적인 문화 UN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면, 비무장지대에 UN 유치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에 UN이 이전하게 되면, 한반도는 전 세계 평화와 발전의 아이콘이 되고,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정책순위

2

국가대변혁

정책분야 정치, 행정, 재정, 경제

현재의 행정 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전국의 각 지역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1) 현재행정구역

대한민국의 행정체계는 특별시, 도, 광역시,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시, 군, 구 등으로 되어있다. 정부 수립 후 일부 개편이 있기는 했지만, 기본적인 형태를 유지하며 오늘에 이르렀다. 현재 우리가 직면하는 여러 문제 중 수도권 집중 현상은 주택·교통·교육·환경문제를 비롯한 여타의 문제를 유발하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전국의 시, 군의 규모가 서로 달라 지방이 균형적으로 발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2) 행정체계개편

전국의 행정체계를 대략 인구 150만~200만 규모로 나누어 전국의 시, 군을 재구성한다. 각 행정 단위는 단순히 인구수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시가 지역 경제발전을 통하여 경쟁력을 갖출 여건을 가지게 구성하며,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여러 형태의 특구를 선정하여 수출입을 위한 세제 혜택이나 다른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여,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유도한다.

(3) 각 도시구성 (자생, 자족하는 거점 경제도시)

새롭게 구성한 도시가 자생적 자립 성장을 하게 되면, 각 지역이 고르게 발전할 것이고 방만하게 운영되었던 불필요한 행정력을 없앨 수 있다.

식량안보 확보방안으로 농·축·수산업의 재정비 및 도약을 위한 체계를 갖추고, 제조업, 서비스업 등이 균형적으로 자리 잡게 한다.

도시가 활성화되고 인구 규모가 적절하게 구성되면, 의료·문화·교육시설 등이 자리잡게 되고 각 도시는 자생력을 갖게 될 것이다. 현재의 도시는 저출산 현상으로 인구가 경감, 고령화되어 생산 기능으로서 역할에 어려움이 많고, 대도시에서는 청년층이 스타트업을 시도하려 하여도 장벽이 너무 많아 중도 포기하거나 국내가 아닌 해외로 나가 창업을 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다.

청년층이 지방으로 귀환하여 농·축·수산업 분야에서 생산기술의 현대화를 시도할 때에는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진행 과정에 어려움이 생길 경우에는, 과감한 혜택을 보장해주어 안전하고 안정적인 먹거리 마련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한다.

각 지방 정부는 생산자와 연계하여 지역특산물의 판매 및 수출을 담당해주는 역할을 맡고, 연구소를 설립하여 미래지향적인 생산방안 연구를 지원하며, 지역학교에서는 산학협동조합을 꾸려 민·관·학이 함께하는 경제공동체를 마련한다.

제조업 분야에서 리쇼어링이 될 경우, 도시가 생산 기능을 갖게 되어 지역 경제성장에 활력을 줄 것이다. 이 경우에는 복귀비용을 최소화하고 정책적·기술적 지원 방향을 정하여 과감한 세제 혜택과 각종 규제를 완화하며, 또한 자금을 지원해 디지털 인프라 구축도 함께해서 제조업 선진화를 구축한다. 제조업의 성장으로 서비스업 등 지역의 경제가 순기능을 하게 되면 취업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며 행정 체계를 개편하게 되면 경기 부양책 효과가 있을 것이고, 그 결과로 출산과 보육, 교육에 희망을 갖는 사람들이 증가할 것이며 이는 곧 인구 증가의 효과를 가져와 미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경제성·경쟁력이 갖추어진 도시에는 인구가 적정선을 유지할 것이며, 부수적으로 교육 환경, 의료 환경, 문화 체육 환경 등이 마련될 것이고, 이는 인구 증가와 대도시 인구의 분산 효과도 가져올 것이다.

정책순위

3

미래를 선도하는 한류

정책분야 문화, 외교통상, 경제

- 한반도 프로젝트를 실현하여 세계문화예술도시를 건립하고 궁극적으로 UN 유치
- 문화외교를 통한 한류의 세계화(주한외국대사관과 연계한 다양한 문화사업)
- K-컬처와 디지털 인프라를 활성화하여 세계의 문화를 선도
- 경제·의료 등 여러 분야로의 한류 확대를 이루어 경제효과 극대화하도록 지원
-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 및 전통문화 계승 및 현대화·세계화 지속
- 문화 시설 건립하여, 문화를 통하여 건강한 일상 즐기기

‘한류’는 대한민국의 다른 이름이 되어 가는 중이다.

예술의 멋을 알고 해학으로 삶을 꾸려온 선조들의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 이후 ‘한강의 기적’이라는 압축 고도성장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세계로 인정받아 국가 위상은 높아졌으며, 이것은 ‘대한민국’이 브랜드가 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주었다. 그런데 경제성장이 가장 중요한 시기에서는 여타의 부분은 다음으로 미루거나, 불필요하다는 인식으로 사회의 여러 부문에 갈등의 요소를 내재시켜왔다.

미래 사회의 동력인 다양성·창의성은 사회가 유연할 때 자유롭게 발현될 수 있으며, 다음을 위한 도약의 토대가 될 것이다. 산업화를 이뤘던 우리의 동력을 이제는 정서적인 부분으로 확대하여 다양성과 창의성을 키워내는 사회가 되어야 하며, 이런 과정에서 응축된 힘은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기초가 될 수 있다.

문화강국 대한민국이 경제강국·외교강국·정치강국·의료강국으로 확산되어 진정한 한류를 이룰 것이며, 이런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국가브랜드로서 자리를 잡아 세계 중심국으로 우뚝 서게 되어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가 될 것이다.

정책순위

4

미래를 준비하는 정치

정책분야 정치, 행정, 사법

- 법률 개정위원회 구성(현실에 부합하는 법안 마련을 위해 일반 국민, 학계도 함께 참여하는 개정위원회 구성)
-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의원 수 조정,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특권 및 국회의원 선출 방안 재고, 국회의원 의정활동 보고 의무화
- 부패한 정치인, 공무원은 공직 불허하는 엄격한 윤리 기준 마련, 권력형 비리 공소시효 없앴.
- 지방자치제 개편, 지방선거 재고
- 국가 대변혁을 위한 행정구역 개편
- 진정한 선진국을 위한 정치체제 구축

정치는 국민으로부터 권리를 위임받아 행해지는 활동으로, 정치인은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국민의 권위를 인정하고 보호하는 마음이 우선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많은 정치인은 정치권력을 행사할 때 국가와 국민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기보다는 자신들의 부와 명예, 권력욕을 위할 때가 많았고, 또한 국민 위에 군림하는 봉건적인 모습도 많이 보였다. 국가와 국민을 향한 봉사의 자세를 갖추지 않고, 개인의 영달을 좇는 세력에게는 공직을 불허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재직하는 공직자가 기본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시에는 영구 제명하는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한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나라를 준비하며 미래를 설계해야 하는 이 시기에 필요한 공직자, 정치인은 혁신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의식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소신을 펼칠 수 있는 새로운 사람들이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시민의식, 정치의식 등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을 도입하고 적용하는 과정이 순탄하지 못하여 책임과 의무를 기본으로 하는 정치보다는 권위와 권력으로서의 정치가 자리 잡혀, 정치인들은 정권 유지·창출을 최우선으로 하고 반칙을 상식처럼 통용하여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되었다.

선거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정치, 정치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이다. 바른 정치인을 선출하고 바른 공직자를 임명하여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경제성장과 귀를 맞추는 정치체제를 갖추어서 미래 사회를 준비해야 한다.

정책순위

5

국가진단위원회 구성

정책분야 정치, 행정, 사법

오늘을 토대로 과거를 진단하여 미래를 준비한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현재까지의 성과와 과실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미래사회를 위한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해 국가진단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국가진단위원회는 정치적인 간섭을 받지 않는 독립기구로 운영되어야 하며, 지난 70여 년 성장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모든 조직의 실상을 대대적으로 조사하고 검토하여, 합리적이고 실리적인 조직 개편을 목적으로 한다.

조직과 운영시스템을 개편해야 업무에 임하는 사람들의 생각, 태도,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 과거의 폐단이 고스란히 있는 상태에서는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 업무가 도출될 수 없기에,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고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는 국가 전체를 진단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국가진단위원회는 ‘바로서는’ 대한민국을 위해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합의와 결단을 거쳐 바른 방향성을 제시할 것이며, 이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동력이 될 것이다.

정책순위

6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정책분야 행정, 경제, 사업자원

- 행정구역 개편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인구 분산 효과, 주택 문제 해결(지방거점경제도시)
- 중산층과 서민층, 1인 가구를 위한 주거 안정 정책
- 수도권외의 주택 공개념 도입으로 주택 문제 해결
- 제조업의 국내 복귀 지원 및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
- 농축수산업 활성화를 통한 식량 안보
- 조세정책 제고
- 주식시장 활성화
- 재취업이 가능한 직업교육시스템, 사회안전망 확충
- 자영업 준비를 위한 경제 교육 시스템 마련
- 청년 일자리, 스타트업을 위한 경제 교육 마련
- 제조업 혁신과 연구개발(R&D)을 강화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을 통한 경제발전지원

제2의 도약이 필요한 대한민국이다. 현재 중산층·서민층의 몰락 현상은 사회 불안요소가 되었고, 부의 편재 현상은 빈곤감과 박탈감으로 이어져, 희망적인 삶을 꾸려가기에는 어려운 현실이 되어버렸다. 중산층을 활성화하고 서민층을 안정화하며 저소득층을 줄여서 함께 잘사는 공정한 경제정책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경제성장과 발전이 가장 중요한 목표였던 시기를 지나, 우리는 궤도에 올랐다. 우리 민족이 가진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이룬 성과이지만, '나만 잘되면된다'는 식의 이기주의의 팽배로 경제적인 불평등은 날로 심화되고 사회적인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현실이다. 국가의 성장발전이 개인의 성장발전으로 이어지며, 개인의 성장발전은 공동체의 성장과 발전과 궤를 같이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경제성장에는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주거 안정 정책이 최우선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재산 증식의 수단, 투기의 대상으로서의 주택이 아니라 생활 터전의 개념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방안이 마련됨과 동시에 서민층, 1인 가구를 위한 주택공급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부동산 정책의 시험장처럼 되어버린 지난 몇 년은 오히려 서민의 삶을 힘들게 하였고 사회 불안요소가 되어버렸다. 국가 대변혁을 통한 인구의 분산과 주거 안정화 정책을 실현하고, 한편으로는 정부, 지자체가 공공의 토지를 마련하여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이 임대주택은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는 장치를 마련하여 주거 불안정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게 한다.

기업 분야에서는 개인과 기업의 실패가 또 다른 도전을 위한 경험이 되도록 경제적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고,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창업교육을 통해 스타트업을 위한 재기의 장을 마련해 준다. 제도적으로는 법률개정위원회를 통해 현실에 맞지 않고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규제하는 구시대적인 법률을 신속히 개정하여 해외로 나간 제조업이 국내로 복귀할 수 있게 하고, 국내에서는 적극적으로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또 한편으로는 기후위기, 탈세계화의 현상 등으로 발생할 식량의 문제를 대비하여 농축수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각 지자체와 지역학교는 생산자와 협업하여 생산과 수출을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는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준비를 하여 현재의 실업 문제를 해결할뿐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이후 도래할 일자리 규모와운영 등 다방면으로 연구하여 사회경제적인 대비를 해야 한다.

정책순위

7

튼튼한 안보, 실리외교

정책분야 국방, 통일, 외교통상

- 지정학적 가치를 이용한 실리외교, 동양과 서양의 중심에서 핫포인트 외교
- 한반도 프로젝트 실현으로 세계의 중심 역할
- 공공문화 외교를 통한 외교 지평 넓히기(국제적인 공공문화 외교 행사 개최)
- 한미동맹 체제를 기반으로 튼튼한 안보 구축 및 경제적 동반 파트너 역할

대한민국의 분단은 냉전체제의 결과물로서, 우리가 자발적·자립적 성장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고, 분단으로 인한 사회적·정치적인 이슈들은 갈등의 요소로 작용하여 자유로운 성장에 어려움이 많았다. 현재의 신냉전체제 속에서 우리는 지난 경험을 바탕으로 외교적인 역량을 발휘하여 실리적인 방향으로 우리의 입지를 구축해야 한다.

우리를 지켜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주체적 외교와 실리적 외교 사이의 간극을 잘 파악하여 유능하고 실질적인 이익을 얻어낼 수 있는 외교 전술을 펼쳐야 한다. 우리의 지정학적인 가치를 잘 이용하고 국제질서의 흐름에 함께하며 실질적인 이익을 획득하는 외교력을 발휘하며, 군사적 안보역량이 경제·외교역량과 직결함을 알아 한미동맹을 강화하여 우리의 안전과 행복을 확보해야 한다.

정책순위

8

요람에서 무덤까지, 희망을 주는 사회정책

정책분야 경제, 복지, 인적자원

- 저소득층 해소, 중산층 활성화, 서민층 안정화
- 자살 없는 나라(자살률 낮추기)
- 세대 간의 서로 다른 가치관 이해하기
- 결혼·출산·보육의 공공성 확대, 경력단절 여성 취업 기회 확대 의무화
- 1인 가구의 안정된 삶
- 체계적인 돌봄 공동체
 - 영유아 보호 정책
 - 보호받는 아동, 교육 복지 정책
 - 노후가 보장되는 삶(국가적 차원의 요양 시설 운영)
- 공공 의료의 확대
- 장애가 불편하지 않은 삶

앞만 보고 질주한 ‘한강의 기적’은 획기적인 국가 경제성장을 이루어 내어, 현재 GDP 10위(2021년 기준)에 이르러 국가는 부강해지고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서게 되었다. 이제 21세기 미래의 100년을 준비하는 우리는 성장의 긴 과정에서 도외시 되었던 사회적인 여러 측면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차례이다.

경제성장과 마찬가지로 시민의식, 시민의 의무, 정치의식, 정치인의 의무 등 시민이 갖추어야 할 부분도 단기간에 이루어져 미성숙한 부분도 많고,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적인 상황으로 발생한 세대 간의 차이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여 갈등 요소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피해의식에 의한 보상심리가 작용하여 ‘나와 내가 속한 집단’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이 채택되기도 하였다.

공동체 의식과 나눔의 철학이 부재한 상태에서 초기득권세력과 저소득층 간의 경제적 양극화는 점점 심화되어 갈등의 요소가 되고 있다.

경제적 불안정은 남녀 간의 갈등으로 확산되기도 하고, 사회 공동체 의식의 결여는 결혼과 출산과 보육을 회피하는 선택을 하게끔 하였고, 유연하지 않은 사회의식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도 만들기도 한다.

성장과 복지는 시소처럼 균형을 갖추어야 한다. 기본적인 복지 정책이 개인의 생활에 무기력함을 주어서는 안 되지만, 개개인이 감당할 수 없을 상태가 지속되면 오히려 사회적 비용 지출이 더 많아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사회의 일원으로서 건강하고 진취적인 삶을 준비하도록 교육과 재교육의 장을 마련하면서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세밀하고 촘촘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책순위

9

예방 시스템 구축

정책분야 보건의료, 교육, 기타

재난과 재해, 질병과 범죄로부터 안전한 삶을 마련하다.

- ◎ 일상을 안전하게, 폭력(가정, 성, 학교, 직장)으로부터 안전한 삶
- 소통창구, 공간을 마련하여 공동체 의식 되살리기
- ◎ 팬데믹을 대비하는 체계적인 의료 시스템
- ◎ 디지털 범죄로부터 안전한 삶
- ◎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 사회 대비한 의료 시스템 구축
- ◎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
- ◎ 재난 대응 및 사고 예방에 대한 교육 강화 및 체계적인 복구 시스템

재난과 재해, 질병과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못한 일상이다.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일회성 정책을 마련하고 보상책 논의 중에 여론이 잦아들면 해결책이 미뤄지는 기존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재난과 재해, 질병과 범죄에 관한 체계적인 예방 시스템을 구축해서 안전한 일상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

모든 사고와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는 관리와 예방을 함께 관리하는 예방 체계를 갖추고, 정기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을 마련해야 한다.

각 분야의 현장 전문가 중심으로 예방과 조직을 재정비하고 위기를 대비하는 중앙의 컨트롤타워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정책순위

10

새로운 100년, 새로운 세계를 준비하는 세계시민 양성

정책분야 교육, 인적자원

- 인성교육 강화
- 대학교육 무상화 추진(철학과 인문적인 소양을 갖춘 세계시민 양성)
- 인구감소로 인한 대학교 특화 정책
- 시민교육으로서의 보편적인 교육과 인재 양성을 위한 특별교육 병행
- 100세 인생을 준비하는 교육(인생의 후반을 준비하는 교육)
-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과 대학의 산학 협동 체계 확산


급속한 산업화 과정은 학업 성취도를 높이는 교육을 우선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점수화되지 않는 인성교육은 도외시되는 측면이 많았고, 교육은 좋은 대학교 진학, 좋은 직장 취직, 좋은 집 장만 등의 수단으로 이해되었으며, 인성교육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 의식 및 다양성 함양은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저절로 갖춰지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산업 경쟁력에서 중요치 않은 요소로 여겨졌었다.

4차 산업혁명에서 경쟁력을 갖춘 인재는 융합과 상호 소통, 공감 등의 사회적인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미래를 위한 준비는 인성교육 강화에서 시작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인재양성을 위한 수월성 교육이 한편에서 진행되고, 또 한편에서는 평범한 사회의 일원을 위한 보편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교육의 목표는 대학 진학이 아니라, 다양한 삶을 위한 소양 교육, 세계시민 교육이 기본이 되어야 하며,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광범위한 교육을 준비해야 한다. 인생의 후반인 60대 이후의 삶은 단순히 의식주 및 의료지원을 위한 준비만으로는 부족하다. 인생 제2막을 즐겁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다양한 여가생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교육하여 사회 일원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게 한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정당정책 모음집

2022년 8월

발 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당과)
경기도 과천시 홍춘말로 44(중앙동 2-3)
(02) 3294-8361

편집·인쇄 마음이다 (02) 2272-1977

〈비매품〉